

2017년 제17권 제3호

노동정책연구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연구논문

-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 :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 |박미희|
-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조선주·민현주|
- 경제정책이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박문수·이경희·김종호|
-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및 고용성과 비교연구 |남재욱|
-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전개와 시사점 |박선영|

노동정책연구

2017년 제17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 편집위원 ＝

위원장 :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위 원 : 김현중(한국노동연구원)

김우영(공주대학교)

문무기(경북대학교)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서정희(군산대학교)

이경희(한국노동연구원)

정의룡(한국교통대학교)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김찬중(충북대학교)

류성민(경기대학교)

박은정(인제대학교)

안태현(서강대학교)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본 학술지에 발표되는 논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노동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기고에 대한 문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한국노동연구원 이승주 연구원

전화 : (044) 287-6081

FAX : (044) 287-6089

이메일 : jlp@kli.re.kr

노동정책연구(제17권 제3호)

편집 : 노동정책연구 편집위원회 / 발행 : 한국노동연구원 / 발행인 : 김승택 원장직무대행 /
편집인 : 허재준 / 인쇄인 : 도서출판 창보 김덕영 / 발행일 : 2017년 9월 30일 / 등록일 : 2001년 7월 2일 /
등록번호 : 세종바00011 / 주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전화 : (044) 287-6081 Fax : (044) 287-6089 / 인터넷 : www.kli.re.kr

연구 논문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 박미희	1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조선주 · 민현주	45
경제정책이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박문수 · 이경희 · 김종호	77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및 고용성과 비교연구 남재욱	113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전개와 시사점 박선영	155

노동정책연구
2017. 제17권 제3호 pp.1~44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 :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

박 미 희**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의 탈산업화라는 고용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이 청년의 니트(NEET) 확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자료로 다수 국가의 다시점 미시자료를 결합한 다수준 선형확률모형(multilevel linear probability model)을 분석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다수준 분석에 포함된 최종 분석대상은 니트 판별이 가능한 OECD 22개국의 81개 데이터셋(1995~2010년경)에 포함된 331,611명이다. 분석 결과, 제조업 고용비중의 1%p 하락은 청년의 니트 확률을 0.61%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노동시장·복지제도는 직접적으로 청년니트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정책은 제조업 고용비중의 영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제도의 선별성이 높을수록,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을수록, 적극적 노동시장 비중과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가 높을수록 고용구조 변화의 부적 영향력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직업교육 중심성이 높을수록,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을수록 고용구조 변화가 니트 확률을 높이는 것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한국사회에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핵심용어 : 청년니트, 청년무업자, 다수준 모형, 선형확률모형, 조절효과, NEET

논문접수일: 2017년 6월 24일, 심사위원회일: 2017년 7월 5일, 심사완료일: 2017년 8월 21일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2017.2), 『OECD 국가의 청년NEET 결정요인 연구』의 일부를 학술지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2017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책임연구원(parkmh1978@gmail.com)

I. 머리말 : 문제 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을 마친 청년이 고용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소위 ‘무업’의 상태(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 NEET)에 놓이게 된 원인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용의 탈산업화라는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니트의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니트(NEET)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개념이 노동시장 참여를 보여주는 전통적인 지표인 실업률과 고용률보다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을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과 고용률은 개념상의 한계로 인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금재호 외, 2007; 채창균 외, 2008; 황수경, 2010). 이로 인해 2000년대 중반 이후 OECD와 유럽연합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니트 지표가 대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Eurofound, 2012). 니트는 청년실업자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남겨지는 취업준비생, 구직포기 청년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업자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또한 니트 개념은 사회의 중요한 하위체계인 교육·고용·복지체계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취약청년을 광범위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유용하다.

이와 같은 니트 개념의 유용성으로 인해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니트의 특성과 현황과악, 니트 결정요인과 탈출요인, 니트 경험의 파급효과,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된 분야는 니트의 특성 및 현황과악과 결정요인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면 으레 취업을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반해 학업을 마치고도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 증가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니트 상태에 있으며 그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청년들이 왜

1) 문자상으로는 훈련체계이지만 이것이 주로 활성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복지체계라고 할 수 있다(Tamesberger et al., 2014: 222).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제기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특히 청년이 니트 상태가 되는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에 해당한다. 원인에 대한 탐구는 이후의 해결책과 정책대안 마련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니트 결정요인 연구는 개인차원의 위험요인을 찾고자 한 미시연구와 제도측면에 초점을 맞춰 국가 간 니트 비율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 거시연구로 대별된다. 니트 결정요인 연구는 거의 대부분 전자, 즉 개인차원에서 분석되었으며 그 원인을 개인의 인적특성, 가구요인, 성장배경에서 찾고 있다(Kelly and McGuinness, 2013; Genda, 2007; Tamesberger et al., 2014; 나승호 외, 2013; 남재량, 2006; 채창균 외, 2008). 즉 ‘누가’, ‘어떤 특성을 가진 청년이’ 니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 위험요인(risk factor)²⁾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청년이 니트 상태가 된 것을 ‘개인이 갖는 문제’, 즉 개인의 ‘결함’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Furlong, 2006; MacDonald, 2011; 신희경 외, 2014). 이들 연구는 니트의 증가가 사회문제라는 인식에서 시작했지만 사회구조적 요인과 구조적 맥락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구조적 차원의 요인을 파악하려는 소수의 연구도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국가 간 니트 비율의 차이에 주목하여 제도의 영향력을 밝히거나, 총량적 수준에서 니트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Bruno et al., 2014; Carcillo et al., 2015; Eurofound, 2012; Tamesberger et al., 2014; 나승호 외, 2013; 채창균 외, 2008; 최용환, 2015). 그러나 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청년 개인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즉 총량적 수준에서 국가 간 니트 비율의 차이를 확인한 것이지, 청년의 니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것은 아닌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개인의 활동 상태와 사회구조적 제약과의 관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여 청년들이 니트 상태에 놓이게 되는 원인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했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극

2) 이러한 요인으로서는 초기 교육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출신가구배경, 10대 임신과 한부모여부, 특수교육필요여부 또는 학업부진여부, 건강상의 문제, 범죄 연루여부, 동기부족, 낮은 학력, 기술부족, 훈련부족 등이 언급되고 있다(Robson et al., 2008).

복하기 위해 개인의 니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개인의 니트 상태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 이유는, 청년의 니트 상태가 개인의 선택과 행위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한 선택과 행위는 구조적·제도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Müller and Gangl, 2003).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청년의 니트 상태를 결정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고용의 탈산업화라는 고용구조의 변화와,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노동시장·복지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청년 노동시장의 붕괴(혹은 침체) 또는 청년 노동수요 감소의 영향력을 직접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성인 실업률이나 GDP 성장률의 영향력만이 다수 확인되었을 뿐이다(Blanchflower and Freeman, 2000; Eurofound, 2012; 최용환,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 노동시장 붕괴를 초래한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고용의 탈산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용구조 변화의 영향력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고용의 탈산업화라는 고용구조 변화가 청년의 니트 확률을 높이는가? 둘째, 교육·노동시장·복지제도가 청년의 니트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고용구조 변화가 청년의 니트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정책 및 제도가 조절하는가?

II.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탐구

1. 청년 노동시장의 붕괴 : 고용의 탈산업화

Blanchflower and Freeman(2000: 3)은 청년 인구규모의 감소와 같은 청년에게 호의적인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래로 청년 노동시장 상황이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청년 노동

시장의 붕괴원인으로 청년 노동에 대한 수요감소를 지적했다. 실제 청년 노동 수요의 감소는 비주기적 외생변수를 고려했을 때 80년대 이후 약 28.7%에 달하고, 그 크기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상쇄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Christopoulou and Ryan, 2009: 86). ‘청년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방법은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Bell and Blanchflower, 2011: 241)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청년의 노동시장문제는 노동수요 감소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노동수요는 왜 감소하는가? 청년 노동시장 붕괴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자들은 1980년대 이래 일어났던 경제영역에서의 변화, 즉 생산력과 생산방식에서의 변화를 이론화한 탈산업이론(post-industrial theory)에 주목한다(Christopoulou and Ryan, 2009; Furlong and Cartmel, 2006). 탈산업사회론의 대표적 논자인 다니엘 벨은 탈산업화의 대표적이며 가장 단순한 특징으로 다수의 노동인구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을 들고 있다(김원동, 2009: 87). 벨은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를 기술발전에만 따른 생산성 향상논리로 설명한다.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감소한 농업인구가 제조업부문으로 이동했고, 다시 제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제조업에서 방출된 노동인구가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다(김원동, 2009: 109~110). 탈산업사회론의 또 다른 논자인 Kumar(2005: 34~35)는 제3차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혁명에 의해 상품생산의 산업사회가 정보사회와 서비스사회로 이동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구조도 바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 외 소득증대, 인구구조 변화, 여성 경제활동참여 등에 의해 추동된 수요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구조도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이 개도국으로 쉽게 이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국 내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오완근, 2011: 2~3). 고용구조의 변화를 추동한 원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탈산업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고용구조의 변화를 논하는 것은 일치한다.

이처럼 고용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하면서 청년 노동시장도 직격타를 맞았다. 즉 과거에 제조업이 수용했던 대규모 미숙련 청년인구가 갈 곳을 잃었다는 것이다. 실제 제조업부문의 고용 감소는 1970년대 후반 이래 관측되기 시

작했고(Corcoran and Matsudaira, 2009), 시기를 일치하여 청년실업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황금기’의 완전고용시대에 제조업이 대규모의 미숙련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숙련 노동자를 보완하는 대규모의 반숙련·미숙련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통제의 목적으로 노동을 단순 반복적이고 파편화된 작업으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숙련정도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Mishra, 2002).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학교 졸업 후 제조업 공장이 아니라 호텔 및 음식업, 소도매업 및 수리업종과 같은 서비스업으로 이동한다(Blanchflower and Freeman, 2000: 47). 서비스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생산성 향상 속도가 낮고 고용증가 효과도 작기 때문에, 서비스부문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실업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고 일반적으로 예측된다(Baumol et al., 1985; Iversen and Wren, 1998). 또한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임금과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Kagan et al., 2005). 결국 서비스업이 청년들의 주력업종이 됨으로써 청년실업과 일자리 불안정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탈산업화는 청년의 노동시장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론적 논의는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다. Blanchflower and Freeman(2000)은 1985~1994년 동안 OECD 14개 회원국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변화가 청년고용에 오히려 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하였다. 청년집중산업인 서비스업이 하락산업이라면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당연하겠지만, 청년집중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청년고용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³⁾ 이는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

3)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가 청년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 Blanchflower and Freeman(2000)은 먼저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를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산업별 고용에서 20~24세의 인구비율을 구하고, 그것에 해당 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다음, 인구변화로 조정하였다. 저자들은 이를 청년집중지수(Youth intensive industry index)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고용의 산업구성(Industry mix of employment)에서의 변화가 실제 청년인구의 고용감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산업구성 변화는 벨기에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에서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적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서비스업으로의 고용구조 변화가 청년 고용의 질은 악화시킬지언정 고용총량에 부적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Blanchflower and Freeman(2000)의 분석 결과는 청년 노동시장 악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Blanchflower and Freeman(2000: 55)은 실업률의 영향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즉 그들은 고용구조가 청년에게 호의적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전체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년 노동시장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까지 전체 실업률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청년 노동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상은 설명하지 못한다. 저자들의 분석시기가 90년대 중반까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체 실업률로 청년 노동시장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전체 실업률 또한 구조적·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어야 할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구조 변화와 함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구조적 요인(대표적으로 사회정책)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사회정책 및 제도의 역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주목받기 시작한 제도는 교육·노동시장·복지제도이다(Blossfeld et al., 2006). 교육제도는 교육의 신호기능과 노동시장과의 연계측면에서, 노동시장제도는 노동시장 자체의 진입장벽과 외부자인 청년에게 호의적이고 개방적인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실업자 보호제도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복지급여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

가. 교육제도

교육제도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Zimmermann et al., 2013: 20). 그 이유는 개인이 취득한 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생산성에 대한 일종의 ‘신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신호가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며 구체적인가, 즉 이 신호를 얼마나 신뢰할 만 한가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신호의 신뢰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교육제도의 선별성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자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별하기 어려운 ‘선별의 문제(screening problem)’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개인의 생산성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이 취득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이다(Müller and Gangl, 2003: 10~14). 그러나 개인이 취득한 학력은 교육제도의 선별성 정도에 따라 고용주에게 다른 신호를 제공한다. 의무교육기간 동안 상당히 표준적이고 포괄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제도는 비선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Walther, 2006: 126~129). 이 경우 청년들은 자신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더 높은 교육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는 고등교육이 팽창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교육체계의 비선별성에 의해 고등교육이 팽창하면, 대졸 학력의 신호기능도 교란된다. 대학졸업자가 적은 국가, 즉 선별성이 높은 경우 대졸학력은 높은 생산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별성이 낮은 국가, 즉 대졸학력자가 많은 경우 대졸학력은 유능한 인재라는 신호를 고용주에게 주기 어렵게 된다. 이처럼 교육제도의 선별성은 교육의 신호기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둘째, 교육체계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교육체계가 일반 교육 중심인지 직업교육 중심인지에 따라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교육체계를 통해 구체적이고 특화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Breen, 2005: 126). 만약 교육체계를 통해 취업 후 바로 적용 가능한 특화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청년 신규채용으로 발생하게 될 훈련비용을 줄일 수 있다(Van der Velden and Wolbers, 2003: 192).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직업교육 중심일수록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직업교육 중심의 교육체계는 오히려 저학력자의 노동시장 진입에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 학력이 제공하는 신호가 명확하기 때문에 저학력자의 경우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다(de Lange et al., 2013: 204~209).

셋째, 교육제도와 노동시장과의 연계에 관한 것이다(Van der Velden and Wolbers, 2003: 192). 교육체계가 직업교육 중심일지라도, 그것이 학교기반으로 이루어지는지 혹은 학교와 직장에서 이중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 학교위주보다는 노동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직업교육의 이원화체계(dual system)가 직업경력 초기에 실업감소, 일자리 매칭증가, 불안정성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Breen, 2005; Müller and Gangl, 2003; Shavit and Müller, 1998). 이원화체계는 훈련체계가 현재의 노동수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되는데, 이러한 공식적인 조정은 교육자력의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두 체계 간의 활발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직비용과 훈련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즉 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접 일을 시켜봄으로써 선별(screening)기회를 가질 수 있고, 청년은 해당 기업에 ‘이미 한 발 들여놓은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Shavit and Müller, 1998). 그러나 이러한 이원화체계는 노동수요측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제조업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나. 노동시장제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은 기존 노동시장이 청년들을 흡수하는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노동시장이 청년에게 얼마나 개방적인지, 청년들을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공평하게 대우하는지에 따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달라진다. 즉 ‘진입장벽’으로서 노동시장제도가 얼마나 견고한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조합주의 관련 제도와 고용보호제도이다.

분절노동시장이론에 기초한 내부자-외부자 이론에 따르면, 청년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존재로서 대표적인 노동시장의 외부자이다.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인 내부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조직화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내부자의 결속이 강할수록 외부자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힘들게 된다(Brzinsky-Fay, 2013: 216; Lindbeck and Snower, 1989).⁴⁾

4) 일반적으로 내부자는 자기의 고용이 보장되는 선에서 최고의 임금을 받고자 하고, 이 과

즉 내부자를 대변하는 노조의 힘이 강하고 결속이 강할수록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단체협상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Bassinini and Duval, 2006: 91; Korenman and Neumark, 2000). 단체협상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이 구조에 따라 노조의 임금인상 유인도와 임금결정의 유연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내부자의 힘과 임금결정 구조에 따라 외부자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외부자인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제도는 바로 고용보호제도(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고용보호는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고용률을 낮추는 등 부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tola et al., 2007; Jimeno and Rodriguez-Palenzuela, 2002; Breen, 2005). 고용보호제도가 고용과 실업에의 유입과 유출을 방해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회전률을 떨어뜨리는데, 결국 이것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호제도가 청년에게 미친 영향은 실증적으로 불분명하다. Noelke(2011)에 따르면, 고용보호제도가 청년에게 미치는 부정 효과를 뒷받침한 연구들은 내생성의 문제와 반복측정 자료에서 나타나는 시계열적 상관(serial correlation)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즉 고용보호제도와 청년실업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분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고용보호제도와 청년실업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둘 간의 인과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그는 기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것이 청년의 실업위험 감소나 고용기회 증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 복지제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회정책 및 제도는 실업자 보호제도로써 복지제도이다. 실업자 보호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실업자의 소득을

정에서 외부자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내부자의 임금상승에 따라 노동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고용주는 이를 외부자들의 고용감소로 대체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Van der Velden and Wolbers, 2003: 188).

보장하기 위한 전통적인 현금급여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장지연 외, 2011: 88).⁵⁾

먼저 실업 관련 현금급여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관대한 복지급여가 실업자의 근로의욕을 줄이고 복지에 의존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실업을 양산시키고 지속시킨다는 주장은 상당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업급여와 실업의 정적 관계는 유동성제약 완화효과, 자산효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전병유 외, 2014).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근로유인이 발생한다는 자격효과(entitlement effect)가 대표적이다. 또한 실업의 사회적·심리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사회적 낙인)나 오점효과(scarring effect)를 고려하면, 시장소득보다 낮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업을 지속시키려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Howell and Rehm, 2009).

실업급여의 관대성이 청년에게 미친 영향은 불확실하다. 청년의 경우 실업의 오점효과가 노동생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이므로, 당장의 실업급여를 위해 취업을 선택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가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청년이 실업급여라는 금전적 혜택을 받기 위해, 사회관계의 기초가 되는 취업을 선택하지 않을 유인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과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과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업급여의 자격조건이 관대하고 급여수준이 높으면 노동 대신 복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실업급여가 청년에게 미친 영향이 상반될 수 있는데, 청년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복지제도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금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복지제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복지제도가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즉 실업자 보호제도라고 한다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현금급여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Gallie와 Paugam(2000)은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유형화하기 위해 전통적인 실업급여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준으로 삼았고, 장지연 외(2011: 86~118)도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포함하여 실업자 보호제도를 유형화한 바 있다.

실업자 보호제도로 1980년대 이래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권장되었다(OECD, 1994). 이로 인해 청년의 노동시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도입되고 확장되었다(Bell and Blanchflower, 2011: 243; Müller and Gangl, 2003: 41). 그러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청년에게 미친 효과는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훈련효과성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Heckman and Smith(1999)는 연구결과가 다양한 요인들⁶⁾에 의해 매우 민감하게 변하는데,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청년대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소득효과를 갖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5~2007년 동안의 26개국 활성화정책의 효과성을 메타분석한 Card et al.(2009)도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은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년의 고용경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도 존재하고(Eurofound, 2012; Grubb, 1999), 대규모로 도입된 청년 활성화 프로그램이 오히려 ‘잠금효과’, 또는 ‘전치효과(displacement effect)’를 갖는다는 연구도 있다(Eichhorst et al., 2006; Müller and Gangl, 2003: 41).

지금까지 복지제도가 청년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그 효과성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제도가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정책 및 제도의 조절효과

제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관심은 노동시장 성과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논의선상에 있다. 실업률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 초기의 연구들은 국가마다 상이한 제도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Breen, 2005; Nickell and Layard, 1999). 앞서 살펴본 제도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이 맥락에 있는 것들이다. 이 연구들은 제도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기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경제적 상황이나 조건들은 통제

6) 예를 들어 평가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종류, 소득데이터에서의 이상점 처리방법, 소득데이터의 구조화 방식, 통제집단 대체, 이탈집단의 처리와 같은 세부적인 방법에 의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하였다

하거나 혹은 국가더미나 시기더미를 통해 통제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국가 간 차이를 해당국가의 구조적 조건(거시경제충격, 노동공급과 수요의 변화 등)과 제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Bassinini and Duval, 2006; Blanchard and Wolfers, 2000; Dal Bianco et al., 2015; Korenman and Neumark, 2000). 거시조건과 제도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문적 관심을 촉발한 Blanchard and Wolfers(2000: C1-C3)는 시기에 따른 실업 증가 현상과 국가 간 상이한 경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둘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의 조절효과를 청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몇몇 존재한다. Dal Bianco et al.(2015)는 1990~2012년의 유럽연합 28개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랜드를 대상으로 2007~2008년의 재정위기 심화정도⁷⁾와 노동시장정책(labour market policy)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Korenman and Neumark(2000)은 청년인구 규모의 영향력이 개별국가의 노동시장제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으며, Blossfeld et al.(2006), Buchholz et al.(2009)는 세계화의 영향력이 복지국가의 특성과 노동시장 레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는 노동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와 제도적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거시 구조적 변화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고용의 탈산업화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제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7) 2008~2012년 동안의 GDP 음의 성장률 총 분기수 대비 해당연도 GDP 음의 성장률 분기수를 계산하여 위기의 심화정도를 파악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가. 분석자료

본 연구는 청년 개인의 니트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고용구조 변화와 제도와의 관계를 통해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채택한 연구전략은 다수 국가의 다시점 미시자료(개인단위)를 결합하여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소득·지출·노동시장상태에 대한 각 국가의 대표적인 미시데이터가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니트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개인의 활동 상태가 자세하게 수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에서 포괄하는 국가와 시기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LIS 데이터베이스에는 34개 OECD 회원국 중 31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포괄시기도 1980년 기준의 웨이브1에서 2013년 기준의 웨이브9까지 30년이 넘는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구조 변화가 80년대 이래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상당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LIS 자료가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나.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개인수준과 국가-시기 수준으로 나뉜다. 개인수준의 분석대상 선정은 니트 정의에 따른 이슈와 관련이 있고, 국가-시기 수준의 분석대상 선정은 니트 판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LIS데이터셋과 관련이 있다.

먼저 개인수준 분석대상자는 부양아동이 없는 미혼의 18~34세 청년 중, 장애·군복무·학교 재학 상태가 아닌 청년이다. 이렇게 분석 대상자를 선정한 이유는 연령, 다양한 비경황 상태, 실업자 포함여부와 관련된 니트의 내적 이질

성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첫째, 연령이슈와 관련하여 니트 연령 하한선으로 의무교육 이수 연령(15세 정도)이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15~17세는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연령대의 경우 LIS 데이터의 코딩 기준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연령 상한선은 24세, 29세, 34세 등으로 다양하게 채택되나, 최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0대 초반까지를 포함하였다. 둘째, 주된 활동상태가 가사육아인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문제와 중첩되어 내적 이질성을 증폭시키는 문제가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문제는 국가마다 상이한 문화적 배경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청년 문제와는 다른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석 대상자를 부양아동이 없는 미혼자로 제한하였다. 그 외 일자리가 주어저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 징병제 국가의 군인, 학생은 제외하였다. 셋째, 실업자 포함여부는 니트 정의에서 매우 다양하게 다루지고 있는데, 본 연구는 니트 개념에서 실업자를 제외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변수정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다음으로 국가-시기 수준의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LIS의 국가-시기별 데이터셋에서 니트 판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LIS 데이터셋의 현재 경제활동상태(CLFS : Current Labour Force Status)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변수는 ILO의 고용 및 실업정의에 준해 현재의 노동시장 상태를 파악한 것이다.

국가-시기단위의 분석대상을 선정한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체 OECD 회원국 가운데, LIS 데이터베이스에 자료수집이 되어 있지 않은 4개국(터키, 포르투갈, 뉴질랜드)을 제외한 31개국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이 국가들의 웨이브4(1995년경)~웨이브8(2010년경) 자료만을 선택하였다. 고용구조 변화와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가능한 한 많은 시계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웨이브1~웨이브3의 경우 니트 판별이 가능한 데이터셋이 최대 5개밖에 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웨이브당 10개 이상의 데이터셋이 존재하는 기간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31개국의 웨이브4~웨이브8의 데이터셋 143개가 먼저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현재 경제활동상태(CLFS) 변수가 조사되지 않았거나(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학생·장애·정병제 국가의 군복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웨덴⁹⁵, 스위스, 영국⁹⁴, 영국⁹⁵), 기타 개인수준의 분석대상을 명확히 구분해내기 어려운 경우(호주⁹⁵, 호주⁰¹, 호주⁰³),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무응답 값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스토니아⁰⁰, 슬로베니아⁹⁷, 슬로베니아⁹⁹)가 제외되어 최종 분석 대상은 OECD 22개국, 81개 데이터셋의 331,611명이다.⁸⁾

2. 변수 정의 및 측정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1수준(개인수준)의 니트 여부이다. 니트 여부는 현재 경제활동상태(CLFS : Current Labour Force Status) 변수를 활용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교육, 고용,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를 따르나, 실업자 및 직업훈련상태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실업자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실업자를 니트에 포함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니트 개념이 실업자와는 다른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유럽연합,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사용되는 니트 개념에는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니트(NEET) 문자 그대로에 주목한다면 실업자를 니트에서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니트에 실업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자 중에서 직업훈련 상태에 있는 청년을 선별해낼 수 있어야 정확하게 니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LIS 데이터에서는 청년이 현재

8) 호주⁹⁵, 호주⁰¹, 호주⁰³의 경우 부양아동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의 경우 교육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제도에 관한 자료가 2005년부터 수집되어 1990년대 자료를 선형 보간하기에는 시계열적 간극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판단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LIS 데이터셋의 원자료 및 분석 사례 수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직업훈련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다. 현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LIS 데이터에서는 실업과 고용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⁹⁾ 또한 실업자가 모두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훈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업자를 분석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니트는 18~34세 부양아동이 없는 미혼 비장애 청년 중,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청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도 니트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니트보다는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크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탈산업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는 2수준의 시변(time-varying) 국가특성이다. 고용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행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민간부문 중 제조업 고용비중을 활용한다.

다. 조절변수

조절변수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제도, 노동시장제도, 복지제도이다. 제도변수는 독립변수와 마찬가지로 2수준의 시변(time-varying) 국가특성으로 설정한다.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제도의 선별성, 교육의 내용,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이다. 첫째, 학교교육이 팽창되어 있으면 교육제도의 선별성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팽창은 대학 진학률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가용한 데이터의 부족¹⁰⁾으로 인해 25~34세 중 대졸자(ISCED 5 이상 수준) 비중을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둘째, 교육내용의 직업교육 중심성 정도이다. 직업교육 중심성 정도는 de Lange 외(2013)를 따라 상급중등교육(upper secondary education, 한국의 고등학교단계

9) CLFS의 코딩기준에 따르면, 고용과의 연결성이 분명한 직업훈련의 경우 고용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10) OECD Education at a Glance에서 대학 진학률 정보가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 캐나다, 프랑스, 룩셈부르크는 해당 정보가 없어 사용하지 못했다.

에 해당)에 등록된 전체 학생 수 대비 직업교육기관 등록 학생 수로 측정한다. 셋째, 교육체계와 노동시장과의 연계는 일반적으로 직업교육의 이원화체계(dual system)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나, 본 연구는 송창용·김민경(2009)이 참고한 OECD(1999)의 구분기준을 참고하여 도제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비중으로 변수를 구성한다. OECD(1999)의 경우는 학교기반 직업교육국가, 혼합형 직업교육국가, 도제형 직업교육 국가와 같이 범주형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정보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시기에 따른 변량을 확보하고자 연속형 변수로 구성한다. 구체적으로 ISCED3과 ISCED4 수준에서 도제형 직업교육 프로그램(combined school & work-based programmes)에 참여한 학생의 비중으로 포착한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노동시장 제도는 조합주의 관련 제도와 고용보호제도이다. 첫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조합주의 요인은 임금결정에서 외부자가 얼마만큼 배제되는지, 혹은 임금결정과정에서 외부자가 얼마나 고려되는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 외부자 배제정도는 내부자의 힘으로 포착하고, 이를 OECD에서 제공하는 노동조합 조직률(union density)을 통해 파악한다. 즉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을수록 내부자의 힘이 강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임금결정과정에서 외부자가 얼마나 고려되는지는 단체협상 적용률을 통해 파악한다. 단체협상 적용률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상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으로 계산되는데,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외부자가 단체협상 과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협상 적용률은 ICTWSS 데이터베이스 5.0 버전(Visser, 2015)에서 제공하는 지표 중, 단체협약권이 없는 부문을 제외한 조정된 적용률 지표를 사용한다.¹¹⁾ 둘째, 강한 고용보호제도는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보호제도는 OECD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호 통합지수(EPL지수)를 사용한다. EPL지수는 0~6점으로 측정되며 높을수록 고용보호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11) 조합주의의 대리변수로 임금협상 중앙화와 조정력도 추가로 고려하였다. 임금협상 중앙화 정도는 측정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Soskice, 1990), 임금협상 조정력은 단체협상 적용률과의 상관이 높을 뿐만 아니라(피어슨 계수: 0.72) 범주형 변수로 시계열적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단체협상 적용률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복지제도는 실업자 보호제도로, 장지연 외(2011: 88)를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업 관련 현금급여 제도로 구분하였다.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영향력은 실업자 1인당 GDP 대비 ALMP 비중을 통해 살펴본다. 둘째, 실업 관련 현금급여의 영향력은 급여수준의 관대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급여수준의 관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모두 포함한다. 그 이유는 청년의 경우 잦은 이직과 고용불안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업급여로만 제한하면 복지급여의 영향력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국가마다 상이하여 실업급여로만 제한할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처럼 실업부조만 존재하는 국가는 실업자 보호제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복지급여 수준의 관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LIS 데이터셋에서 직접 추출한 값을 활용한다.¹²⁾

라. 통제변수

본 연구는 대부분의 니트 결정요인에서 밝혀진 1수준의 개인특성을 모두 통제한다. 또한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거시수준의 변수를 추가로 통제한다.

분석을 위해 통제된 1수준의 개인특성은 선행연구에서 니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학력, 연령, 성별, 가구소득이다. 가구배경과 부모학력 등과 같은 요인은 LIS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어 분석에는 활용하지 못했다. 부모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반영하기 위해 부모동거여부를 통제한다.

다음으로 거시수준의 통제변수는 여성경제활동참여율, GDP성장률, 35~64세 성인 실업률, 조세격차와 같은 전반적인 거시경제 충격과 노동시장 상황을 포착하는 변인들이다. 이 외 청년의 노동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12) 복지급여의 소득대체정도는 일반적으로 OECD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비중(passive labor market policy)이나 실업급여의 소득대체를 정보를 활용한다. 그러나 OECD 정보는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의 총 합계액을 기초로 산출되어 청년이 직접 받는 복지급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 데이터 제공시점이 대부분 2000년대 이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진 청년인구 비중, 기술발전(민간R&D 비중)과 세계화 정도(KOF 세계화 지수)도 통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출처는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구분 (수준)	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종속변수 (1수준)	니트 여부	니트(=1), 고용(ref.)	LIS(2016)
독립변수 (2수준)	제조업 고용비중	민간부문 임금근로자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중(%)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2015)
조절변수 (2수준)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 (역코딩)	100-(25~34세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	OECD Education Database(2016), OECD Education at Glance(1998)
	직업교육 중심성	후기중등과 중등후비고등교육단계 등록자 중 직업교육기관 등록자 비중	OECD Education Database(2016)
	이원화 프로그램 비중	학교 혹은 직장 기반 직업훈련(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후기중등 & 중등후비고등 학생 비중	OECD Education Database(2016)
	노동조합 조직률	노동조합 가입률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2016)
	임금협상 적용률	임금협상 결과의 적용률(조정된 값)	Visser, J.(2015), ICTWSS database version 5.0
	고용보호지수	통합 고용보호지수(0~6점)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2015)
	ALMP 비중	1인당 GDP 대비 실업자 1인당 ALMP 비중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2016)
	실업 관련 현금급여의 소득대체율 (개인)	실업 관련급여 (보험+수당+부조)의 기준소득 평균대비 비중 (*기준소득=노동소득+자본 소득-조세 및 사회보장세)	LIS 추출

〈표 1〉의 계속

구분 (수준)	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통제변수 (1수준)	학력	낮음(기준), 중간, 높음	LIS(2016)
	성별	남성(기준), 여성	LIS(2016)
	연령	만 나이	LIS(2016)
	균등화가구 가처분소득 비중	본인소득 제외한 가구 가처분소득(균등화값)의 중위소득대비 비중	LIS(2016)
	부모 동거여부	그 외(기준), 부모 및 조부모와의 동거	LIS(2016)
통제변수 (2수준)	청년인구 비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15~34세 청년인구비중	OECD Population Statistics(2015)
	민간R&D 비중	GDP 대비 민간부문 R&D 지출비중	OECD Science, Technology and R&D Statistics(2015)
	KOF 세계화 지수	KOF경제적 세계화지수 중 실제경제흐름(actual economic flows). 0~100	Dreher, A.(2006)
	여성 경활률	15~64세 대비 여성경제활동참여율 (민간부문)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2015)
	GDP 성장률	1인당 GDP 성장률	OECD Productivity Statistics(2016)
	성인 실업률	35~64세 평균실업률	OECD statistics: LFS by sex and age(2016)
	조세격차	조세격차	OECD Tax Statistics(2016)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국가-시기별로 변하는 고용구조(ind_{jk})와 사회정책($inst_{jk}$)이 개인의 니트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3수준으로 구성된 다수준 선형 회귀분석(Multilevel Linear Regression)을 적용한다. 3수준의 다수준 모형으로 구성한 이유는 LIS 데이터셋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LIS 데이터

셋은 1수준의 개인¹³⁾과 2수준의 국가-시기, 그리고 3수준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수준은 상위수준에 포함되는 위계구조를 갖고 있다. 이처럼 3수준의 위계적 형태의 자료를 분석할 경우 다수준 모형(multilevel models)을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다.¹⁴⁾ 또한 다수준 모형은 집단별 사례수 격차를 반영해 회귀계수를 도출해 준다는 점에서(Raudenbush and Bryk, 2002: 230), LIS 데이터셋처럼 사례 수 격차가 큰 데이터 구조에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¹⁵⁾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모두 2수준이므로, 확률절편(random intercept) 모형을 설정한다. 1수준의 개인변인은 통제의 목적이므로 확률기울기(random slope) 모형은 설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니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델을 구성한다. k 국가의 j 국가-시기에 속하는 개인 i 의 니트 상태($NEET_{ijk}$)는 2수준의 국가-시기별로 변하는 절편(π_{0jk})과 개인특성변인(ich_{ijk}) 그리고 개인의 잔차항(e_{ijk})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본 연구의 관심은 절편(π_{0jk}), 즉 국가-시기별로 변하는 개인의 니트 확률이 고용구조(ind_{jk})와 사회정책($inst_{jk}$)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
- 13) 개별국가의 자료는 패널자료이거나 반복 조사된 횡단면 자료(repeated cross-sectional data)가 대부분이다. 패널자료의 경우 개인은 실제 반복 측정된 것이지만, LIS에서 동일 개인을 추적할 수가 없으므로 각 시점의 개인은 모두 다른 개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 14) 패널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집단 내 상관으로 인한 잔차의 상관문제와 표준오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2수준의 구조에서만 가능하다. 3수준의 구조에서 일반적인 패널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수준과 3수준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처럼 데이터의 원래 구조를 무시하고 정보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패널분석 기법을 활용해야 하는 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 15) 다수준 모형은 각 수준의 분산과 집단의 사례 수를 고려하여 사례 수가 큰 집단에 가중치를 적게 주는 방식으로 회귀계수를 계산한다. Raudenbush and Bryk(2002: 230)가 제시한 가중치 계산방법에 따라 본 분석의 가중치를 계산한 결과, 2수준의 사례 수 격차는 73.7배(최소 벨기에95, 최대 덴마크00)이나 가중치 격차는 1.8배에 불과하고, 3수준의 사례 수 격차는 130.2배(최소 벨기에, 최대 미국)이나 가중치 격차는 1.2배에 불과했다. 즉 다수준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사례 수 격차가 회귀계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중치 격차가 회귀계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가더미를 추가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 결과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NEET_{ijk} = \gamma_{000} + \beta_{01}(ind_{.jk}) + \beta_{02}(inst_{.jk}) + \beta_{03}(ind_{.jk})(inst_{.jk}) \\ + \beta_{04}(cv_{.jk}) + \pi_1(ich_{ijk}) + \mu_{00k} + r_{0jk} + e_{ijk}$$

$$[level1] \\ NEET_{ijk} = \pi_{0jk} + \pi_1(ich_{ijk}) + e_{ijk}$$

$$[level2] \\ \pi_{0jk} = \beta_{00k} + \beta_{01}(ind_{.jk}) + \beta_{02}(inst_{.jk}) + \beta_{03}(ind_{.jk})(inst_{.jk}) + \beta_{04}(cv_{.jk}) + r_{0jk}$$

$$[level3] \\ \beta_{00k} = \gamma_{000} + u_{00k}$$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분석방법은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 LPM)이다.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때 오차의 이분산성, 비정규성, 추정된 확률 값이 0~1 범위를 벗어날 위험성으로 인해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로짓모형과 프로빗모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가 교정가능하고, 로짓모형이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를 정확히 산출하지 못한다는 지적(Ai and Norton, 2003; DeLeire, 2004)¹⁶⁾에 따라 선형확률모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선형확률모형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이분산성 문제는 이분산을 교정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의 적용으로, 비정규성의 문제는 충분한 표본의 확보¹⁷⁾로 해결한다.

본 연구는 회귀계수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하고 패널자료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수준의 통제변수는 전체 평균 중심화(grand-mean centering)를 하고, 2수준의 국가-시기변인은 집단평균 중심화(group-mean centering)를 한다. 2수준 변인을 집단평균 중심화함으로써 패널자료 분석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고정효과 모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즉 회귀계수의 의미를 고정효과 모형과 유사하게 순수한 집단 내 효과(within country effects)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이 순수하게 설명변수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6) Ai and Norton(2003: 129)은 로짓모형과 같은 비선형모형에서는 상호작용항 추정치의 크기, 방향성, 통계적 유의성을 기초로 상호작용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7) 본 연구의 분석표본은 약 33만 1천 명으로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IV. 분석결과

1. 기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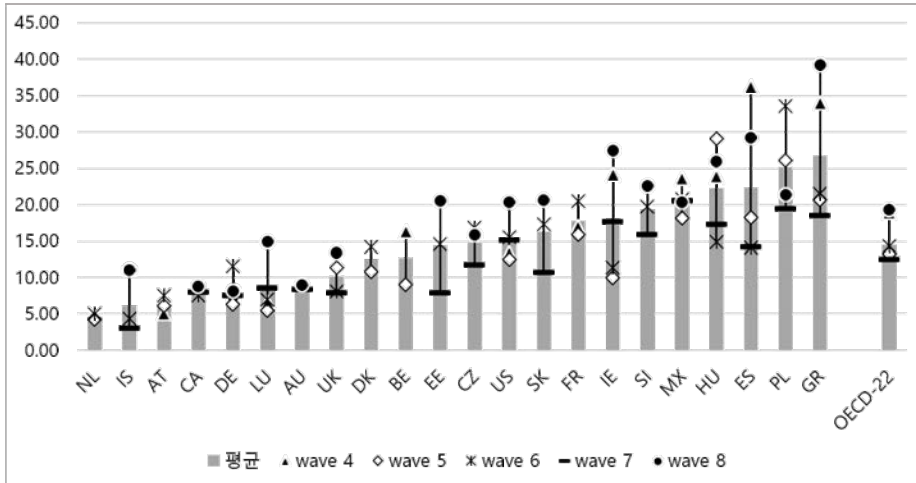
[그림 1]은 LIS자료에서 나타난 국가-시기별 니트 비율의 평균을 보여준다. 여기서 제시된 값은 분석 사례 수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국가-시기별 가중평균 값의 국가별 비가중 평균값이다. 또한 전체 평균 역시 전체 사례 수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국가별 평균값의 평균을 의미한다.¹⁸⁾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부록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셋별 사례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그림 1]을 보면, OECD-22개국의 니트 비율은 평균 14.5%로 나타났다. 니트 정의 및 분석 국가의 상이함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OECD(2016)에서 보고하는 니트 평균이 최저 13.3%(2008년)~최고15.7%(1997년) 범주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LIS자료에서 나타난 수치가 평균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ECD(2016)에서 보고하는 수치는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본 분석에 포함된 청년들의 니트 비율은 12.5%(2007년 경)~19.3%(2010년경)로 연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경향성은 유사했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 후반과 2010년경에 니트 비율이 높고, 중간 시기에는 다소 낮은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¹⁹⁾

<표 2>는 분석에 포함된 시변 국가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제조업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의 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은

18) 국가-시기별 사례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포함된 사례의 평균값이 아니라 데이터셋별(국가-시기별) 가중평균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사례 수에 기초해 평균값을 산출하면 사례 수가 많은 데이터셋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셋별 평균의 국가별 평균값을 산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데이터셋별 평균 계산 시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LIS에서 제공하는 개인횡단가중치(non-normalized weight)를 적용하였다.

19) OECD(2016)에 따르면, 니트 비율은 1997년(15.7%) 이후 하락하여 2001년 14.4%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03년 14.8%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 이후 2008년 13.3%까지 하락하다가 유럽발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현재 15.7%에 이른다.

(그림 1) 국가-시기별 니트 비율



주: 국가별 평균은 국가-시기별 가중평균의 비가중 평균값임. OECD-22는 분석에 포함된 22개 국가의 평균값. 니트 평균 기준 오름차순으로 정리. NL(네덜란드), IS(아이슬란드), AT(오스트리아), CA(캐나다), DE(독일), LU(룩셈부르크), AU(호주), UK(영국), DK(덴마크), BE(벨기에), EE(에스토니아), CZ(체코), US(미국), SK(슬로바키아), FR(프랑스), IE(아일랜드), SI(슬로베니아), MX(멕시코), HU(헝가리), ES(스페인), PL(폴란드), GR(그리스).

분석기간 동안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관찰되었으나, 절대적 수준이나 변화정도에서 국가 간 편차가 확인되었다. 분석기간 동안의 국가별 평균을 살펴보면, 체코의 경우 제조업 비중(39.2%)이 가장 높고 서비스업 비중(57.2%)이 가장 낮았으며, 서유럽 국가 중에서는 오스트리아(30.6%)와 독일(32.3%)이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네덜란드(20.1%), 호주(20.2%), 아이슬란드(20.4%), 미국(20.8%)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비중은 높은 대표적인 국가들로 확인되었다.

교육제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교육제도의 선별성, 직업교육 중심성, 노동시장 연계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반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팽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국가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세 가지 교육제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 그리스는 선별성도 낮고 직업교육을 발달시키거나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꾀하는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독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세 가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상당히 우호적인 교육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국가·시기별 구조 및 제도 특성

구분	ind	signal	vetrate	dual	uden	adjcov	epl	almp	r_punem
호주	20.20	56.82	61.24	0.00	18.51	55.65	1.15	8.14	1.99
오스트리아	30.63	84.60	76.51	32.97	37.48	98.00	1.97	14.27	1.66
벨기에	26.35	64.99	68.22	9.11	54.49	96.00	2.67	17.14	3.91
캐나다	21.57	46.44	11.09	0.00	27.67	29.68	0.59	5.00	2.61
체코	39.23	82.56	74.24	31.66	18.75	48.33	2.06	4.49	1.09
덴마크	24.45	65.44	50.77	49.74	72.15	85.00	1.75	37.65	5.68
에스토니아	33.27	64.88	42.10	27.62	8.36	25.67	2.15	1.16	0.35
프랑스	22.20	66.29	55.41	11.46	8.19	95.73	3.00	13.55	4.25
독일	32.30	76.90	65.20	51.31	23.11	67.18	2.16	13.71	2.81
그리스	21.98	73.96	37.16	0.00	25.86	79.54	3.18	3.34	1.32
헝가리	33.16	80.75	20.95	21.58	23.78	35.37	1.46	7.05	1.97
아이슬란드	20.37	65.19	36.12	16.58	90.20	88.33	1.18	2.30	2.70
아일랜드	25.96	65.63	27.58	9.25	36.56	42.74	0.92	16.17	5.71
룩셈부르크	23.52	67.45	67.46	13.46	40.20	59.00	3.00	12.94	1.23
멕시코	24.88	81.26	11.58	0.00	15.52	13.40	3.10	0.77	0.42
네덜란드	20.15	68.75	68.86	22.53	22.74	83.41	1.91	41.70	1.91
폴란드	30.48	73.28	57.44	2.81	17.42	18.80	1.87	5.56	1.18
슬로바키아	38.50	80.75	73.28	31.98	19.78	38.33	1.59	2.12	0.84
슬로베니아	34.43	71.32	64.90	1.72	32.27	91.33	2.23	5.51	0.56
스페인	28.78	62.58	41.50	3.64	16.44	80.95	2.75	6.91	3.08
영국	22.50	61.67	52.74	0.00	28.31	34.08	0.78	7.56	1.19
미국	20.82	60.80	7.72	0.00	12.56	14.02	0.25	3.09	0.86
OECD-22	27.08	69.52	45.02	13.98	27.71	54.18	1.91	9.03	2.08
웨이브 4	28.20	77.19	43.38	13.39	31.61	65.56	2.39	9.80	2.42
웨이브 5	26.90	72.94	47.49	13.91	29.96	59.60	1.94	14.71	1.90
웨이브 6	27.32	69.18	47.92	17.82	29.67	56.68	1.87	9.19	2.01
웨이브 7	27.96	67.46	43.93	13.31	24.79	47.90	1.75	6.29	1.36
웨이브 8	25.35	63.78	41.43	10.55	23.69	45.06	1.78	5.77	2.82

주: ind(제조업 고용비중), signal(교육제도의 선별성=100-대졸자 비중), vetrate(직업 교육 중심성), dual(노동시장 연계성), uden(노동조합 조직률), adjcov(조정된 단체협약 적용률), epl(고용보호지수 통합), almp(1인당 GDP 대비 실업자 1인당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비중), r_punem(개인 순평균시장소득 대비 실업보험, 실업부조, 보편실업급여의 비중).

다음으로 노동시장제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노조 가입률과 단체협상 적용률이 하락하고, 고용보호지수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역시 국가별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노조 가입률의 국가 간 편차는 80%p 이상이고, 단체협상 적용률의 국가 간 편차도 84%p가량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보호 정도는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와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낮게 나타나고, 그리스, 멕시코, 룩셈부르크, 프랑스에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1인당 GDP 대비 비중은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는 1995년경 2.42%에서 2007년 1.36%까지 하락한 후, 2010년 2.8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별 평균을 살펴보면, 멕시코,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의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비중은 1인당 GDP의 3% 이하이지만,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그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유럽국가도 1인당 GDP의 13~17%를 지출하고 있었다. LIS데이터셋에서 직접 추출한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를 살펴보면, 에스토니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미국은 소득대체 정도가 1% 이하에 불과했다. 반면, 아일랜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은 3% 이상의 개인소득 대체율을 보여주었다.

2.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주 효과

<표 3>은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이 청년의 니트 확률에 미친 효과를 선형확률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주 효과모형은 니트 확률의 국가-시기(2수준) 변량을 78.2%, 3수준의 국가 변량을 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수준 변인을 집단평균 중심화했기 때문에 국가의 시불변 특성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3수준의 설명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선형확률모형 분석결과, 2수준의 국가-시기 변인 중 청년의 니트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친 것은 제조업 고용비중뿐이었다. 제조업 고용비중의 1%p 하락은 니트 확률을 0.61%p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주된 노동시장 진입통로였던 제조업의 하락이 청년 니트 증가의 주요 원인임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고용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고용구조의 변화는 상품수요의 변화, 기술발전, 세계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야기된다. 특히 기술발전과 세계화는 제조업의 자국 내 미숙련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술발전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제조업에서 더 이상의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데, 특히 기술발전이 숙련편향적으로 이뤄지면서 미숙련자와 신규인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세계화로 인해 노동집약적 산업의 개도국 이전이 수월해진 것도 탈산업화를 추동한 또 다른 원인이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제조업에서 신규 미숙련 노동수요가 감소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청년의 니트 확률을 높였다는 것이 본 분석결과 확인되었다.

〈표 3〉 multi-level LPM 1 : 주 효과 모형

변수		주 효과 모형
제조업 고용비중		-0.0061 (0.003) *
(교육제도)	교육제도 선별성	-0.0012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06 (0.001)
	직업교육의 노동시장 연계성	0.0005 (0.001)
(노동시장제도)	노동조합 가입률	-0.0016 (0.001)
	단체협상 적용률	0.0000 (0.000)
	고용보호지수	-0.0016 (0.018)
(복지제도)	ALMP 비중	0.0012 (0.002)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022 (0.003)
절편		0.1445 (0.014) ***
1수준 분산(잔차)		0.124050
2수준 분산(절편)		0.000550
3수준 분산(절편)		0.003731
Intra Class Correlation		0.0334 (0.008) ***
R ² (전체)		0.043
R ² (1수준)		0.029
R ² (2수준)		0.782
R ² (3수준)		0.042
N		331,611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모형설명력(R²)은 비조건부 모형의 변량 대비 개별모형 변량의 감소정도로 계산. IntraClass Correlation의 유의수준은 계수값과 SE에 기초하여 자체 계산. 1수준 변수는 전체 평균 중심화, 2수준 변수는 집단 평균 중심화. 시기를 통제하기 위해 웨이브더미를 투입하였음. 통제변수 분석결과 제시하지 않음.

한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사회정책 및 제도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곧바로 사회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노동시장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것의 영향력을 조절하거나 혹은 증폭시키는 사회정책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독립된 주 효과가 없다하여 정책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회정책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3.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

<표 4>는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이다.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분석에서는 제조업 고용비중과 모든 사회정책의 상호작용항을 하나의 모델에 투입하였다. 이처럼 모델을 구축한 이유는 제도 간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분석에 포함된 사회정책이 다양하고 변수가 많아 정책 간 상호작용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사회정책의 조절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의 영향력도 동일 모델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구조 변화의 영향력은 교육·노동·복지제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제도의 선별적 기능이 강화되어 청년의 생산성에 대한 신호를 노동시장에 더 정확히 보낼수록,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아 노동시장 외부자가 더 많이 포섭될수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비중이 증가할수록, 실업 관련 급여수준이 관대할수록, 고용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교육제도의 선별성은 고등교육 팽창을 역코딩한 것이다. 앞의 이론적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선별적 교육제도가 고등교육 팽창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²⁰⁾ 비선별적 교육제도에 의해 고등교육이 팽창하면 고학력

20) 물론 고등교육이 팽창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기술발전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청년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고등교육이 팽창하기도 한다(Van der Velden and Wolbers, 2003: 193~194). 이러한 이유에서 팽창한 고등교육은 청년의 니트 가능성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등교육으로 기술습득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높아져 취업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악화된 노동시장에 머물기 보다는 교육체계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을 늘림으로써 니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multi-level LPM 2 :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상호작용

변수	상호작용 모형 (제조업비중×제도)
제조업 고용비중	-0.0078 (0.002) ***
교육제도 선별성	-0.0019 (0.001)
직업교육 중심성	-0.0009 (0.001)
직업교육의 노동시장 연계성	0.0018 (0.001)
노동조합 가입률	0.0004 (0.001)
단체협상 적용률	0.0026 (0.000) ***
고용보호지수	-0.0063 (0.016)
ALMP 비중	0.0026 (0.001)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	0.0105 (0.003) ***
제조업 고용비중×교육제도 선별성	0.0024 (0.001) **
제조업 고용비중×직업교육 중심성	-0.0012 (0.000) **
제조업 고용비중×노동시장 연계성	0.0009 (0.001)
제조업 고용비중×노조 가입률	-0.0028 (0.001) *
제조업 고용비중×단체협상 적용률	0.0032 (0.001) ***
제조업 고용비중×고용보호지수	-0.0280 (0.020)
제조업 고용비중×ALMP	0.0029 (0.001) *
제조업 고용비중×실업 관련급여 소득대체 정도	0.0091 (0.003) ***
절편	0.1401 (0.013) ***

주: 괄호안의 숫자는 White의 이분산 교정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모형설
명력(R²)은 비조건부 모형의 변량 대비 개별모형 변량의 감소정도로 계산. 시기
를 통제하기 위해 웨이브더미를 투입하였음. 통제변수는 제시하지 않음.

이라는 신호도 생산성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이는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으로 인한 저학력자 구축이나 더 많은 생산성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취업
유예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고(MacDonald, 2011: 429; Raffé, 2013: 183), 결
과적으로 청년의 니트 확률을 높이게 된다. 본 분석 결과는 교육팽창으로 인한
신호교란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력이 노동수요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비
노동력화의 원인을 고학력화에서 찾고 이는 남재량(2012)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제조업 하락의
부적 영향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실업 관련 급
여가 구직활동과 훈련 조건을 연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의 완화효과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구직활동수당의

경우,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청년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조건이 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고용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사회정책도 존재한다. 교육체계의 직업교육 중심성이 커질수록, 노동조합 가입률로 포착된 내부자의 힘이 커질수록 고용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제조업의 감소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미 고용된 노동시장 내부자의 힘이 강하면 외부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가능하다. 본 분석 결과도 이러한 예측을 지지했다. 그러나 직업교육의 확대나 직업교육의 노동시장 연계성 강화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을 도울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분석 결과 오히려 고용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거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고용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력은 직업교육이 확대되면 더 커지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능하다. 첫째, 제조업 분야의 노동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직업교육 확대로 인해 노동공급자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¹⁾ 특히 직업교육이 새로운 노동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직업교육의 내용이 과거의 제조업 기반에 머물러 있고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강하다면 직업교육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²²⁾ 둘째, 제조업 분야의 노동수요가 줄어드는 대표적 원인인 기술발전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숙련 편향적 기술발전에 의해 제조업에서 미숙련/반숙련 노동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등 직업교육 수준의 숙련자를 양성하는 직업교육이 확대되면 그 부정적 영향력은 당연히 더 커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구조 변화는 청년 니트 확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정책 및 제도가 고용구조 변화

21) 본 연구의 니트 개념에는 실업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제조업의 노동수요 감소와 직업교육으로 인한 노동공급자의 증가로 인한 미스매치가 실업상태의 니트를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22) Salvisberg and Sacchi(2013)는 직업교육의 이원화체계가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강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 영향력을 완화하거나 혹은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구조 변화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사회정책 및 제도는 확대하는 반면, 그것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사회정책 및 제도는 축소한다면 청년의 니트 확률도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그동안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탈산업화로 인한 고용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영향,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요인들이 청년의 니트 확률을 높이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자료로 다수 국가의 다시 점 미시자료를 결합한 다수준 선형확률모형(multilevel linear probability model)을 분석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다수준 분석에 포함된 최종 분석대상은 니트 판별이 가능한 OECD 22개국의 81개 데이터셋(1995~2010년경)에 포함된 331,611명이었다.

분석 결과, 고용의 탈산업화, 즉 제조업 고용비중의 변화가 청년 니트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고용비중의 1%p 하락은 청년의 니트 확률을 0.61%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청년의 주된 노동시장 진입통로였던 제조업의 하락이 개인의 니트 확률을 높이는 핵심 원인임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한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교육·노동시장·복지제도의 독립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구조 변화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사회정책의 조절효과, 즉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제도의 선별성이 높을수록,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을수록, 적극적 노동시장 비중과 실업 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가 높을수록 고용구조 변화의 부적 영향력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직업교육 중심성이 높을수록,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을수록, 고용구조

변화가 니트 확률을 높이는 것을 더 크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던 제조업의 감소가 결과적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을 야기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청년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방법은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Bell and Blanchflower(2011)의 정책제언을 상기하게 한다. 그러나 청년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에 대한 대책은 대체로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민간부문에 의지하는 일자리창출정책이 대부분이고 정부의 대책은 소수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대책이 전부라 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대책, 일자리에 대한 개념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성 있는 활동을 시민이 스스로 조직화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상하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정책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왜 한국의 니트 비율이 최고수준인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교육제도의 선별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상 적용률은 12%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물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중과 실업관련 급여의 소득대체 정도도 매우 낮다. 고용구조 변화로 인해 청년의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적 요인들이 결합되어, 고용구조 변화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분석 결과 이러한 정책적 요인들이 고용구조 변화의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니트 개념에 주목함으로써 실업률과 고용률이 갖는 개념상의 한계로 국가통계에서 제외되었던, 그래서 사실상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청년을 직접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그동안의 니트 결정요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결함관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결정요인을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구조적 차원의 영향력이 개인이 갖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은 수행되지 못했다. 동일한 구조적 맥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영향력은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따라 개인에게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수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금재호 · 전용일 · 조준모(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노동부.
- 김원동(2009). 「다니엘 벨의 탈산업사회이론 연구 - 고용구조 변화의 추이와 서비스 부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2: 79~125.
- 나승호 · 조범준 · 최보라 · 임준혁(2013).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BOK 경제리뷰』 2013 (15).
- 남재량(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_____(2012). 「고졸 NEET와 대졸 NEET」. 『노동리뷰』 85: 39~50.
- 송창용 · 김민경(2009). 「주요국의 직업교육 동향」. 『THE HRD REVIEW』 12 (1): 1~29.
- 신희경 · 김은산 · 이송욱(2014). 『청년니트(NEET)현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리서치』.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 오완근(2011).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국가별 보물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Working papers No. 454, 한국은행.
- 장지연 · 황덕순 · 은수미 · 이병희 · 박제성 · 전병유(2011). 『노동시장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 · 이병희 · 안태현(2014). 『실업급여의 고용성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채창균 · 오호영 · 정재호 · 김기현 · 남기곤(2008). 『유휴청년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용환(2015). 「OECD국가의 ‘청년 니트(NEET)’ 유입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 (4): 85~115.
- 황수경(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노동경제

논집』 33 (3) : 89~127.

- Ai, C. and E. C. Norton(2003). "Interaction terms in logit and probit models." *Economics Letters* 80 (1) : 123~129.
- Bassanini, A. and R. Duval(2006). "Employment patterns in OECD countries: Reassessing the role of policies and institutio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35.
- Baumol, W. J., B. Blackman and E. N. Wolff(1985). "Unbalanced growth revisited: asymptotic stagnancy and new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75 (4) : 806~817.
- Bell, D. N. and D. G. Blanchflower(2011). "Young people and the Great Recess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7 (2) : 241~267.
- Bertola, G., Blau, F. D. and L. M. Kahn(2007).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demographic employment patter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0 (4) : 833~867.
- Blossfeld, H. P., E. Klijzing, M. Mills and K. Kurz(2006).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The losers in a globalizing world*. Routledge.
- Blanchard, O. and J. Wolfers(2000). "The role of shocks and institutions in the rise of European unemployment: the aggregate evidence." *The Economic Journal* 110 (462) : 1~33.
- Blanchflower, D. G. and R. B. Freeman(2000). *Youth employment and joblessness in advanced countr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een, R.(2005). "Explaining Cross-national Variation in Youth Unemployment: Market and Institutional Factor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 (2) : 125~134.
- Bruno, G. S., E. Marelli and M. Signorelli(2014). "The rise of NEET and Youth Unemployment in EU regions after the crisi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56 (4) : 592~615.

- Brzinsky-Fay, C.(2013). “The Measurement of School-to-work Transitions as Processes.” *European Societies* 16 (2) : 213~232.
- Buchholz, S., D. Hofäcker, M. Mills, H. P. Blossfeld, K. Kurz and H. Hofmeister(2009). “Life courses in the globalization process : The development of social inequalities in modern societ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 (1) : 53~71.
- Carcillo, S., R. Fernandez, S. Königs, and A. Minea(2015).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Paris: OECD Publishing.
- Card, D., J. Kluve, and A. Weber(2009). “Active Labor Market Policy Evaluations : A Meta-analysis.” *The Economic Journal* 120 : F452~77.
- Christopoulou, R. and P. Ryan(2009). “Youth Outcomes in the Labour Markets of Advanced Economies : Decline, Deterioration, and Causes.” in I. Schoon and R.K. Silbereisen (eds.), *Transitions from School to Work : Globalisation, Individualisation, and Patterns of Diversity* (pp.67~9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coran, M., and J. D. Matsudaira(2009). “Is stable employment becoming more elusive for young men.” in I. Schoon and R.K. Silbereisen (eds.),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 Globalization, individualization, and patterns of diversity* (pp.45~6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 Bianco, S., Bruno, R. L. and M. Signorelli(2015). “The joint impact of labour policies and the “Great Recession” on unemployment in Europe.” *Economic Systems* 39 (1) : 3~26.
- DeLeire, T.(2004). *A note on calculating difference in differences using probit models versus linear probability models*. Michigan State University.
- de Lange, M., M. Gesthuizen, and M. H. J. Wolbers(2014). “Youth Labour Market Integration Across Europe.” *European Societies* 16 (2) : 194~212.
- Dreher, A.(2006). “Does globalization affect growth? Evidence from a new index of globalization.” *Applied Economic* 38 (10) : 1091~1110.
- Eichhorst W., M. Greinberger-Zingerle and R. Konle-Seidl(2006). Activation

- Policies in Germany : From Status Protection to Basic Income Support. IZA Discussion Papers, No.2514.
- Eurofound(2012). *NEETs-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Luxembourg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Furlong, A., and F. Cartmel(2006). *Young people and social change* : McGraw-Hill International.
- Genda, Y.(2007). "Jobless youths and the NEET problem in Japan."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0 (1) : 23~40.
- Grubb, W. N.(1999). *Lessons from Education and Training for Youth: Five Precepts, in Preparing Youth for the 21st Century: The Transition from Education to the Labour Market*.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Heckman, J. J., and J. A. Smith(1999). "The Sensitivity of Experimental Impact Estimates: Evidence from the National JTPA Study." in D. G. Blanchflower and R. B. Freeman (eds), *Youth Employment and Joblessness in Advanced Countri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d NBER.
- Howell, D. R., and M. Rehm(2009).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high European unemployment: a reassessment with new benefit indicator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5 (1) : 60~93.
- Iversen T. and A. Wren(1998).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50 (4) : 507~546.
- Jimeno J. F. and D. Rodriguez-Palenzuela(2002). "Youth unemployment in the OECD : demographic shifts,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macroeconomic shocks."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155.
- Kagan, C., J. O'Reilly and B. Halpin(2005). *Job Opportunities for Whom? Labour Market Dynamics and Service Sector Employment Growth in*

- Germany and Britain*. London : Anglo-German Foundation.
- Kelly, E. and S. McGuinness(2013). “The Impact of the Recession on the Structure and Labour Market Success of NEET Youth in Ireland.” *Intereconomics/Review of European Economic Policy* 48 (4) : 224~230.
- Korenman, S., and D. Neumark(2000). “Cohort Crowding and Youth Labor Markets : A Cross National Analysis.” in D. Blanchflower and R. Freeman (eds.), *Youth Unemployment and Joblessness in Advanced Countries*.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57~105.
- Kumar, K.(2005). *From post-industrial to post-modern society : New theories of the contemporary world*(2nd ed.). Blackwell Publishing Ltd.
- Lindbeck, A., and D. J. Snower(1989). *The insider-outsider theory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MIT Press Books, 1.
- MacDonald, R.(2011). “Youth transitions,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Plus ça change, plus c’est la même chose?.” *Journal of Sociology* 47 (4) : 427~444.
- Mishra, R.(2002). 『지구적 사회정책을 향하여』(이혁구 · 박시중 옮김).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 Müller, W. and M. Gangl(2003). *Transitions from education to work in Europe : the integration of youth into EU labour market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Nickell, S. and R. Layard(1999).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Handbook of labor economics* 3 : 3029~3084.
- Noelke, C.(2011). “The consequences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for the youth labour market.” *MZSE AP*, 144.
- OECD(1994). *The OECD Jobs Study : Facts, Analysis, Strategie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_____(1999). *Classifying Educational Programmes : Manual for ISCED-97 Implementation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 _____(2016). *Society at a Glance 2016: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 Paris. DOI: <http://dx.doi.org/10.1787/9789264261488-en>(Accessed on 12 12 2016)
- Raffe, D.(2014). “Explaining National Differences in Education-work Transitions: Twenty years of research on transition systems.” *European Societies* 16 (2) : 175~193.
- Raudenbush, S. W. and A. S. Bryk(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Robson, K and M. C. E. Team(2008). “Becoming NEET in Europe : A comparison of predictors and later-life outcomes.” Paper presented at the Global Network on Inequality Mini-Conference.
- Salvisberg, A. and S. Sacchi(2013). “Labour Market Prospects of Swiss Career Entrants after Completion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uropean Societies* 16 (2) : 255~274.
- Shavit, Y. and W. Müller(1998). *From School to Work.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Evans Road, Cary, NC 27513.
- Soskice, D.(1990). “Wage determination : The changing role of institutions in advanced industrialized countrie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6 (4) : 36~61.
- Tamesberger, D., H. Leitgöb and J. Bacher(2014). “How to combat NEET? Evidence from Austria.” *Intereconomics* 49 (4) : 221~227.
- Van der Velden, R. K. and M. H. Wolbers(2003). “The integration of young people into the labour market: The role of training systems and labour market regulation.” in Müller, W. and Gangl, M. (eds.). *Transitions from education to work in Europe : the integration of youth into EU labour markets* (pp.186~21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isser, J.(2015). Database o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rade Unions, Wage Setting,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Pacts [ICTWSS] 5.0, Released in April 2015. Amsterdam Institute for Advanced Labour Studies.

- Walther, A.(2006). “Regimes of youth transitions : Choice, flexibility and security in young people’s experiences across different European contexts.” *Young* 14 (2) : 119~139.
- Zimmermann, K. F., C. Biavaschi, W. Eichhorst, Giulietti, C., M. J. Kendzia, A. Muravyev and R. Schmidl(2013). *Youth un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Citeseer.

〈부록 1〉 LIS 분석자료의 원자료 : 분석대상 18~34세(N=331,611)

dataset	원자료명	사례 수
AU08	Survey of Income and Housing Costs	2,224
AU10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and Survey of Income and Housing	3,220
AT94	European Household Panel	707
AT00	European Household Panel	710
AT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113
BE95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98
BE00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349
CA00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SLID)	6,811
CA04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SLID)	7,118
CA07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SLID)	6,634
CA10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SLID)	5,805
CZ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951
CZ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350
CZ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734
DK00	Law Model	21,971
DK04	Law Model	20,800
EE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094
EE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114
EE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114
FR94	Family Budget Survey (BdF)	2,146
FR00	Family Budget Survey (BdF)	2,115
FR05	Family Budget Survey (BdF)	2,177
DE94	German Social Economic Panel Study (GSOEP)	2,019
DE00	German Social Economic Panel Study (GSOEP)	2,988
DE04	German Social Economic Panel Study (GSOEP)	2,689
DE07	German Social Economic Panel Study (GSOEP)	2,418
DE10	German Social Economic Panel Study (GSOEP)	2,480
GR95	Household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Survey	1,303
GR00	Household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Survey	1,179
GR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593
GR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687
GR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245
HU94	Household Monitor Survey	444
HU99	Household Monitor Survey	414
HU05	Household Monitor Survey	419

〈부록 1〉의 계속

dataset	원자료명	사례 수
HU07	Household Monitor Survey	447
HU09	Household Monitor Survey	446
IS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976
IS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059
IS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013
IE95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1,253
IE00	Living in Ireland Survey / IE ECHP	972
IE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435
IE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089
IE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816
LU97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883
LU00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700
LU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946
LU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872
LU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056
MX96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ENIGH)	6,540
MX00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ENIGH)	4,099
MX04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ENIGH)	9,111
MX08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ENIGH)	12,791
MX10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ENIGH)	9,587
NL99	Socio-Economic Panel Survey	1,075
NL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171
PL99	Household Budget Survey	6,403
PL04	Household Budget Survey	7,606
PL07	Household Budget Survey	8,814
PL10	Household Budget Survey	8,627
SK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677
SK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895
SK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1,802
SI04	Household Budget Survey	1,177
SI07	Household Budget Survey	1,200
SI10	Household Budget Survey	1,109
ES95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2,011
ES00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1,696
ES04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4,500
ES07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3,509

〈부록 1〉의 계속

dataset	원자료명	사례 수
ES10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2,871
UK99	Family Resources Survey (FRS)	5,157
UK04	Family Resources Survey (FRS)	5,436
UK07	Family Resources Survey (FRS)	4,634
UK10	Family Resources Survey (FRS)	4,488
US94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March Supplement	13,956
US00	Current Population Survey (CPS), March Supplement	18,047
US04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17,162
US07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17,403
US10	Current Population Survey,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17,661

주 : ECHP, EU-SILC의 국가별 조사명은 다를 수 있음.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Youth NEETs in OECD Countries :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olicies and Industrial Shift

Park Mi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al structural causes of the youth NEETs(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This study focused especially structural shift from manufacturing industry to service industry and social polic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multilevel linear probability model to analyze the LIS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with combined cross-country and historical micro datasets. This study included 331,611 young persons included in 81 datasets (from 1995 to 2010) of 22 OECD countries. As a result, a 1% p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employment increased the NEET probability of Youth by 0.61% p. However, the influence of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varied depending on education system, labor market and welfare policies. The higher the selectivity of the education system, the higher the rate of collective bargaining,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active labor market and the replacement rate of unemployment-related benefits, industrial change was shown to offset the increased probability of falling into NEET. This study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based on these results.

Keywords : NEETs, jobless youth, moderating effects, multilevel model, industrial shift

노동정책연구
2017. 제17권 제3호 pp.45~75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조선주*
민현주**

본 논문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의 의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2015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한 것이다. 헤크만의 2단계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이 좋을수록 경제활동참가 및 임금이 높을 것인지, (2)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은 경제활동참가를 낮출 것인지, (3) 국가별로 결과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 변수인 모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 및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학력이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한국계),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에 각각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의 체류기간이 길지 않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세 이하의 자녀양육 여부는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모두의 경제활동참여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순가구 소득 또한 국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핵심용어 :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 전국다문화실태조사자료

논문접수일: 2017년 6월 12일, 심사외뢰일: 2017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7년 7월 19일

* (제1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sjcho@kwidimail.re.kr)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조교수(newrules@kyonggi.ac.kr)

I. 서론

UN은 지난 2007년 대한민국을 수민 국가로 선포하였다. 1997년 39만 명 내외였던 한국 체류 외국인¹⁾ 수는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16년 체류외국인은 2,049,411명으로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9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4%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에서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체류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96,216명)의 4.0%에 해당하며, 충청남도 인구(2,096,727명,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수 8위)에 근접하였다.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49.6%), 베트남(7.3%), 미국(6.8%), 태국(4.9%), 필리핀(2.8%)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 이후 베트남은 미국을 넘어 체류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으며, 이는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와 그 동반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10년 이후 체류외국인 연평균 증가율인 8.4%가 유지되면 2021년에는 체류외국인이 3백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법무부, 2016).

실제로 이민자²⁾의 유입을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지만 이민자의 유입은 유입국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 정책의 방향은 매우 논쟁적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이민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민의 주된 현상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

1) 체류외국인은 장기체류(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고 장기체류하는 자)이며 및 단기체류로 구분되며, 불법체류자는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외국인 현황이다(법무부, 2016).

2) 이민(移民, Immigration : 입국이민, Emigration : 출국이민)은 국제연합의 정의로는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행위 또는 그 타국에 정착 터를 잡고 살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주위에서 쓰이는 정의로는 좀 더 좁아서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장기체류비자를 받아 거주하지만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영주권을 취득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국제결혼, 투자, 해외취업, 난민 심사 등이 있다. 장기체류비자라 할지라도 유학, 어학연수, 외국인 노동자 등은 영주권을 받기 어려운 일시적인 체류이므로 이민으로 부르지는 않는다. 한편 귀화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이민과는 다르다(<https://namu.wiki/w/%EC%9D%B4%EB%AF%BC>, 2017.5. 검색).

되어 있으며, 난민이나 결혼이민, 가족이민 등은 인도적 측면이나 사회적 수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규용, 2014).

이러한 이민자 중 한국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³⁾는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약 24만 명에 이르고, 여성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한편 여성결혼여성이민자의 경우 출신국적이 중국 23.2%, 베트남 19.2%, 중국(한국계) 13.5%, 그 외 동남아시아 10.9%, 필리핀 10.1%, 일본 9.7%,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조선주 외, 2017), 이 중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출신 국적이 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상당수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으며, 한국 생활에 정착해 가면서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및 경제력 확보 등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고 있다(강혜정 외, 2012). 열악한 경제 상태에서는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할 수도 있으며,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 및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양인숙 외, 2011; 강혜정 외, 2012).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는 노동시장참여에 있어 이민자로서의 어려움과 기혼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모두 겪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노동시장참여에 있어 이민자 인적자본의 전이성은 출신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민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국가 출신 이민자의 경우 모국 인적자본은 해당 이민국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Friedberg, 2000; Sanromá et al., 2009). 또한 임신, 출산, 자녀양육도 이들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행위를 제약하고 있다(Hotz and Miller, 1988; Mroz, 1987; 김현숙 외, 2007; 최형재, 2008). 아울러 이민자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언어 등으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에서 각국 이민자들의 위치는 상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조선주 외, 2017)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이민자의 취·창업지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김이선 외, 2008; 장명선, 2009; 장명선 · 이옥경, 2008; 장서영 외, 2009; 정기선 외, 2007).

3) 결혼이민자는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이다. 2009년 이전은 F-2-1 및 F-1-3(국민의 배우자), 2010년 이후는 F-2-1 및 F-5-2(국민의 배우자), F-6(결혼이민, 2011.12.15 신설)이다.

강혜정·이규용(2012), 이규용 외(2014)의 연구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양인숙·김선헌(2011)의 연구도 그들의 취업 상황 및 취업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강혜정·이규용(2012)의 연구는 그들이 언급한 대로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인숙·김선헌(2011)의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지만 통제되어야 하는 변수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 조성호 외(2015b)의 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나 분석변인 중 하나를 국가더미로 사용하여 국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논의의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이민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본국에서의 경제상태이며, 이주국가에서 통합하는 과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결혼이주 후 경험하는 경제상태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의 경제 상태는 이민자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여건과 자녀가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양인숙 외,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상태를 보면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분포하고 있고, 남편과의 연령 차이가 크기 때문에(조성호 외, 2015a) 향후 한국인 남편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의 의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둘째,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의 기혼여성과 같이 자녀양육이 경제활동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인 66%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출신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선택하여 출신국가에 따라 그 영향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오랜 이민의 경험을 가진 서구와 달리 한국사회는 이민의 역사가 짧고 단일 민족 의식이 강하며, 특히 이민이 압축적이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경험과는 다른 특수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한국 가족으로 편입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사회의 정착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며, 2010년 이후 들어 결혼이민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한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적응은 두 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 하나는 국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이주여성이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소득으로 측정한 경제적 수준이다. 특히 경제적 적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Silver(1994)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문화와 관련성이다. 비록 사회적 배제가 전통적인 경제적 빈곤의 개념을 넘어 사회 구성원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 문화, 의료, 사회참여 등의 광범위한 문제를 포괄하고 이를 통해 빈곤문제를 설명하려는 시도이기는 하지만(심창학, 2001, 2003), 경제적 빈곤이 소위 교육, 문화, 의료, 사회참여 등의 배제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구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안정성은 한 개인이 해당 사회에서의 적응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여성결혼이민자와 해당 가구의 공통의 이해로서 경제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이자, 이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접근하는 단초로서 의미를 갖는다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여성으로서 시민권 보장이라는 개별적 이해와 관련된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Orloff(199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시민권의 핵심적 주제가 되는 여성의 독립적인 가구형성유지는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권을 통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이혼율로 인해 결혼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

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한국사회에 안정적 적응을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된다(윤홍식 외, 2005; 윤홍식, 2004). 즉 경제적 적응은 가구라는 공통의 이해와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별적 이해를 함께 고려한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먼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중요성과 그 의의에 관한 것들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중 다수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민과 국제결혼이 경제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영하 외, 2008).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결혼여성이민자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정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착을 위한 여러 정부지원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의 정착과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경제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손기영, 2010).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적응은 취업여부와 가구소득으로 측정한 경제수준으로 가늠할 수 있다(설동훈 외, 2005). 경제적 빈곤은 교육, 문화, 의료, 사회참여 등의 배제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구소득이라는 경제적 안정성은 한 개인이 해당 사회에서의 적응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양인숙 외, 2011).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여부는 시민권 보장이라는 이해와 관련된 문제로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박능후 외(2010)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상태가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양인숙 외(2011)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수동적인 정책 시혜의 대상에서 벗어나 한국에 정착하면서 생기게 되는 문화적 갈등과 생활적응 문제, 결혼생활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이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다. 인적자본의 축적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Becker, 1993),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은 그 분야에 대한 기술의 숙련도를 의미하며(Mincer, 1958, 1974), 이 두 요인은 임금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더불어, 가장 많이 논의되는 인적자본은 교육이다. Ferrer and Riddell

(2008)은 이민자들의 인적자본과 소득과의 관계에 대해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자에 비하여 나중에 이민 온 자의 학력(교육연수)에 의한 소득 상승효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Adamuti-Trache and Sweet(2005)와 Fong and Cao(2009)의 연구 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연구로 양인숙 외(2011)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인적자본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적용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Ferrer and Riddell, 2008), 인적자본을 이민자의 연구에 적용할 때에는 이민국가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이민국가(destination country)가 출신국가(origin country)보다 더욱 발전된 나라일 경우, 출신국의 학위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2004), 이민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그 국가 노동시장의 수요와 매치가 잘 되기 때문에 이민국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Long, 1980; Sanromá et al., 2009). 따라서 이민자의 인적자본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에게는 모국(origin country)에서 취득한 인적자본과 이민국가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직무경험 포함)을 구분하고 있다(Chiswick, 2007; Friedberg, 2000; Sanromá et al., 2009).

이처럼 서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의 상황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된 반면, 그동안 외국인들의 국내 이주가 활발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이민자, 특히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민자들의 노동공급(노동시장 참여여부, 노동시간)(강혜정 외, 2012; 양인숙 · 김선헌, 2011; 이규용 외, 2011, 2014)에 관한 연구,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김이선 외, 2008; 장명선, 2009; 장명선 · 이옥경, 2009; 장서영 외, 2009; 정기선 외, 2007). 조성호 외(2015a)에서는 2012년 다문화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조성호 외(2015b)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적자본, 한국생활, 인구사회학적 · 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민길 외(2016)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적별 임금차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셋째는 결혼여성이민자와 자녀양육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중 하나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꼽을 수 있다(최형성, 2009). 이들은 한국사회 전반에 급속하게 나타나는 저출산의 현상과는 반대로 2008년의 경우 2007년 대비 31%의 자녀수의 증가를 보일 정도(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2008)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집단이다. 이는 종교적인 이유와 더불어 자녀 출산을 통해 한국에서의 정착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수 상황이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최형성, 2009)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의 높은 자녀 출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시댁식구나 자의에 의해 자녀양육 활동 수행을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구수연, 2007; 김민정·유명기·이혜경, 2006; 전홍주·배소영·곽금주, 2008).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보여주고 있는 과잉행동장애, 폭력성, 학교 수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 언어발달 지체(교육인적자원부, 2006), 취학아동의 17.6%가 겪는 왕따 경험(보건복지부, 2005) 등은 이들 대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빈곤층(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의 잠재적인 문제들과 복합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우려를 낳는다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에 관한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과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더욱 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이 이들의 임금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알기 어렵고, 이들의 양육에 대한 설명력도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상기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 요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요인들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요인은 본인의 임금, 비근로소득과 임신·출산·육아 등 자녀 관련 요소 등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의 임금은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 여건과 본인의 인적자본 수준 등에 연계되는 개념이며, 비근로소득과 자녀 관련 요인은 기혼여성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에 연계되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이미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러

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는 고유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의 기혼여성과 같이 자녀양육이 유보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유보임금이 경제활동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그 국적이 상당히 다양하며,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 해도 국가마다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국적별 분석을 병행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의 대상 및 모형의 설정

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이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고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모집단의 특성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대 장점이 있기 때문에(조성호 외, 2015a, 2015b) 본 자료를 사용하였다.⁴⁾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09년 처음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정해숙 외, 2016). 2015년 조사는 세 번째 조사이며, 통계청을 통

4) 다문화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들은 독자적으로 조사한 소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 많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자 본인이 중점을 두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이미 조사된 데이터보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약점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국 규모의 데이터인 다문화조사를 이용하여 소규모의 독자적인 데이터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조성호 외, 2015a, 2015b).

해 일반에게 원자료가 공개된 것은 2015년 자료가 처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접근성 및 분석의 신뢰성을 위해 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 표본은 전국의 다문화가족 17,849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총 17,109명,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총 15,540명, 만 9~24세의 결혼이민자 자녀 총 6,079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임금합수 추정을 위해 만 15세부터 64세까지 총 16,575명의 자료를 추출하고, 그 다음으로 이 중 중국 여성결혼이민자 3,231명, 중국(한국계)⁵⁾ 여성결혼이민자 1,863명,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2,719명,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1,425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구구성표에는 가구구성원, 가구특성의 항목이 있으며,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조사표에는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상태, 기타 일반사항이 있고, 배우자 조사표에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조사표와 항목이 유사하나 자녀양육 및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에 관한 내용이 2012년과 달리 추가 조사되었다. 만 9~24세 자녀에 대해서는 가정생활, 성장배경과 학교생활, 정서 및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의 항목이 조사되었다.

2. 모형의 설정 및 변수의 설명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 모형을 사용하였다.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 모형은 표본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의를 교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료의 경우 전체 표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일정한 임금 값을 가진 표본과 참여하지 않아서 임금이 0인 표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이 0인 표본을 제외하고, 임금에 대한 추정을 하게 되면 표본선택에 의한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하게 된다.

5) 행정자치부(2016)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를 추출 시, 출신국적이 '중국'인 국적취득자 중 귀화 시 이름이 중국식이면 출신국적을 '중국'으로 처리하고, 귀화 시 이름이 한국식이면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상 개명사항을 확인하여 중국식 이름에서 한국식으로 개명하였으면 '중국', 개명한 이력이 없거나 개명 전에도 한국식 이름이면 '한국계중국인'으로 선택하여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한국계)는 조선족으로 통칭하고 있다.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함수

$$Z_i^* = \alpha W_i + \varepsilon_i$$

where

$$Z_i = 1 \text{ if } Z_i^* > 0$$

$$Z_i = 0 \text{ if } Z_i^* \leq 0$$

임금에 대한 함수

$$Y_i^* = \beta X_i + \mu_i$$

where

$$Y_i = Y_i^* \text{ if } Z_i = 1$$

$$Y_i = 0 \text{ if } Z_i = 0$$

Y_i^* 는 임금을 나타내는 연속 잠재변수이고, Y_i 는 실제 관찰된 임금을 나타내는 관찰변수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관찰변수 Y_i 는 0의 값을 갖는다. Z_i^* 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잠재변수이고, Z_i 는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나타내는 관찰변수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W_i 와 X_i 는 각각 경제활동참여와 임금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벡터이고, α 와 β 는 각각에 대한 회귀계수들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ε_i 와 μ_i 는 각 회귀식의 오차항을 의미한다.

이때, $Z_i = 1$,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임금에 대한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다.

$$\begin{aligned} Y_i^* &= \beta X_i + \mu_i \\ &= \beta X_i + E(\mu_i | Z_i^* > 0) + \eta_i \\ &= \beta X_i + E(\mu_i | \varepsilon_i > -W_i \alpha) + \eta_i \end{aligned}$$

이 경우 임금함수의 오차항 μ_i 는 조건부기대값 $E(\mu_i | \varepsilon_i > -W_i \alpha)$ 과 무작위변수 η_i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만약 μ_i 와 ε_i 가 독립적이라면, $\varepsilon_i > -W_i \alpha$ 조건하에서도 μ_i 의 기댓값은 0이 되어 기존의 임금함수와 동일해진다. 그러나 μ_i

와 ε_i 가 서로 상관을 갖는다면, μ_i 의 조건부 기댓값 $E(\mu_i | \varepsilon_i > -W_i\alpha)$ 는 0이 아니다. 그렇다면 Y_i 는 $E(\mu_i | \varepsilon_i > -W_i\alpha)$ 만큼의 편의를 갖게 된다. 실제로 경제 활동 참여여부는 임금과 무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함수의 오차항은 서로 상관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 모형의 핵심은 선택편의가 오차항 μ_i 를 $E(\mu_i | \varepsilon_i > -W_i\alpha)$ 만큼 편위(bias)되므로 이 조건부 기댓값을 추정하여 모형에 변수로 투입함으로써 편의를 보정하는 것이다. Heckman(1979) 모형에서는 μ_i 와 ε_i 가 이변량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고 1단계에서 프로빗 모형을 통해 $E(\mu_i | \varepsilon_i > -W_i\alpha)$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mu_i | \varepsilon_i > -W_i\alpha) = \sigma_{\mu\varepsilon} \cdot \frac{\phi(-W_i\alpha)}{1 - \Phi(-W_i\alpha)} = \sigma_{\mu\varepsilon} \cdot \lambda(-W_i\alpha)$$

ϕ 는 표준정규 확률밀도함수이고, Φ 는 표준정규 누적분포함수이다. 이 함수들의 비율로 표현되고 있는 $\lambda(-W_i\alpha)$ 는 IMR(Inverse Mill's ratio) 또는 위험율(hazard rate)이라 한다(Greene, 2000). λ_i 는 각각의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이 경제활동참여 여성결혼이민자 표본으로부터 배제될 순간적 확률을 보여주는 선택확률의 변수이다. 또한 실제 선택이 일어난 후 임금함수에서 발생하는 오차항의 조건부 기댓값을 의미하므로 실제 임금함수에서 λ_i 만큼의 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의 절단회귀분석에서 λ_i 변수를 새로운 독립변수로 추가하게 되면 0이 아닌 오차항의 기댓값을 보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반영한 2단계의 절단 회귀분석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Y_i | Z_i = 1, X_i) = X_i\beta + \sigma_{\mu\varepsilon} \lambda_i$$

만약 λ_i 의 회귀계수인 $\sigma_{\mu\varepsilon}$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μ_i 와 ε_i 의 공분산 $\sigma_{\mu\varepsilon}$ 는 0, 즉 μ_i 와 ε_i 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 경우 표본을 선택한 뒤에도 임금함수의 오차항은 0이 되므로 표본선택편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Heckman(1979)의 2단계 추정 모형은 λ_i 변수가 가지는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통해 표본선택편의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이 좋을수록 경제활동참가 및 임금이 높을 것이다.
- (2)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은 유보임금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동참가를 낮출 것이다.
- (3) 국가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다음은 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피설명변수로는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시간당임금의 자연로그값을 사용하였다. 경제활동 참가여부는 “당신은 지난 1주일(2015. 6. 28~7. 4)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더미변수이다. 시간당임금은 월 평균임금을 월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월평균근로시간은 “지난 1주일 동안 실제 몇 시간 정도 일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일한 시간을 응답한 변수로 해당 시간에 4주를 곱하여 구성하였다. 월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2015. 4. 1~6. 30) 동안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세금공제 전)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였습니까?’라는 질문에 ‘50만 원 미만’부터 50만 원 간격으로 ‘500만 원 이상’의 총 12개 카테고리로 응답을 하고 있는 변수로, 각 카테고리의 중간 값, 예를 들어 ‘50만~1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75만 원’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하였다.⁶⁾

설명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 변수와 한국에서의 자녀양육 변수로 구성하였다. 인적자본변수는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본국 직무 경험이며, 자녀양육 변수는 18세 이하의 자녀유무이다. 남성인 경우 1, 연령은 연속변수로 구성⁷⁾하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상인 경우 1의 값의 갖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출신국에서의 학위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6) 단, ‘50만 원 미만’은 25만 원, ‘500만 원 이상’은 525만 원으로 구성하였다.

7) 학력을 더미변수를 활용하는 것이 학력 효과의 비선형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각 국가별로 특성에 따라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하고(예, 필리핀: 고졸 이상이 92%),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004). 반면, 이민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그 국가 노동시장의 수요와 매치가 잘 되거나 이민국이 출신국보다 선진국일 경우는 더욱 이민국에서의 학력이 노동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한국에 오기 전 출신국에서 일한 경험을 나타낸 변수로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다. 일에 대한 경험은 그 분야에 대한 기술의 숙련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험은 취업 및 임금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Mincer, 1958, 1974), 이 또한 이주노동자의 학력과 마찬가지로 출신국에서의 일한 경험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Matto et al., 2008). 한국어 능력은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라는 질문에 말하기, 듣기, 일기, 쓰기 영역별로 ‘1’의 ‘매우 잘한다’에서부터 ‘5’의 ‘전혀 못한다’의 5개 척도로 되어 있는데 해당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민국의 언어 능력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자리를 찾을 때부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Chiswick and Miller, 2007; Shields and Wheatley-Price, 2002). 학력은 교육연수로 바꾸어 구성하였다. 18세 이하 자녀 유무(김정호, 2010; 조선주, 2009)는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자녀관련 변수는 기혼여성의 유보임금에 영향을 미치며, 유보임금은 노동시장 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참여식에만 사용하였다(조선주, 2009).

기타 변수로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 가구거주지역을 사용하였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결혼이민자 개인의 소득은 제외한 순가구소득으로서 100만원 미만, 100만~200만 원 미만, 200만~300만 원 미만, 300만~400만 원 미만, 500만~600만 원 미만, 600만~7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어 구간의 중간 값으로 바꾸어 구성하였다. 가구의 거주지역이 동부(도시)이면 1의 값인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거주지역은 노동수요적 측면인 노동시장환경 관련 요인으로 지역 등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채구묵, 2007). 아울러 해당 변수는 노동시장 참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로 참여식에만 사용하였다(조선주, 2009). 분석변수의 기술통계값은 <표 1>, <표 2>와 같다.

4개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시간당임금은 평균 6천 원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한국계) 7천6백 원, 중국 6천8백 원, 베트남 5천8백 원, 필리핀 3천4백 원으

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연령은 36.5세로 나타났고,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가 44.4세로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다. 한편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은 28.6세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균학력은 11.4년이었는데,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학력은 13.3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은 10.1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순가구소득은 226.7만 원이었으며,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순가구소득은 284.8만 원,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는 204.6만 원,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183.4만 원,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는 157.2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개인임금은 가장 높으나 가구소득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개인임금은 가장 낮으나 가구소득은 두 번째로 높다.

〈표 1〉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 전체

변수	단위	평균	변수	단위	평균
ln(시간당임금)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	-.838	한국어_말하기	1:매우 잘함 - 5:전혀 못함	2.235
시간당임금	만 원	.601	한국어_듣기		2.129
월평균임금	만 원	114.469	한국어_읽기		2.270
경제활동	참여=1	.984	한국어_쓰기		2.495
연령	세	36.594	8세 이하 자녀여부	있음=1	.545
학력	고졸 이상=1	.470	가구거주지역	동부 (도시)=1	.628
모국에서 일한 경험	있음=1	.806	ln(순가구소득)	순가구 소득의 로그값	5.240
한국 체류기간	연수	9.054	순가구소득	만원	226.761

〈표 2〉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 : 국가별

변수	단위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평균	평균	평균	평균
ln(시간당 임금)	시간당임금의 로그값	-.766	-.680	-1.008	-.949
시간당임금	만 원	.686	.764	.582	.349
월평균임금	만 원	122.192	129.084	98.331	102.192
경제활동	참여=1	.978	.986	.988	.992
연령	세	39.712	44.428	28.699	34.348
학력	고졸 이상=1	.499	.550	.429	.375
학력(고졸 이상)	이상=1	.499	.550	.429	.375
모국에서 일한 경험	있음=1	.833	.843	.738	.828
한국어_말하기	1 : 매우 잘함 ~ 5 : 전혀 못함	2.021	1.449	2.761	2.746
한국어_듣기		1.930	1.432	2.605	2.581
한국어_읽기		2.103	1.552	2.751	2.672
한국어_쓰기		2.319	1.680	2.998	3.001
한국체류기간	연수	9.855	12.136	6.206	8.640
8세 이하 자녀 여부	있음=1	.449	.281	.795	.628
가구거주지역	동부(도시)=1	.654	.747	.546	.569
ln(순가구소득)	순가구소득의 로그값	5.510	4.875	5.046	5.110
순가구소득	만 원	284.814	157.265	183.401	204.642

IV. 실증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국가별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Heckman (1979)의 2단계 추정 모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 3>, <표 4>에서 전체, 중국, 베트남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λ_i 의 회귀계수가 $\sigma_{\mu\epsilon}$ 가 유의수준 0.01, 0.05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μ_i 와 ϵ_i 의 공분산 $\sigma_{\mu\epsilon}$ 는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한다는 의미이다. 즉, 임금의 오차항 μ_i 와 경제활동참여 확률의 오차항 ϵ_i 가 상관을 갖는다는 것으로 표본선택에 편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각 단계별로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 전체의 경우(표 3)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순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가구가 전반적인 가구소득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 상태에서는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과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 및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8세 이상 자녀여부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는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보다 경제활동참여를 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임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한국어 듣기능력이 좋을수록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순가구 소득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임금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표 4)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8세 이하 자녀여부는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 임금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모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을수록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인임금은 한국어 듣기와 쓰기를 잘할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둘째로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표 4)는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순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한국계) 여성결혼 이민자는 상당수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으며, 한국 생활에 정착해 가면서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및 경제력 확보 등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고 있다(강혜정 외, 2012)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가구의 전반적인 가구소득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 상태에서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과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 및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는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임금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이는 경제활동참여자(가)가 구분된 상황에서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독자력 영향력이 희석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실증분석의 기본모형은 Mincer(1974)가 제시한 인적자본 형성모형이다.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을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의 저장(stock) 수준의 함수로 가정한다. 따라서 일련의 양의 순투자는 일생에 걸쳐 임금수준의 증가를 가져온다. 반대로 순투자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 즉 생산기술이 마모되는 경우에는 임금수준이 감소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인적자본 이론에서는 임금함수는 경력단절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남성의 임금을 상당히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호, 2010). 하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는 출산 및 육아기간 동안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우 학업기간과 취업기간에 획득한 기술이 마모될 수 있다. 즉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생산기술이 마모되어 임금

8) 해당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 고학력 결혼이민자들은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편하지만 임금은 낮은 일자리를 가지는 반면, 저학력자들은 상대적으로 힘든 일자리 환경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학력별로 중산업이나 직종 분포가 다를 경우 상기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는 산업이나 직종에 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해당 내용을 반영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민국가가 출신국가보다 더욱 발전된 나라일 경우, 출신국의 학위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2004)

한국어 읽기 능력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해당 이민자의 경우 다른 출신국의 이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표 2), 이들이 설문응답 시 말하기, 듣기 등 보다 읽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 임금은 순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여성결혼이민자와 비교하였을 때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반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로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표 4)는 순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는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으며, 한국 생활에 정착해가면서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및 경제력 확보 등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강혜정 외, 2012).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가구가 전반적인 가구소득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 상태에서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과 능동적인 시민성 확보 및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8세 이하 자녀유무는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표 4)는 한국어 읽기 능력이 좋지 않아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중국(한국계) 여성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고졸 학력 이상일수록 임금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세 이하의 자녀유무는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임금은 순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실증분석 결과 : 전체

변수명		1단계	2단계
		추정치(표준편차)	추정치(표준편차)
인적자본	연령	.013* (.007)	.024*** (.003)
	학력(고졸더미)	.160* (.090)	.230*** (.050)
	모국에서 일한 경험	.116 (.106)	.146** (.055)
	한국어_말하기	-.024 (.115)	.008 (.048)
	한국어_듣기	-.114 (.123)	-.207*** (.051)
	한국어_읽기	.169 (.104)	.247*** (.051)
	한국어_쓰기	.065 (.083)	.090** (.037)
	한국체류기간	-.008 (.010)	-.017** (.005)
자녀	8세 이하 자녀유무	-.017 (.108)	-
가구	가구거주지역	-.141 (.096)	-
	ln(순가구소득)	.141** (.057)	.029 (.037)
출신국 (ref. 필리핀)	국가더미_중국	-.516** (.179)	-.422*** (.117)
	국가더미_중국(한)	-.221 (.197)	-.093 (.085)
	국가더미_베트남	-.104 (.182)	-.106 (.068)
$\lambda(\text{IMR})$		-	17.570** (2.298)
상수		1.003** (.473)	-2.863*** (.405)
Pseudo R^2		0.041	-
R-squared		-	0.027
Adj R-squared		-	0.025

주: * $p < 0.1$, ** $p < 0.05$, *** $p < 0.01$.

〈표 4〉 실증분석 결과 :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1 단계					
변수명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추정치(표준편차)			
인적 자본	연령	.010 (.009)	.016 (.013)	.009 (.021)	.028 (.037)
	학력(고졸더미)	.249* (.130)	.362* (.214)	-.017 (.195)	-.182 (.335)
	모국에서 일한 경험	.146 (.157)	.060 (.267)	.100 (.209)	.023 (.420)
	한국어_말하기	.124 (.194)	-.190 (.329)	-.038 (.225)	-.381 (.312)
	한국어_듣기	-.093 (.206)	-.518 (.390)	-.129 (.219)	-.142 (.336)
	한국어_읽기	.235 (.157)	.815* (.376)	-.266 (.220)	.537* (.305)
	한국어_쓰기	-.102 (.116)	-.020 (.229)	.460** (.210)	.017 (.257)
	한국체류기간	-.016 (.014)	.023 (.024)	-.019 (.210)	-.013 (.055)
자녀	8세 이하 자녀유무	-.008 (.157)	.008 (.272)	-.180 (.256)	.271 (.371)
가구	가구거주지역	-.210 (.143)	.033 (.234)	-.230 (.202)	.172 (.334)
	ln(순가구소득)	-.029 (.114)	.263* (.105)	.248** (.111)	.143 (.184)
상수		1.559 (.877)	-.418 (.986)	.974 (.938)	.715 (1.582)
Pseudo R ²		0.044	0.091	0.066	0.106

〈표 4〉의 계속

2단계					
변수명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추정치(표준편차)			
인적 자본	연령	.041*** (.004)	-.007 (.005)	.001 (.008)	-.025** (.010)
	학력(고졸더미)	.540*** (.087)	-.215** (.099)	.100 (.078)	-.217* (.118)
	모국에서 일한 경험	.341*** (.093)	-.182 (.117)	.055 (.088)	-.105 (.140)
	한국어_말하기	.287** (.086)	.125 (.144)	-.059 (.082)	.213* (.125)
	한국어_듣기	-.230* (.085)	-.181 (.152)	-.075 (.083)	-.190** (.114)
	한국어_읽기	.437*** (.064)	.131 (.101)	-.100 (.079)	.000 (.127)
	한국어_쓰기	-.209** (.064)	-.003 (.101)	.152 (.095)	.084 (.085)
	한국체류기간	-.039*** (.007)	-.016 (.010)	-.001 (.014)	.017 (.016)
가구	ln(순가구소득)	.314*** (.056)	-.417*** (.065)	-.104 (.071)	-.389*** (.070)
$\lambda(\text{IMR})$		19.215*** (2.326)	-2.907 (2.136)	9.614** (2.832)	-2.035 (3.415)
상수		-5.925*** (.482)	2.084** (.658)	-.737 (.571)	1.530** (.589)
R-squared		0.059	0.065	0.032	0.056
Adj R-squared		0.055	0.057	0.026	0.043

주: * $p < 0.1$, ** $p < 0.05$, *** $p < 0.01$.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

으며, 여성결혼이민자도 한국의 기혼여성과 같이 자녀양육이 경제활동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출신국가에 따라 그 영향력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인적자본 변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 전체의 경우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즉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 및 임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중국(한국계)와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학력이 고졸 이상일수록 즉, 높을수록 임금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학력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민국가가 출신국가보다 더욱 발전된 나라일 경우, 출신국의 학위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어 말하기, 듣기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의 체류기간이 짧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임금함수 추정에서 이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조성호 외, 2015) 본 분석에서는 중국 출신의 이민자들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이 여성결혼이민자라는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며, 이들이 여성으로서 갖는 노동시장 경험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하여 전업주부로 있던 여성들이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후 또는 경제적 상황 악화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 노동시장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상향이동(Kossoudji, 1998)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자녀양육 변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민자에게 8세 이하의 자녀유무는 경제활동참여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에서 자녀, 특히 미취학 연령의 자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양승

주, 1995; 서병선·임찬영, 2004; 김현숙, 2005), 본 실증분석 결과는 여성결혼 이민자 노동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노동시장 참가율을 보이는 이유는 결혼 및 자녀출산·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인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미취학 자녀유무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국내 이민자 계층의 상당수가 저소득 계층이나 고용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이규용 외, 2014) 이들의 상당수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한국 생활에 정착해 가면서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및 경제력 확보 등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결과라 하겠다.

이 밖에 임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가구소득이 있는데, 순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가구가 전반적인 가구소득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상태에서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연구는 타 가구원의 소득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서병선·임찬영, 2004; 김현숙, 2005; 황수경, 2002). 이는 비노동소득이 증가할 경우 정상재인 여가의 소비는 늘고 열위재인 노동공급은 줄어든다는 소득효과를 잘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은 소득효과를 통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데, 배우자 소득이 소득효과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외에 여성의 관측되지 않은 능력이나 자원의 측면을 대표하고 있는데 따른 것(황수경, 2004)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 요인들을 고려한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은 이미 국내외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는 고유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발전에 대한 초석이 되는 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가구단위로 표본을 이중추출하여 표집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가구 내 개인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

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인적자본 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본 국적에 따라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으며, 자녀양육 변수(어린자녀 유무)는 경제활동참여와 무관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가구 변수 등을 고려한 보편성과 국적 및 인적자본 변수를 고려한 차별성을 가지고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으며, 향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정확한 직무경험 및 직종이 반영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엄밀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정 · 이규용(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9 (2) : 49~73.
-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문화관광부 · 농림부 외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 구수연(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0 (12) : 95~124.
- 김민길 · 김영직 · 조민호(2016).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적별 임금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5 (4) : 65~106.
- 김민정 · 유명기 · 이해경 · 정기선(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 (1) : 159~193.
- 김영하 · 김정희 · 이경숙(2008).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교육 전문강사 양성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대구경북연구원.
- 김이선 · 양인숙 · 황정임 · 고혜원(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 · 경제적 통합 진전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 추진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 김정호(2010). 『여성의 경력단절과 인적자본 형성 분석』. KDI.
- 김현숙(2005). 「기혼여성 노동공급과 자녀보육 및 교육비용」. 한국경제학회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현숙·류덕현·민희철(2007).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 박능후·선남이(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이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다문화의식』.
- 법무부(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12월호』(URL :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 서병선·임찬영(2004). 「가계생산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국제경제연구』 10 (1) : 141~167.
- 설동훈·윤형식(2005). 「국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 손기영(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의 특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 (1) : 19~36.
- 심창학(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4.
- _____(2003).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의 국가별 비교」. 『유럽연구』 18 : 209~238.
- 양승주(1995). 「기혼여성의 노동공급행태 분석」. 『한국인구학회지』 18 (1) : 63~87.
- 양인숙·김선희(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경영연구』 34 (1) : 237~266.
- 윤홍식(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 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 5~28.
- 윤홍식·김혜영·이은주(2005). 「절대 및 차상위 빈곤선을 통해본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관한 연구: 저소득 여성가구주 가구를

-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3) : 263~293.
- 이규용(2014).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외국인력 정책 방향 토론회 자료.
- 이규용·노용진·이정민·이혜경·정기선·최서리(2014).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장명선(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명선·이옥경(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서영·김이선·이로미·장인자·유지영(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전홍주·배소영·곽금주(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 지원의 실제와 의미 :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3) : 161~186.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2007). 『경기도 내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해숙·김이선·이택면·마경희·최윤정·박건표·동제연·황정미·이은아(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 조선주(2009).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연구」. 『노동정책연구』 9(3) : 29~54.
- 조선주·오현경(2017). 「우리나라 이민자의 특성과 노동공급」.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조성호·변수정(2015a).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함수 추정」. 『노동경제논집』 38 : 59~87.
- _____(2015b).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적 시사점」. 『노동정책연구』 15(2) : 25~55.
- 채구묵(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4) : 35~61.
- 최형성(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어린 아동의 문제행동 모형 탐색 : 중국,

- 필리핀, 베트남 출신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지』 30 (3) : 197~211.
- 최형재(2008). 『자녀교육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85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 행정자치부(2015).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 발표자료.
- _____(2016).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자치부 통계자료.
- 황수경(20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04).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단시간근로」. 『제5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Adamuti-Trache, M. and R. Sweet(2005).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Credentials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32 (2)(Summer 2005) : 177~201.
- Becker, Gary S.(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iswick, B. R., and P. W. Miller(2007). “The International Transferability of Immigrants’ Human Capital Skills.” IZA Discussion Paper No. 2670. Bonn, Germany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Retrieved from <http://ftp.iza.org/dp2670.pdf>.
- Ferrer, A. and W. C. Riddell(2008). “Education, credentials, and immigrant earning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41(1) February/février 2008 : 186~216.
- Fong, E. and X. Cao(2009). “Effects of Foreign Education on Immigrant

- Earnings.” *Canadaian Studies in Population* 36 (1-2) (Spring/Summer 2009) : 87~110.
- Friedberg, Rachel M.(2000). “You Can’t Take It with you? Immigrant Assimilation and the Portability of Human Capital.” *Journal of Labor Economics* 18 (2) : 221~251.
- Greene, William(2000). *Econometric Analysis*, 4th Ed., Wiley.
- Hotz, V. J. and R. Miller(1988). “An Empirical Analysis of Life Cycle Fertility and Female Labor Supply.” *Econometrica* 56 : 91~118.
- Kanas, A., and F. van Tubergen(2009). “The Impact of Origin and Host Country Schooling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Immigrants.” *Social Forces* 88 (2) : 893~916.
- Kossoudji SA, Cobb-Clark DA(1998). Coming Out of the Shadows: Learning about Legal Status and Wages from the Legalized Populayion, Miemo.
- Long, James E.(1980). “The Effect of Americanization on Earnings: Some Evidence for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88 (3) (June 1980) : 620~629.
- Matto, A., I. C. Neagu and C. Ozden(2008). “Brain Waste? Educated Immigrants in the US Labor Marke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7 (2) : 255~269.
- Mincer, J.(1958).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 (4) : 281~302.
- _____(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ew York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Mroz(1987). “The Sensitivity of an Empirical Model of Married Women's Hours of Work to Economic and Statistical Assumptions,” *Econometrica* 55 (4) (Jul., 1987) : 765~799.
- Sanromá, E., R. Ramos and H. Simón(2009). Immigrant Wages in the Spanish Labour Market : Does the Origin of Human Capital Matter? (IZA Discussion Paper No. 4157). Bonn, Germany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IZA).

Shields, M. A. and S. Wheatley-Price(2002). "The English Language Fluency and Occupational Success of Ethnic Minority Immigrant Men Living in English 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 (1) : 137~160.

Silver, H.(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 : 531~578.

Zeng, Z., and Y. Xie(2004). "Asian-Americans' Earnings Disadvantage Reexamined : The Role of Place of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 (5) : 1075~1108.

abstract

A Study on the Wage Determinants among the Asian
Female Married Immigrants : Chinese, Korean-Chinese,
Vietnamese, Pilipinas

Cho Sunjoo · Min Hyunjoo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the wages among Asian female married immigrants from China, China_Korea, Vietnam and Philippines, using the ‘2015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adopts the Heckman’s two stage model to correct the selection bias in regard to the labor supply, with a special attention to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the proficiency at Korean language and the presence of the young child (ren) at home on the wages.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educational attainments from the mother country are likely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entering the labor market, to be related to the wage rates among immigrant women. For immigrant women from mainland China, more educational attainments are likely to lower the probability of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while those are likely to increase the wage for immigrant women from Korean-Chinese and Philippines. Second, immigrant married women are likely to get higher earnings as they attain better ability of listening, comprehending and writing Korean. Third, immigrant women from China and Chinese Korean women experience lower earnings as they stay longer in Korea. Fourth, the presence of preschool children at home aren’t likely to lower earnings for all the immigrant women. Finally, immigrant women experience higher earnings as their net family income (not including immigrant women’s own earnings) increases or decreases.

Key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asian married immigrant women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mmigrant women and wages, the 2015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human capital and Asian female married immigrants

노동정책연구

2017. 제17권 제3호 pp.77~112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경제정책이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박 문 수 **
이 경 희 ***
김 종 호 ****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와 OECD의 상품시장규제 및 정규고용보
호정책지수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의 후생과 직결되는 근로소득 변동성과 우
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및 고용보호 정책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상품시장규제 정책의 효과는 상품시장규제가
강화될 경우 개인의 시간당 소득 변동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규
제와 무역, 투자 등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면 기업운영이나 창업 환경이 나
빠지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득 또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당 소득 및 근
로시간 변동성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규고용보호정책의 효과는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개인의 시간당 소득 및 근로시간 변동성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시간당 소득 및 근로시간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여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절대적 크기 면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
인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 면에서의 변동성이 낮은 것을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상품시장규제는 완화하고 고용보호는 강화하는 정책방향
이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에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논문접수일: 2017년 6월 29일, 심사외뢰일: 2017년 7월 7일, 심사완료일: 2017년 8월 29일

* 이 논문은 2016년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경제정책과 미시경제 변동성』의 내용 중 일
부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 (제1저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mspark@kiet.re.kr)

*** (공동저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kheeleee@kli.re.kr)

****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kimjongho@pknu.ac.kr)

와 같은 정책의 효과는 일률적이라기보다는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용어 : 상품시장규제, 고용보호정책, 근로소득 변동성, 근로시간 변동성

I. 서론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물가, 환율, 이자율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macro-level volatility) 안정화를 통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초점이 맞춰져 추진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 가계 혹은 개인과 같은 미시경제 주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과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상충관계(trade-off)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특정한 경제정책은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시경제 주체들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기업의 매출이나 가계(혹은 개인)의 소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 개방, 규제 수준, 기업의 경영관련 정책, 노동시장, 임금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정책들은 거시경제 부문의 변동성 감소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생산체계 및 방식에 영향을 주어 ‘기업 매출→고용→가계(혹은 개인) 수입(혹은 소득)’으로 이어지는 미시경제 부문의 ‘후생(welfare) 파급 경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계(혹은 개인)와 기업의 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정책 변화가 미치는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거시경제 변수가 받는 영향에 주목하였다(Sutherland and Hoeller, 2013; Ziemann, 2013). 하지만 최근 들어 가계소비와 소득, 기업의 매출액의 안정적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미시경제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Congregado et al., 2012; Epaulard and Pommeret, 2003; Low et al., 2010; Sanchez and Wellschmied, 2017). 이러한 연구에서는 주로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 미시경제 수준에 미치는 부작용에 주목한다. 즉,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성 확대가 기업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키고 가계의 소비위축을 유발하는 경로를 식별하고, 또한 변동성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¹⁾가 기업가 정신, 실업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제주체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경제정책 변화와 미시경제 변동성 간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로 인해 미시경제 주체들 간 파급효과가 대칭적으로 일어나는지 불균형적으로 발생하는지에 관심을 둔 실증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Venn, 2011; Garda and Ziemann, 2014; Cournède et al., 2015, Denk, 2016; Angelopoulos et al., 2017). 이 연구들은 개인수준에서의 근로소득 안정성은 기업의 경영·고용 관련 정책, 노동시장 상황, 정부정책, 국제경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 주목하여 각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시행한 정책이 개인수준의 변동성에 어떠한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예를 들어, Cournède et al.(2015)는 소비 성장률과 변동성이 개인의 후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각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 등에서 시행한 정책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변동성이 개인수준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있다. Denk(2016)는 OECD 회원국 중 26개 국가들의 에너지, 교통, 통신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정책이 노동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Angelopoulos et al.(2017)는 영국의 사회보험정책의 변화가 노동소득과 그 변동성에 미치는 경로와 더불어 그 효과가 개인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렇듯 미시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변동성의 변화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 영향요인들을 식별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정책과 미시경제의 안정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경제정

1) 저성장이 길어지면서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려 실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책이 미시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²⁾ 이에 본 연구는 이들 요인 중 정부의 경제관련 정책이 개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안정성, 특히 근로소득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한다. 이는 ‘일’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통해 소비를 하고 효용을 얻는 근로자 개인이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소득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의 항상성이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수준에서의 근로소득 안정성은 기업의 경영·고용 관련 정책, 노동시장 상황, 정부정책, 국제경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경제정책 중 자료의 가용성, 정책의 중요도 및 파급력, 분석주제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시장 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와 정규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 Regular Contracts) 정책이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개인의 근로소득은 시간당 소득과 총 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되므로, 각 정책이 시간당 소득 변동성과 총 근로시간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머리말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경제정책과 미시경제 변동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자료와 분석방법론을 소개한다. 제 III 장에서는 경제정책이 시간당 소득 변동성과 총 근로시간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제 IV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개인수준의 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이러한 관점에 부합하는 기존 국내연구는 통화정책의 변동이 개인의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하성근(2015)의 연구가 있다.

II.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및 변수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1998~2013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개인 자료와 OECD 국가별 정책지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OECD 자료가 2013년까지 가용한 관계로 KLIPS 자료 또한 1~16차(1998~2013년도) 데이터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은 노동공급 가능성이 높은 25~59세의 개인으로 한정하였으며, 변동성 계산을 위해 이 연령대에 속하는 개인 중에서 연속되는 연도에 시간당 근로소득 또는 연간 총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만을 최종 분석샘플에 포함시켰다. 먼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변동성에 대해 Rolling Window Measure(RWM)과 Incidence of Large Changes(ILC),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 종속변수

종속변수		정의 및 측정 방법
시간당 소득 변동성	Rolling Window Measure	시간당(1시간) 근로소득의 3년간 변동성 - t-1년도와 t년도에서 시간당 근로소득의 전년대비 변화량을 계산한 후 그 두 변화량의 표준편차를 구한 수치 ※ 시간당 근로소득은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 비임금근로자(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화함.
	Incidence of Large Changes	시간당 근로소득의 전년대비 변화(t-1, t)가 20% 이상이면 1, 20%보다 작으면 0)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	Rolling Window Measure	연간(1년) 총 근로시간의 3년간 변동성 - t-1년도와 t년도에서 연간 총 근로시간의 전년대비 변화량을 계산한 후 그 두 변화량의 표준편차를 구한 수치
	Incidence of Large Changes	연간 총 근로시간의 전년대비 변화(t-1, t)가 20% 이상이면 1, 20%보다 작으면 0)

주: 1) 다항로짓 분석에서는 시간당 근로소득의 전년대비 변화가 -20~20%이면 0, -20%보다 작으면 1, 20%보다 크면 2로 구분.

2) 다항로짓 분석에서는 연간 총 근로시간의 전년대비 변화가 -20~20%이면 0, -20%보다 작으면 1, 20%보다 크면 2로 구분.

Rolling Window Measure는 지난 3년간의 변동성을 year-to-year 변화를 통해 측정하며, 구체적으로 t-1년도와 t년도에서 전년대비 변화량을 계산한 후 그 두 변화량의 표준편차로 나타낸다. Incidence of Large Changes는 지난 2년간(t-1, t) 큰 변화 발생여부를 통해 변동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변화가 20% 이상이면 1, 20%보다 작으면 0의 값을 가진다.

KLIPS 개인 자료 중, 개인특성 및 근로 관련 변수들—각 개인의 연도별 시간당 근로소득, 연간 총 근로시간,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혼인상태, 종사 직업 및 산업, 종사상지위, 거주지역 변수 등—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들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개인의 근로소득은 시간당 임금(근로소득)³⁾과 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 변동성을 시간당 소득의 변동성과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 두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표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 - 독립변수

독립변수	정의 및 측정 방법
상품시장규제지수 (PMR_R)	OECD의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자료를 이용한 상대 지수 값($=\{PMR(\text{한국}) \div PMR(\text{OECD 전체 회원국 평균})\} \times 100$) - 단, PMR 지수 값이 5년 간격(1998, 2003, 2008, 2013년)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값이 없는 연도에는 실제 값이 있는 가장 가까운 두 연도의 평균을 imputation하여 사용함(예를 들어 1999년에는 1998년과 2003년의 PMR 상대지수 값의 평균을 사용함)
정규고용보호지수 (EPRC_R)	OECD의 EPRC(Employment Protection - Regular Contracts) 자료를 이용한 상대지수 값 ($=\{EPRC_V2(\text{한국}) \div EPRC_V2(\text{OECD 전체 회원국 평균})\} \times 100$)
연령	개인 연령
연령 제곱	개인 연령의 제곱
교육(학력)	개인 학력 더미(무학 & 고졸 미만=0, 고졸 & 대재 및 중퇴=1, 전문대 졸업 & 대학교 졸업 이상=2)
상품시장규제× 학력별 더미	상품시장규제지수(PMR)와 학력별 더미의 교차항
정규고용보호× 학력별 더미	정규고용보호지수(EPRC)와 학력별 더미의 교차항

3) 시간당 근로소득은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 비임금근로자(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화하였다.

〈표 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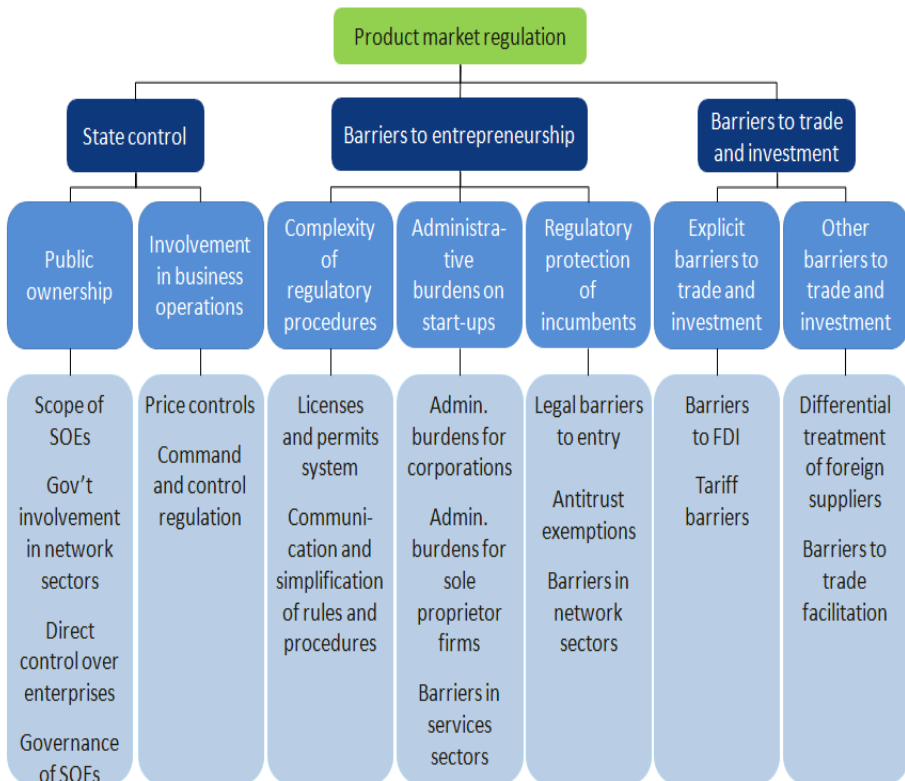
독립변수	정의 및 측정 방법
소득	개인 월평균소득 더미(월평균소득 200만 원 미만=0, 2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1, 500만 원 이상 & 1,500만 원 미만=2, 1,500만 원 이상=3)
상품시장규제× 소득별 더미	상품시장규제지수(PMR)와 소득구간별 더미의 교차항
정규고용보호× 소득별 더미	정규고용보호지수(EPRC)와 소득구간별 더미의 교차항
배우자 유무	혼인 상태 더미(기혼유배우=1, 미혼 & 이혼, 사별=0)
산업	산업 분류 더미(제조업=1, 그 외=0)
직업	직업 분류 더미(관리자 & 전문가=1, 그 외=0)
종사상지위	종사상지위 더미(고용주/자영업자=0, 상용직=1, 임시직 & 일용직=2, 무급가족종사자=3)
지역	거주지역 더미(서울=1, 그 외=0)

OECD 회원국별 연도별 정책지수 자료는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자료를 내려받아 이용하였다. 다양한 정책지수 중 분석과의 연관성 및 정책의 중요성이 높고 분석에 사용되는 여타 변수와의 시계열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 PMR)지수와 정규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 Regular Contracts : EPRC)지수 등 두 개의 정책지수를 선정하여 주요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품시장규제(PMR)지수는 1998년부터 5년마다 제공되기 때문에 1998~2013년간 5년 간격의 PMR지수 원자료를 베이스로 이용하였다. PMR지수는 정책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0~6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숫자가 클수록 시장규제 정도가 강함을 나타낸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PMR지수는 단일 차원이 아닌 다양한 하위지표—정부통제(State Control),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벽(Barriers to Entrepreneurship),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등—를 종합하여 구성된다. 절대적인 규제 강도보다 타 국가와 비교한 상대적인 규제수준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계량분석 시에는 원 지수 값 대신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대비 상대지수

(%)를 계산한 값을 이용하였다. 이때 실제 지수 값이 존재하는 1998, 2003, 2008, 2013년은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실제 값이 없는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값이 있는 가장 인접한 두 연도의 상대지수 값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표 2 참조).

[그림 2]는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대비 우리나라 PMR의 상대지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 모든 연도에 상대지수 값이 100%를 초과하여 OECD 회원국 전체 평균보다 우리나라 PMR지수가 항상 더 큰 것, 즉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98~2013년 사이 OECD 평균 대비 110~120%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가장 최근 연도인 2013년에는 1998년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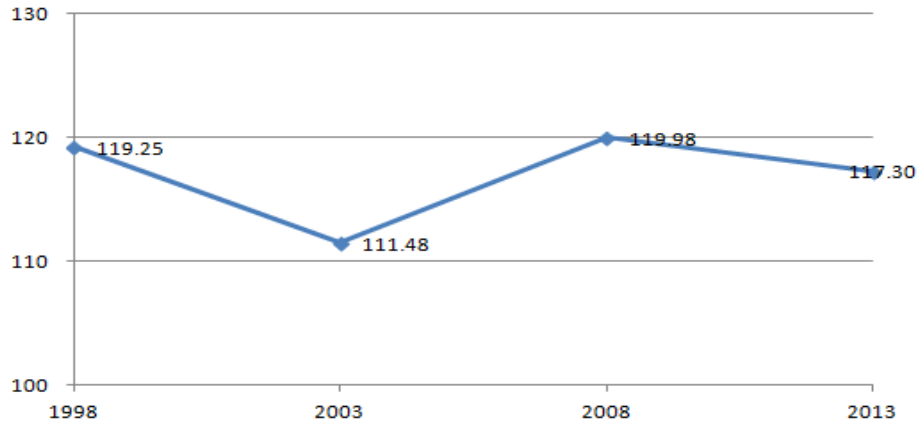
[그림 1] OECD PMR지수 구성 하위지표



자료 : OECD Indicators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Read me' 탭의 그림 인용.

[그림 2] 상품시장규제지수의 연도별 추이 - OECD 평균 대비 지수

(단위 : %)



자료 : OECD Indicators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그림 3] OECD EPRC_V2 지수 구성 하위항목

Table A1. Employment protection for regular contracts, including collective dismissals, summary indicator weights

All indicators are expressed in a scale 0-6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Version 1 & 2	Version 3
Code	Name	Code	Name	Code	Name	Code	Item	Name	weights	weights
EPRC	Regular contracts, including additional provision for collective dismissals	EPR_v1 EPR_v3	Regular contracts (version 2 & 3: 5/7) (version 1: 1)	REGULAR1	Procedural inconvenience (1/3)	REG1	1	Notification procedures	1/2	1/2
						REG2	2	Delay involved before notice can start	1/2	1/2
				REGULAR2	Notice and severance pay for no-fault individual dismissal (1/3)	REG3A		Length of the notice period at 9 months tenure	1/7	1/7
						REG3B	3	Length of the notice period at 4 years tenure	1/7	1/7
						REG3C		Length of the notice period at 20 years tenure	1/7	1/7
						REG4A		Severance pay at 9 months tenure	4/21	4/21
						REG4B	4	Severance pay at 4 years tenure	4/21	4/21
						REG4C		Severance pay at 20 years tenure	4/21	4/21
				REGULAR3_v1	Difficulty of dismissal (1/3)	REG5	5	Definition of justified or unfair dismissal	1/4	1/5
						REG6	6	Length of trial period	1/4	1/5
						REG7	7	Compensation following unfair dismissal	1/4	1/5
						REG8	8	Possibility of reinstatement following unfair dismissal	1/4	1/5
						REG9	9	Maximum time to make a claim of unfair dismissal	-	1/5
		EPC	Collective dismissals (version 2 & 3: 2/7) (version 1: 0)	CD1	18	Definition of collective dismissal	1/4	1/4		
				CD2	19	Additional notification requirements in case of collective dismissals	1/4	1/4		
				CD3	20	Additional delays involved in case of collective dismissals	1/4	1/4		
				CD4	21	Other special costs to employers in case of collective dismissals	1/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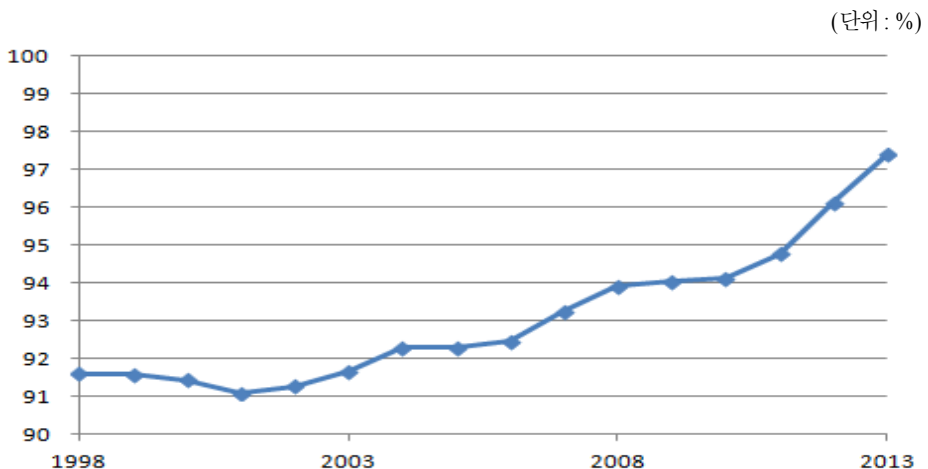
자료 : OECD Indicators of Employment Protection, 'weights' 탭의 Table A1 인용

정규고용보호(EPRC)지수는 상품시장규제(PMR)지수와는 달리 매해의 값이 제공되기 때문에, 1998~2013년간 각 연도별 EPRC_V2 자료를 기본적으로 사

용하였다. EPRC지수 또한 0~6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숫자가 클수록 보호 정도가 강함을 나타낸다. [그림 3]을 보면, EPRC 지수는 개인적 해고(individual dismissals)에 대한 규제와 집단 해고(collective dismissals)에 대한 추가 규정 관련 하위지표들의 가중합(weighted sum)－개인적 해고 관련 규제에 대한 가중치는 5/7, 집단 해고 관련 추가 규정에 대한 가중치는 2/7－으로 계산되며, 총 12개의 세부 항목(item)들을 종합하여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PRC지수의 경우에도 PMR지수와 마찬가지로 계량분석 시에는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대비 상대지수(%)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림 4]에는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대비 우리나라 EPRC의 상대지수에 대한 연도별 추이가 나타나 있다.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 PMR지수의 경우와는 반대로, 모든 연도에 상대지수 값이 100% 미만이며 머물러 OECD 회원국 전체 평균보다 우리나라 EPRC지수가 더 작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규직 고용보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변동성을 살펴보면, 1998~2001년 사이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200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에는 EPRC 상대지수 값이 1998년 대비 6%p 정도 증가하여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정규고용보호지수의 연도별 추이 - OECD 평균 대비 지수



자료: OECD Indicators of Employment Protection, EPRC_V2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장의 분석은 이러한 두 가지 상대정책지수 변수와 KLIPS 개인 자료를 연도별로 매칭한 개인별 패널자료를 기반으로 한다.⁴⁾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종속변수인 소득 변동성 측정 방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나 약 7만~8만 관측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표 3 및 표 4 참조).⁵⁾

〈표 3〉 기초통계량 - Rolling Window Measure를 이용한 분석 표본

변수명	시간당 소득 변동성 분석 샘플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 분석 샘플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시간당 소득 변동성 - RWM	0.33	1.35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 - RWM			624.79	861.61
상품시장규제지수	111.87	1.40	111.85	1.40
정규고용보호지수	93.62	2.09	93.71	2.09
연령	41.54	9.22	41.13	9.23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	0.35	0.48	0.39	0.49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	0.04	0.20	0.04	0.21
소득3(1,500만 원 이상)	0.09	0.28	0.00	0.04
교육1(고졸 & 대재 및 중퇴)	0.41	0.49	0.41	0.49
교육2(전문대 & 대학교 졸업 이상)	0.37	0.48	0.39	0.49
배우자 유무(기혼유배우=1)	0.76	0.42	0.75	0.43
산업(제조업=1)	0.07	0.26	0.08	0.26
직종(관리자 & 전문가=1)	0.09	0.27	0.09	0.28
종사상지위1(상용직=1)	0.55	0.50	0.61	0.49
종사상지위2(임시직 & 일용직=1)	0.15	0.35	0.16	0.37
종사상지위3(무급가족종사자=1)	0.06	0.24	0.00	0.01
지역(서울=1)	0.22	0.42	0.22	0.42
N	67,780		76,778	

4) 상대정책지수 값은 각 연도별로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값이 부여됨.

5) 시간당 소득 변동성 - RWM(67,780 obs.),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 - RWM(76,778 obs.), 시간당 소득 변동성 - ILC(71,680 obs.),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 - ILC(80,010 o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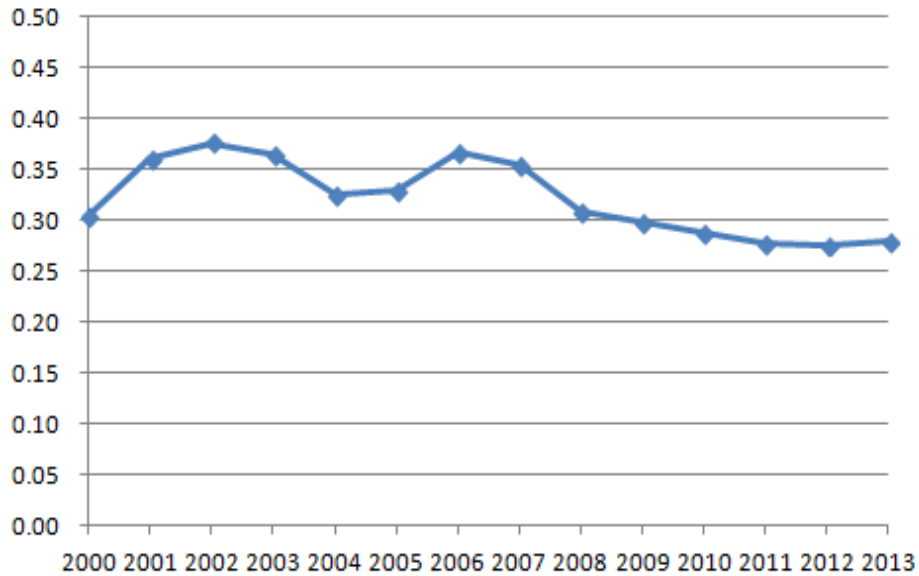
〈표 4〉 기초통계량 - Incidence of Large Changes를 이용한 분석 샘플

변수명	시간당 소득 변동성 분석 샘플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 분석 샘플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시간당 소득 변동성 - ILC	0.56	0.50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 - ILC			0.44	0.50
상품시장규제지수	111.86	1.39	111.87	1.39
정규고용보호지수	93.71	2.09	93.64	2.09
연령	41.05	9.23	41.43	9.23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	0.39	0.49	0.36	0.48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	0.04	0.21	0.04	0.20
소득3(1,500만 원 이상)	0.00	0.04	0.08	0.28
교육1(고졸 & 대재 및 중퇴)	0.41	0.49	0.41	0.49
교육2(전문대 & 대학교 졸업 이상)	0.40	0.49	0.38	0.48
배우자 유무(기혼유배우=1)	0.74	0.44	0.76	0.43
산업(제조업=1)	0.08	0.26	0.07	0.26
직종(관리자 & 전문가=1)	0.09	0.28	0.09	0.27
종사상지위1(상용직=1)	0.61	0.49	0.55	0.50
종사상지위2(임시직 & 일용직=1)	0.16	0.37	0.15	0.35
종사상지위3(무급가족종사자=1)	0.00	0.01	0.06	0.24
지역(서울=1)	0.23	0.42	0.22	0.42
N	71,680		8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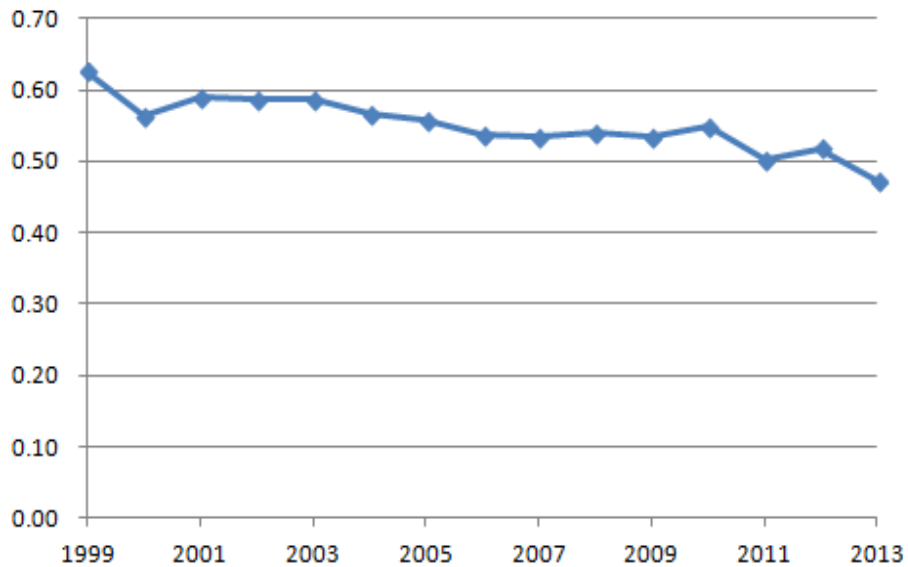
[그림 5]~[그림 8]은 종속변수인 시간당 소득과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의 연도별 추이를 그래프 형태로 보여준다. 측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평균 변동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⁶⁾

6) RWM 방식으로 측정한 시간당 소득 변동성의 경우에는, 2000~2006년 사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6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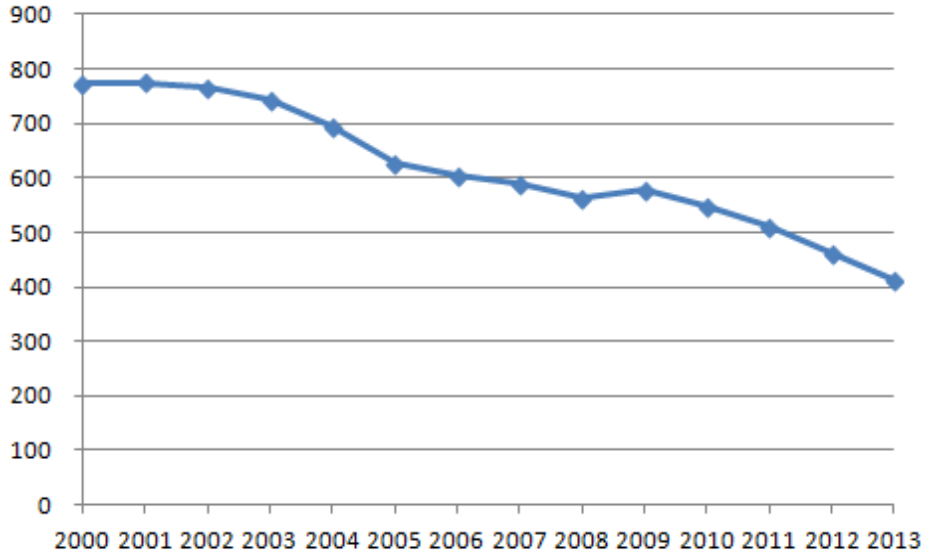
(그림 5) 시간당 소득 변동성 - RWM(평균)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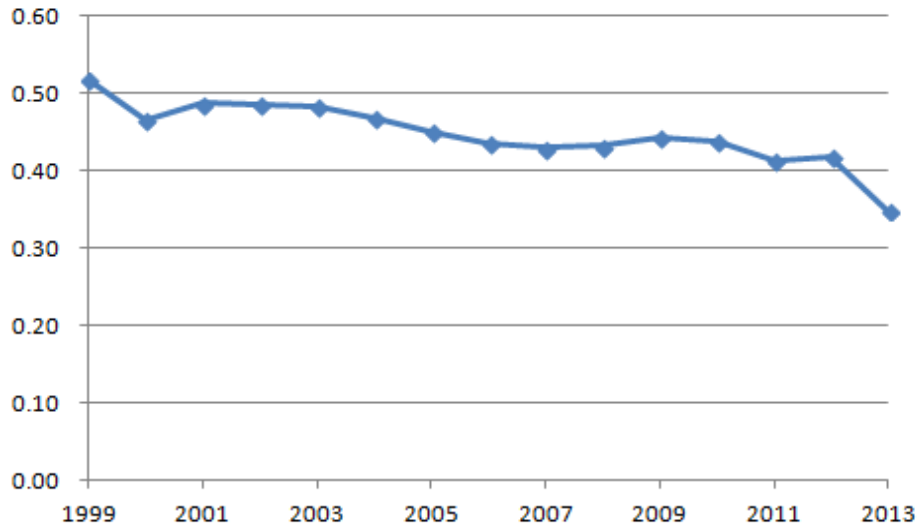
(그림 6) 시간당 소득 변동성 - ILC(평균)의 연도별 추이



(그림 7)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 - RWM(평균)의 연도별 추이



(그림 8)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 - ILC(평균)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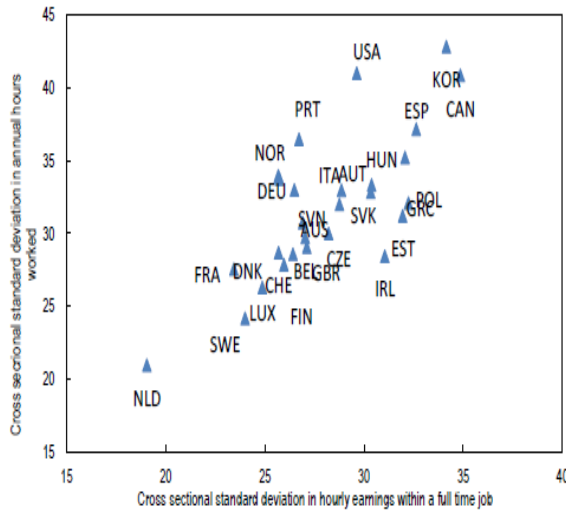


[그림 9]에 인용된 OCED 보고서의 그림(Cournède et al., 2015, 그림 11)을 보면, 각국의 시간당 소득 변동성과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의 수준 및 연관성

을 비교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시간당 소득과 연간 총 근로시간의 횡단면적(cross-sectional) 변동성(표준편차)이 상대적으로 큰 나라에 속한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시간당 소득 변동성과 연간 총 근로시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미국, 캐나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림 9) 시간당 소득 변동성과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 - OECD 회원국별, 횡단면적(cross-sectional) 변동성

Figure 11. Cross-country differences in annual hours worked and hourly earnings volatility



Note: All values refer to country averages. To reflect different coverage across time (see Appendix A), observed volatilities are corrected for year-fixed effects.

Source: Calculations based on EU-SILC, ECHP and CNEF household surveys.

주: 각 국가별 자료는 1992~2010년 기간의 변동성 평균.

자료: Courmède, et al.(2015), p.21 [그림 11] 인용.

2. 추정 모형

정부의 경제정책—상품시장규제(PMR)와 정규고용보호(EPRC) 정책—이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음 식 (1)에 기초한다.

$$y_{i,t} = \alpha_i + P_t' \beta + Z_{i,t}' \gamma + \epsilon_{i,t} \quad (1)$$

위 식에서 $y_{i,t}$ 는 개인 i 의 t 년도 시간당 소득 변동성 또는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을 나타낸다. 앞서 <표 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 변동성은 RWM 또는 ILC,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측정되었다. P_t 는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정책변수로서, 우리나라의 t 년도 상품시장규제(PMR)와 정규고용보호(EPRC) 상대지수(%)이다.⁷⁾ $Z_{i,t}$ 는 개인 i 의 t 년도 개인 특성 벡터로서, 연령, 학력, 소득, 배우자 유무, 산업, 직종, 종사상지위, 거주지역, 그리고 학력 및 소득과 정책지수(P_t)의 교차항 등을 포함한다. 정부정책의 효과가 학력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 정책지수와 교차항을 포함하였다.⁸⁾ α_i 는 개인별 고정효과(fixed effects)로 관찰되지 않는 개인적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으로 인한 추정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식 (1)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은 종속변수인 변동성 변수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였다. RWM 방식을 이용한 변동성 분석의 경우에는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이므로 선형회귀(Pooled OLS)와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ILC 방식을 이용한 변동성 분석의 경우에는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이므로 프로빗(Probit)과 패널 프로빗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⁹⁾¹⁰⁾

-
- 7) 본 연구에서 상품시장규제지수와 정규고용보호지수를 OECD 대비 상대지표로 환산하여 사용한 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OECD 회원국들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절대적인 지수의 변동이 국가별로 거의 나타나지 않아 패널분석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에 따른 variation이 거의 없는 변수를 패널모형에 사용할 경우 계수 값이 제대로 추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여 상대적인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8) <표 2>의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에 보면 소득과 교육수준별 카테고리라 제시되어 있는데, 가장 낮은 수준인 ‘월평균소득 200만 원 미만’(소득0)과 ‘무학 & 고졸 미만’(교육0)을 각각 소득과 교육의 기준 카테고리로 설정하였다.
- 9) 선형회귀(Pooled OLS)와 프로빗(Probit) 분석의 경우에는 식 (1)에서 개인별 고정효과(α_i)를 통상적 상수항(α)으로 대체하여 추정하였다.
- 10) 변동성의 절대적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범주로 구분, 즉 전년대비 변화가 -20~20%이면 0, -20%보다 작으면 1, 20%보다 크면 2로 구분한 후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경우에는 다항로짓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정책지수의 효과 면에서 2개 범주로 구분한 경우와 큰

III.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개인의 소득 변동성은 시간당 소득 변동성과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전자에 대한 결과는 <표 5>부터 <표 8>에, 후자에 대한 결과는 <표 9>부터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개인적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의 효과로 인한 편의(bias)를 배제할 수 있는 패널분석을 수행하고, 이질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선행회귀(Pooled OLS) 또는 프로빗(Probit) 분석을 병행하였다. <표 5>~<표 12>의 추정결과를 보면,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통제 여부에 따른 추정계수 값에 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정책지수—상품시장규제지수, 정규고용보호지수—의 포함여부에 따른 결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모형 1에는 정책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모형 2에는 상품시장규제지수만, 모형 3에는 정규고용보호지수만 포함되며, 모형 4에는 두 정책지수 모두 포함된다. 이질성 통제 여부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지수 포함여부에 따른 추정결과의 질적인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소득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여타 정책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특정 정책의 고유 효과(모형 4)를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두 정책지수를 모두 포함하고 관찰되지 않는 개인적 이질성을 고려한 패널 모형 추정결과에 근거하여 결과를 해석한다. 즉, 고정효과 패널분석 또는 패널 프로빗 분석에 대한 모형 4 추정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부표]에 추정결과만 제시하였다.

1. 시간당 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정책지수의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 6>과 <표 8>의 모형 4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면, 정책지수의 질적인 효과-영향력의 방향과 유의성 등-면에서, 시간당 소득 변동성을 측정하는 방식-RWM 또는 ILC-에 따른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규고용 보호정책의 효과는 시간당 소득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상품시장규제정책의 효과는, 개인적 이질성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전반적으로 상품시장규제가 강화, 즉 경쟁이 약화될수록 개인의 시간당 소득 변동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통제,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벽, 무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면 기업운영이나 창업 환경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효과 차이(소득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개인의 월소득이 500만 원 이상~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저 소득수준인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비해 상품시장규제가 시간당 소득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상품시장규제가 강화될수록 시간당 소득 변동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월소득 500만~1,500만 원 그룹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최상위 그룹(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품시장규제가 강화될수록 시간당 소득 변동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이 효과는 RWM 방식으로 측정된 결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품시장규제정책이 개인의 시간당 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 수준 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육수준에 따른 상품시장규제정책의 효과 차이, 즉 학력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음(-)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RWM 분석 결과 중 최종학력이 고졸(교육1)인 경우가 유일하다. 따라서 상품시장규제가 시간당 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시간당 소득 변동성(RWM)에 대한 Pooled OLS 모형 추정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품시장규제지수		0.0218***		0.0168***
정규고용보호지수			-0.0253***	-0.0241***
연령	-0.0198***	-0.0205***	-0.0202***	-0.0209***
연령 제곱	0.0002***	0.0002***	0.0002***	0.0003***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	0.1716***	0.0507	2.9892***	2.0576***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	1.0280***	-9.0413**	19.2010***	1.4091
소득3(1,500만 원 이상)	12.8751***	174.1291*	178.2127***	322.3374***
상품시장규제×소득1		0.0011		0.0092
상품시장규제×소득2		0.0902**		0.1997***
상품시장규제×소득3		-1.4445*		-1.3342
정규고용보호×소득1			-0.0300***	-0.0311***
정규고용보호×소득2			-0.1929***	-0.2407***
정규고용보호×소득3			-1.7707***	-1.7191***
교육1(고졸 & 대재 및 중퇴)	0.0446***	2.5502***	0.0876	2.2048***
교육2(전문대 & 대학교 졸업 이상)	0.1014***	1.7665*	0.0362	1.7269**
상품시장규제×교육1	0.0367***	-0.0224***		-0.0189**
상품시장규제×교육2		-0.0149*		-0.0148*
정규고용보호×교육1			-0.0002	-0.0002
정규고용보호×교육2			0.0011	0.0007
배우자 유무(기혼유배우=1)		0.0362***	0.0252***	0.0247***
산업(제조업=1)	-0.0849***	-0.0954***	0.0288***	0.0136
직종(관리자 & 전문가=1)	0.0445***	0.0553***	-0.0925***	-0.0769***
종사상지위1(상용직=1)	-0.3258***	-0.3272***	-0.3192***	-0.3177***
종사상지위2(임시직 & 일용직=1)	-0.2236***	-0.2252***	-0.2032***	-0.2030***
종사상지위3(무급가족종사자=1)	-6.4575	-5.4821	-8.1120	-7.1574
지역(서울=1)	0.0481***	0.0480***	0.0287**	0.0278**
N	67,780	67,780	67,780	67,780
R ²	0.2029	0.2077	0.2213	0.2268

주: *** p<0.01, ** p<0.05, * p<0.1.

〈표 6〉 시간당 소득 변동성(RWM)에 대한 고정효과 패널모형 추정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품시장규제지수		0.0086		0.0156**
정규고용보호지수			-0.0169*	-0.0196**
연령	0.0088	0.0079	0.0184**	0.0188**
연령 제곱	-0.0003***	-0.0003***	-0.0002**	-0.0002**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	0.1203***	0.6068	1.0257**	1.3670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	0.7030***	-6.2992***	12.1016***	1.4504
소득3(1,500만 원 이상)	11.4279***	134.7143***	156.4832***	258.0038***
상품시장규제×소득1		-0.0044		-0.0040
상품시장규제×소득2		0.0627***		0.1224***
상품시장규제×소득3		-1.1047***		-0.9584***
정규고용보호×소득1			-0.0098*	-0.0087
정규고용보호×소득2			-0.1213***	-0.1534***
정규고용보호×소득3			-1.5538***	-1.4954***
교육1(고졸 & 대제 및 중퇴)	-0.0393	1.8703*	0.1467	2.3691**
교육2(전문대 & 대학교 졸업 이상)	-0.1296	0.2985	0.9489	1.7592
상품시장규제×교육1		-0.0171**		-0.0205**
상품시장규제×교육2		-0.0039		-0.0073
정규고용보호×교육1			-0.0018	-0.0012
정규고용보호×교육2			-0.0114	-0.0113
배우자 유무(기혼유배우=1)	0.0187	0.0208	0.0256	0.0276
산업(제조업=1)	-0.0045	-0.0032	0.0144	0.0030
직종(관리자 & 전문가=1)	0.0510**	0.0557**	-0.0197	-0.0009
종사상지위1(상용직=1)	-0.2153***	-0.2150***	-0.2161***	-0.2158***
종사상지위2(임시직 & 일용직=1)	-0.1542***	-0.1539***	-0.1585***	-0.1590***
종사상지위3(무급가족종사자=1)	-7.6309***	-6.6202***	-9.4265***	-8.4845***
지역(서울=1)	-0.1253***	-0.1301***	-0.1409***	-0.1455***
상수항	0.7028***	-0.2399	1.8514**	0.3131
N	67,780	67,780	67,780	67,780
N of id	11,104	11,104	11,104	11,104
R ²	0.1698	0.1738	0.1839	0.1877

주 : *** p<0.01, ** p<0.05, * p<0.1.

〈표 7〉 시간당 소득 변동성(ILC)에 대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품시장규제지수		0.0263***		0.0211***
정규고용보호지수			-0.0512***	-0.0498***
연령	-0.0545***	-0.0550***	-0.0531***	-0.0535***
연령 제곱	0.0006***	0.0006***	0.0006***	0.0006***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	-0.1395***	-0.9875	0.8288*	-0.4883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	0.0049	-1.4607	2.9868***	-0.2223
소득3(1,500만 원 이상)	1.0811***	21.1668	5.9042	26.0957*
상품시장규제×소득1		0.0076		0.0139*
상품시장규제×소득2		0.0132		0.0380**
상품시장규제×소득3		-0.1796		-0.1901
정규고용보호×소득1			-0.0102**	-0.0127**
정규고용보호×소득2			-0.0316***	-0.0425***
정규고용보호×소득3			-0.0517	-0.0403
교육1(고졸 & 대재 및 중퇴)	0.0011	2.3327**	-0.0492	1.5886
교육2(전문대 & 대학교 졸업 이상)	-0.0454***	1.3766	-0.6475	0.3656
상품시장규제×교육1		-0.0208**		-0.0141
상품시장규제×교육2		-0.0127		-0.0081
정규고용보호×교육1			0.0010	0.0004
정규고용보호×교육2			0.0070	0.0059
배우자 유무(기혼유배우=1)	-0.0416***	-0.0435***	-0.0630***	-0.0649***
산업(제조업=1)	-0.0841***	-0.0991***	0.0400**	0.0225
직종(관리자 & 전문가=1)	0.0894***	0.1073***	-0.0292	-0.0093
종사상지위1(상용직=1)	-0.4747***	-0.4743***	-0.4767***	-0.4755***
종사상지위2(임시직 & 일용직=1)	-0.1416***	-0.1420***	-0.1176***	-0.1177***
종사상지위3(무급가족종사자=1)	-1.0148	-0.9289	-1.1455	-1.0362
지역(서울=1)	0.0391***	0.0386***	0.0240**	0.0230**
상수항	1.7173***	-1.2320	6.5074***	4.0061***
N	71,680	71,680	71,680	71,680

주 : *** p<0.01, ** p<0.05, * p<0.1.

〈표 8〉 시간당 소득 변동성(ILC)에 대한 패널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품시장규제지수		0.0267***		0.0219***
정규고용보호지수			-0.0529***	-0.0514***
연령	-0.0586***	-0.0591***	-0.0562***	-0.0567***
연령 제곱	0.0006***	0.0006***	0.0006***	0.0006***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	-0.1255***	-1.0491	0.7398	-0.5311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	0.0390	-1.4070	2.9769**	0.0399
소득3(1,500만 원 이상)	1.1451***	20.1571	5.3526	24.9278
상품시장규제×소득1		0.0083		0.0135*
상품시장규제×소득2		0.0130		0.0354*
상품시장규제×소득3		-0.1699		-0.1840
정규고용보호×소득1			-0.0091*	-0.0117**
정규고용보호×소득2			-0.0310**	-0.0418***
정규고용보호×소득3			-0.0451	-0.0343
교육1(고졸 & 대재 및 중퇴)	-0.0221	2.4718**	0.1177	1.9242
교육2(전문대 & 대학교 졸업 이상)	-0.0823***	1.3677	-0.3245	0.7078
상품시장규제×교육1		-0.0223**		-0.0157
상품시장규제×교육2		-0.0129		-0.0084
정규고용보호×교육1			-0.0009	-0.0014
정규고용보호×교육2			0.0034	0.0024
배우자 유무(기혼유배우=1)	-0.0387***	-0.0410***	-0.0659***	-0.0682***
산업(제조업=1)	-0.0931***	-0.1095***	0.0396*	0.0206
직종(관리자 & 전문가=1)	0.0983***	0.1181***	-0.0312	-0.0093
종사상지위1(상용직=1)	-0.4818***	-0.4813***	-0.4812***	-0.4800***
종사상지위2(임시직 & 일용직=1)	-0.1370***	-0.1373***	-0.1097***	-0.1099***
종사상지위3(무급가족종사자=1)	-1.3415	-1.2603	-1.4465*	-1.3418
지역(서울=1)	0.0465***	0.0457***	0.0277**	0.0265*
상수항	1.8813***	-1.1118	6.7803***	4.1812***
N	71,680	71,680	71,680	71,680
N of id	11,816	11,816	11,816	11,816

주 : *** p<0.01, ** p<0.05, * p<0.1.

전술한 상품시장규제정책의 효과와 달리, 정규고용보호정책의 효과는 정규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개인의 시간당 소득 변동성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개인적 해고와 집단적 해고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 실업이 감소하고 고용안정성은 증가하여 개인의 시간당 소득이 오르내리는 변동의 폭이 작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규고용보호정책의 효과는 모든 소득 그룹과 학력 그룹에서 음(-)으로 나타나지만(표 14 참조), 상호작용으로 인해 소득수준에 따라 그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달라진다. 특히 RWM 방식의 추정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보호정책이 시간당 소득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학력별 효과 차이는 변동성 측정방식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책지수 이외에 개인의 시간당 소득 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배우자 유무, 종사상지위, 거주지역 등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종사상지위를 제외한 다른 유의한 변수들의 효과는 변동성 측정방법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이거나 한 가지 측정방법에 의한 결과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 및 소득 수준의 양(+)의 효과는 RWM 분석에서만 유의하였고, 기혼유배우의 음(-)의 효과는 ILC 분석에서만 유의하였다. 종사상지위와 관련해서는 변동성 측정방법에 상관없이 자영업자의 시간당 소득 변동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주요 관심변수인 정책지수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 10>과 <표 12>에서 모형 4의 추정결과를 보면, 정책지수의 질적인 효과 면에서,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을 측정하는 방식, 즉 RWM 또는 ILC 방식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고용보호정책은 일관되게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인다.

다음으로, 상품시장규제지수에 대한 추정계수 값을 보면, 상품시장규제가 강화-경쟁이 약화-될수록 개인의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품시장규제정책이 개별특

성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살펴 봐야 한다. 먼저 소득수준에 따른 결과를 보면, 개인의 월소득수준이 1,500만 원 이상으로 아주 높은 경우 상품시장규제의 효과(+)가 유의하게 더 큰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학력과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음(-)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ILC 분석에서 최종학력이 고졸(교육1)인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에는, 상품시장규제가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가 음(-)으로, 즉 규제가 강화될수록 근로시간 변동성이 낮아 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규고용보호정책의 효과는 앞선 시간당 소득 변동성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연간 총 근로시간 면에서도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의 효과는 모든 소득 그룹과 학력 그룹에서 유지되지만(표 14 참조), 소득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소득수준별로 그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달라진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보호 정책이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욱 커진다. 한편, 학력과 상호작용 효과는 변동성 측정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나 10% 유의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용보호정책이 개인의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교육수준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을 제외한 다른 개인특성 변수들도 개인의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시간당 소득 변동성 분석 결과와는 달리, 변동성 측정방법에 따라 계수 값의 부호나 유의성이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연령 및 소득수준의 효과는 음(-), 교육수준의 효과는 양(+)으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인 경우 근로시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관리자나 전문가인 경우에는 타 직종에 비해 근로시간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9〉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RWM)에 대한 Pooled OLS 모형 추정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품시장규제지수		26.1986***		19.5696***
정규고용보호지수			-72.6854***	-71.2116***
연령	-42.9270***	-42.9568***	-43.8777***	-43.7052***
연령 제곱	0.4054***	0.4071***	0.4575***	0.4563***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	-199.7211***	-242.0780	-1,391.5647***	-1,455.2910***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	-259.2024***	-1,921.5038**	-987.7386*	-2,797.9977***
소득3(1,500만 원 이상)	262.9033***	-4,631.9661***	2,687.7218***	-1,759.5538
상품시장규제×소득1		0.3915		0.9092
상품시장규제×소득2		14.9070*		20.5711**
상품시장규제×소득3		43.6208***		38.6750***
정규고용보호×소득1			12.8134***	12.4244***
정규고용보호×소득2			7.7952	2.6532
정규고용보호×소득3			-26.6692***	-25.4978***
교육1(고졸 & 대재 및 중퇴)	-87.1254***	2,316.3261***	-770.5327**	727.9765
교육2(전문대 & 대학교 졸업 이상)	-202.1341***	1,988.4981***	-2,204.2590***	-562.0730
상품시장규제×교육1		-21.4541***		-12.1891**
상품시장규제×교육2		-19.5378***		-13.6105**
정규고용보호×교육1			7.9625*	6.5384
정규고용보호×교육2			22.2170***	20.9707***
배우자 유무(기혼유배우=1)	-18.4353**	-20.1125**	-42.8243***	-44.2339***
산업(제조업=1)	-130.8889***	-141.7082***	2.9321	-8.3089
직종(관리자 & 전문가=1)	142.6088***	151.8522***	36.4829***	45.4198***
종사상지위1(상용직=1)	-210.3406***	-209.5038***	-210.0482***	-208.9914***
종사상지위2(임시직 & 일용직=1)	-22.6520**	-22.5031**	7.3408	7.4386
종사상지위3(무급가족종사자=1)	-231.4677***	-218.2368***	-163.5748***	-153.4520***
지역(서울=1)	29.3136***	29.0068***	13.8360*	13.4764*
상수항	2,002.6474***	-940.9068	8,797.8609***	6,456.5340***
N	76,778	76,778	76,778	76,778
R ²	0.0665	0.0677	0.0832	0.0841

주: *** p<0.01, ** p<0.05, * p<0.1.

〈표 10〉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RWM)에 대한 고정효과 패널모형 추정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품시장규제지수		3.1129		5.7500
정규고용보호지수			-21.5738***	-20.5720***
연령	-106.4135***	-107.0900***	-104.5964***	-105.5002***
연령 제곱	0.7698***	0.7767***	0.8205***	0.8253***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	-28.4483***	-71.9336	-1,723.2908***	-1,466.0161**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	-22.2188	-1,568.8944	-1,010.1335	-2,325.2694*
소득3(1,500만 원 이상)	161.8346***	-3,238.6550***	1,545.0935***	-1,811.9285*
상품시장규제×소득1		0.3642		-3.3028
상품시장규제×소득2		13.7982		13.5536
상품시장규제×소득3		30.3324***		29.2985***
정규고용보호×소득1			18.0868***	19.2577***
정규고용보호×소득2			10.3939	8.2341
정규고용보호×소득3			-14.9876**	-14.2128**
교육1(고졸 & 대재 및 중퇴)	-38.2890	1,606.3928***	-151.5800	1,482.3488**
교육2(전문대 & 대학교 졸업 이상)	-36.4180	1,164.9538*	-785.3366	502.8198
상품시장규제×교육1		-14.6925***		-14.4305***
상품시장규제×교육2		-10.7330*		-11.1635*
정규고용보호×교육1			1.3388	1.1410
정규고용보호×교육2			8.1414	7.7269
배우자 유무(기혼유배우=1)	39.3848***	40.0888***	34.8629**	35.2349**
산업(제조업=1)	39.0571**	46.6133***	41.6389***	46.7541***
직종(관리자 & 전문가=1)	-13.1160	-23.0696	4.2388	-4.5028
종사상지위1(상용직=1)	-154.6962***	-154.0378***	-153.9230***	-153.3125***
종사상지위2(임시직 & 일용직=1)	-62.8269***	-61.9824***	-59.8726***	-59.1044***
종사상지위3(무급가족종사자=1)	-137.0319***	-132.5365***	-128.6185***	-124.1117***
지역(서울=1)	-25.8548	-24.5420	-26.0991	-25.0840
상수항	3,905.6499***	3,580.8975***	5,733.4149***	5,032.2780***
N	76,778	76,778	76,778	76,778
N of id	11,885	11,885	11,885	11,885
R ²	0.0466	0.0470	0.0474	0.0479

주: *** p<0.01, ** p<0.05, * p<0.1.

〈표 11〉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ILC)에 대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품시장규제지수		0.0060		0.0012
정규고용보호지수			-0.0483***	-0.0479***
연령	-0.0350***	-0.0346***	-0.0352***	-0.0347***
연령 제곱	0.0003***	0.0003***	0.0004***	0.0004***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	-0.2717***	-0.2563	-0.8229*	-0.9351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	-0.3307***	-2.1919	0.9520	-1.8008
소득3(1,500만 원 이상)	0.2113***	-5.5458***	1.8830**	-3.6587**
상품시장규제×소득1		-0.0002		0.0005
상품시장규제×소득2		0.0166		0.0287
상품시장규제×소득3		0.0513***		0.0488***
정규고용보호×소득1			0.0059	0.0065
정규고용보호×소득2			-0.0136	-0.0185
정규고용보호×소득3			-0.0183**	-0.0176**
교육1(고졸 & 대재 및 중퇴)	-0.0674***	1.0123	-0.6895	-0.1947
교육2(전문대 & 대학교 졸업 이상)	-0.1419***	2.1370**	-0.7765	0.9103
상품시장규제×교육1		-0.0096		-0.0038
상품시장규제×교육2		-0.0204**		-0.0154*
정규고용보호×교육1			0.0071	0.0064
정규고용보호×교육2			0.0073	0.0078
배우자 유무(기혼유배우=1)	-0.0360***	-0.0359***	-0.0538***	-0.0536***
산업(제조업=1)	-0.0126	-0.0101	0.0848***	0.0862***
직종(관리자 & 전문가=1)	0.0314*	0.0215	-0.0594***	-0.0665***
종사상지위1(상용직=1)	-0.3300***	-0.3301***	-0.3296***	-0.3294***
종사상지위2(임시직 & 일용직=1)	0.1982***	0.1983***	0.2205***	0.2207***
종사상지위3(무급가족종사자=1)	-0.1391***	-0.1285***	-0.0931***	-0.0843**
지역(서울=1)	0.0230**	0.0233**	0.0112	0.0116
상수항	1.0264***	0.3583	5.5475***	5.3727***
N	80,010	80,010	80,010	80,010

주: *** p<0.01, ** p<0.05, * p<0.1.

〈표 12〉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ILC)에 대한 패널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변수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품시장규제지수		0.0071		0.0033
정규고용보호지수			-0.0524***	-0.0522***
연령	-0.0429***	-0.0426***	-0.0423***	-0.0419***
연령 제곱	0.0004***	0.0004***	0.0004***	0.0004***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	-0.2595***	0.0922	-0.8823*	-0.6151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	-0.2915***	-1.2230	0.8715	-0.8668
소득3(1,500만 원 이상)	0.2071***	-5.5829***	1.6999**	-3.9083**
상품시장규제×소득1		-0.0032		-0.0034
상품시장규제×소득2		0.0083		0.0176
상품시장규제×소득3		0.0516***		0.0493***
정규고용보호×소득1			0.0067	0.0079
정규고용보호×소득2			-0.0123	-0.0147
정규고용보호×소득3			-0.0164*	-0.0155*
교육1(고졸 & 대재 및 중퇴)	-0.1126***	1.1888	-0.4636	0.3164
교육2(전문대 & 대학교 졸업 이상)	-0.2175***	2.1166*	-0.4128	1.4168
상품시장규제×교육1		-0.0116		-0.0063
상품시장규제×교육2		-0.0208**		-0.0165*
정규고용보호×교육1			0.0045	0.0037
정규고용보호×교육2			0.0031	0.0032
배우자 유무(기혼유배우=1)	-0.0315**	-0.0313**	-0.0592***	-0.0589***
산업(제조업=1)	-0.0104	-0.0059	0.1007***	0.1040***
직종(관리자 & 전문가=1)	0.0602***	0.0469**	-0.0474**	-0.0577**
종사상지위1(상용직=1)	-0.3390***	-0.3389***	-0.3348***	-0.3346***
종사상지위2(임시직 & 일용직=1)	0.2069***	0.2072***	0.2344***	0.2347***
종사상지위3(무급가족종사자=1)	-0.1121***	-0.1043**	-0.0697*	-0.0631
지역(서울=1)	0.0344**	0.0349**	0.0168	0.0174
상수항	1.2984***	0.5031	6.1395***	5.7513***
N	80,010	80,010	80,010	80,010
N of id	12,551	12,551	12,551	12,551

주 : *** p<0.01, ** p<0.05, * p<0.1.

IV. 결론 및 시사점

국가 차원의 경제정책은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 및 개인의 후생복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의 후생과 직결되는 근로소득 변동성과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및 고용보호 정책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해보았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시장규제 정책의 효과는 시간당 소득 변동성에 대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개인적 이질성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전반적으로 상품시장규제가 강화, 즉 경쟁이 약화될수록 개인의 시간당 소득 변동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통제가 강화되고 기업가정신과 무역, 투자 등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면 기업운영이나 창업 환경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 및 소득 안정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둘째, 상품시장규제 정책의 효과는 소득 또는 학력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상품시장규제가 시간당 소득 및 근로시간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교육수준별 효과 차이는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¹¹⁾ 최종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에는 상품시장규제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최종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에는 상품시장규제가 강화될수록 근로시간 변동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고졸 미만의 저학력 직군의 직업은 진입규제, 무역장벽, 가격규제 등으로 구성된 상품시장규제의 적용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소규모의 단순 일용직 혹은 서비스직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정규고용보호 정책의 효과는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개인의 시간당 소

11) RWM으로 측정된 시간당 소득 변동성 분석에서, 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와의 상호작용항에 대한 계수 값도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득 및 근로시간 변동성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음(-)의 효과는 소득이나 학력 등의 개인 특성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개인적 해고와 집단적 해고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 실업이 감소하고 고용안정성은 증가하여 개인의 소득과 근로시간이 오르내리는 변동의 폭이 작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비대칭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규직 고용보호 정책은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상품시장의 규제상황과 대비해서 보면 이는 일종의 진입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정규직보호 정책은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잠재적 신규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사회후생 측면에서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넷째, 정규직 고용보호 정책의 효과는 개인의 소득수준별로는 그 절대적 크기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보호 정책이 시간당 소득 및 근로시간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만약 개인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 면에서의 변동성이 낮은 것을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상품시장규제는 완화하고 고용보호는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개인의 후생에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일률적이라기 보다는 소득이나 교육 수준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정 집단(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개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정책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대칭성 및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효율화를 위해 제기되는 노동시장과 관련된 규제사항은 상품시장에서의 규제사항과 비교할 경우 특이점이 존재한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결정이 상품시장의 가격결정과 같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통해 이상적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마찰비용(friction cost)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수요자인 기업과 노동공급자인 개별 노동자 사이의 비대칭적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존재하고 노동공급 시장 내부에서는 차별적 지위를 가진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논의되는 관련 정책은 단순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선형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고차원적인 비선형 형태의 관점에서 세밀히 다뤄져야 한다.

〈표 13〉 소득 변동성 패널분석 결과 종합

변수명	시간당 소득 변동성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	
	RWM	ILC	RWM	ILC
상품시장규제지수	0.0156**	0.0219***	5.7500	0.0033
정규고용보호지수	-0.0196**	-0.0514***	-20.5720***	-0.0522***
연령	0.0188**	-0.0567***	-105.5002***	-0.0419***
연령 제곱	-0.0002**	0.0006***	0.8253***	0.0004***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	1.3670	-0.5311	-1,466.0161**	-0.6151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	1.4504	0.0399	-2,325.2694*	-0.8668
소득3(1,500만 원 이상)	258.0038***	24.9278	-1,811.9285*	-3.9083**
상품시장규제×소득1	-0.0040	0.0135*	-3.3028	-0.0034
상품시장규제×소득2	0.1224***	0.0354*	13.5536	0.0176
상품시장규제×소득3	-0.9584***	-0.1840	29.2985***	0.0493***
정규고용보호×소득1	-0.0087	-0.0117**	19.2577***	0.0079
정규고용보호×소득2	-0.1534***	-0.0418***	8.2341	-0.0147
정규고용보호×소득3	-1.4954***	-0.0343	-14.2128**	-0.0155*
교육1(고졸 & 대제 및 중퇴)	2.3691**	1.9242	1,482.3488**	0.3164
교육2(전문대 & 대학교 졸업 이상)	1.7592	0.7078	502.8198	1.4168
상품시장규제×교육1	-0.0205**	-0.0157	-14.4305***	-0.0063
상품시장규제×교육2	-0.0073	-0.0084	-11.1635*	-0.0165*
정규고용보호×교육1	-0.0012	-0.0014	1.1410	0.0037
정규고용보호×교육2	-0.0113	0.0024	7.7269	0.0032
배우자 유무(기혼유배우=1)	0.0276	-0.0682***	35.2349**	-0.0589***
산업(제조업=1)	0.0030	0.0206	46.7541***	0.1040***
직종(관리자 & 전문가=1)	-0.0009	-0.0093	-4.5028	-0.0577**
종사상지위1(상용직=1)	-0.2158***	-0.4800***	-153.3125***	-0.3346***
종사상지위2(임시직 & 일용직=1)	-0.1590***	-0.1099***	-59.1044***	0.2347***
종사상지위3(무급가족종사자=1)	-8.4845***	-1.3418	-124.1117***	-0.0631
지역(서울=1)	-0.1455***	0.0265*	-25.0840	0.0174
상수항	0.3131	4.1812***	5,032.2780***	5.7513***
N	67,780	71,680	76,778	80,010
N of id	11,104	11,816	11,885	12,551
R ²	0.1877		0.0479	

주: *** p<0.01, ** p<0.05, * p<0.1.

〈표 14〉 경제정책이 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종합: 소득 및 교육 수준별

정책지수	시간당 소득 변동성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	
	RWM	ILC	RWM	ILC
상품시장규제지수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	(+)	(+)	·	·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	(+)	(+)	·	·
소득3(1,500만 원 이상)	(-)	(+)	(+)	(+)
교육1(고졸 & 대재 및 중퇴)	(-)	(+)	(-)	·
교육2(전문대 & 대학교 졸업 이상)	(+)	(+)	(-)	(-)
정규고용보호지수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	(-)	(-)	(-)	(-)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	(-)	(-)	(-)	(-)
소득3(1,500만 원 이상)	(-)	(-)	(-)	(-)
교육1(고졸 & 대재 및 중퇴)	(-)	(-)	(-)	(-)
교육2(전문대 & 대학교 졸업 이상)	(-)	(-)	(-)	(-)

주: 비유의(Not significant).

〈표 15〉 기타 통제변수가 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변수명	시간당 소득 변동성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	
	RWM	ILC	RWM	ILC
연령	(+) **	(-) ***	(-) ***	(-) ***
연령 제곱	(-) **	(+) ***	(+) ***	(+) ***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	(+)	(-)	(-) **	(-)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	(+)	(+)	(-) *	(-)
소득3(1,500만 원 이상)	(+) ***	(+)	(-) *	(-) **
교육1(고졸 & 대재 및 중퇴)	(+) **	(+)	(+) **	(+)
교육2(전문대 & 대학교 졸업 이상)	(+)	(+)	(+)	(+)
배우자 유무(기혼유배우=1)	(+)	(-) ***	(+) **	(-) ***
산업(제조업=1)	(+)	(+)	(+) ***	(+) ***
직종(관리자 & 전문가=1)	(-)	(-)	(-)	(-) **
종사상지위1(상용직=1)	(-) ***	(-) ***	(-) ***	(-) ***
종사상지위2(임시직 & 일용직=1)	(-) ***	(-) ***	(-) ***	(+) ***
종사상지위3(무급가족종사자=1)	(-) ***	(-)	(-) ***	(-)
지역(서울=1)	(-) ***	(+) *	(-)	(+)

주: *** p<0.01, ** p<0.05, * p<0.1.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상품시장규제 정책과 정규직 고용보호 정책에 대한 절대적인 규제강도 혹은 절대적인 고용 보호에 대한 영향을 보는 대신 OECD 대비 상대적인 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소득이나 교육 수준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종사상지위와 같은 일자리 특성에 따른 차이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추후 연구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참고문헌

- 하성근(2015). 「통화정책의 소비변동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부(Wealth)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64 (1) : 213~250.
- Angelopoulos, K., S. Lazarakis and J. R. Malley(2017). “Asymmetries in Earnings, Employment and Wage Risk in Great Britain.”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o. 6400.
- Congregado, E., A. A. Golpe and S. C. Parker(2012). “The Dynamics of Entrepreneurship: Hysteresis, Business Cycles and Government Policy.” *Empirical Economics* 43 (3) : 1239~1261.
- Cournède, B., P. Garda and V. Ziemann(2015). “Effects of Economic Policies on Microeconomic Stabil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201.
- Denk, O.(2016). “How Do Product Market Regulations Affect Worker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349.
- Epaulard, A. and A. Pommeret(2003). “Recursive Utility, Endogenous Growth, and the Welfare Cost of Volatility.” *Review of Economic Dynamics* 6 (3) : 672~684.
- Garda, P. and V. Ziemann(2014). “Economic Policies and Microeconomic Stabil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1115.

Low, H., C. Meghir and L. Pistaferri(2010). “Wage Risk and Employment Risk over the Life Cycl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00 (4) : 1432 ~ 1467.

Sanchez, M. and F. Wellschmied(2017), “Modeling Life-Cycle Earnings Risk with Positive and Negative Shocks.” IZA Discussion Paper No.10925.

Sutherland, D. and P. Hoeller(2013). “Growth-promoting Policies and Macroeconomic Stabil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091, OECD Publishing.

Venn, D.(2011), “Earnings Volatility and Its Consequences for Household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5.

Ziemann, V.(2013), “Do Structural Policies Affect Macroeconomic Stabil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075, OECD Publishing

OECD Indicators of Employment Protection(<http://www.oecd.org/employment/emp/EPL-timeseries.xlsx>)

OECD Indicators of Product Market Regulation(https://www.oecd.org/eco/reform/Indicators_PMR.xlsx)

〈부표〉 소득변동성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 결과 : Incidence of Large Changes

변수명	시간당 소득 변화		연간 총 근로시간 변화	
	< -20%	> 20%	< -20%	> 20%
상품시장규제지수	0.0362**	0.0298*	0.0326**	-0.0228
정규고용보호지수	-0.0876***	-0.0643***	-0.1015***	-0.0546***
성별(남자=1)	-0.1155***	0.2885***	-0.0745***	0.2264***
나이	-0.1351***	0.0315***	-0.1062***	0.0249**
나이 제곱	0.0014***	-0.0002	0.0011***	-0.0003**
소득1(200만~500만 원 미만=1)	0.0280**	0.0112	-0.0087	0.0060
소득2(500만~1,500만 원 미만=1)	0.0723**	0.0366	0.0769**	0.0187
소득3(1,500만 원 이상=1)	-0.3740	-0.2839	0.0434*	0.1124***
상품시장규제×소득1	-0.0367***	0.0141	-0.0231**	0.0161
상품시장규제×소득2	-0.0885***	-0.0221	-0.0789***	-0.0121
상품시장규제×소득3	-0.0989	0.0401	-0.0165	-0.0392**
정규고용보호×소득1	0.3821	-3.2748*	2.5450	-2.5089
정규고용보호×소득2	0.8218	-3.0875	-1.8968	-1.3740
정규고용보호×소득3	53.7969*	27.7315	-3.0074	-8.6928***
교육1(고졸 & 대재 및 중퇴=1)	1.8259	3.9995	1.5831	0.5900
교육2(전문대 & 대졸 이상=1)	0.1067	1.4656	2.7113	2.4095
상품규제시장×교육1	-0.0248	-0.0196	-0.0184	-0.0026
상품규제시장×교육2	-0.0173	-0.0037	-0.0417**	-0.0193
정규고용보호×교육1	0.0101	-0.0174	0.0048	-0.0044
정규고용보호×교육2	0.0184	-0.0089	0.0196	-0.0048
결혼유무(기혼유배우=1)	-0.1600***	-0.0042	-0.1158***	-0.0222
산업더미(제조업=1)	0.0740**	-0.0446	0.0047	0.2654***
직종더미(관리자 & 전문가=1)	-0.0285	0.0067	-0.1398***	-0.1304***
종사상지위더미1(상용직= 1)	-0.5762***	-1.0380***	-0.4920***	-0.5135***
종사상지위더미2(임시직 & 일용직=1)	0.1154***	-0.6636***	0.5126***	0.1918***
종사상지위더미3(무급가족종사자=1)	-14.5039***	0.1650	-0.2720***	0.0538
지역더미(서울=1)	0.0099	0.0862***	0.0121	0.0170
상수항	7.5455***	1.6414	8.1336***	6.3914***
N	71,680	71,680	80,010	80,010

주: *** p<0.01, ** p<0.05, * p<0.1.

The Effects of Economic Policy on Individual Income Volatility

Park Moonsoo · Lee Kyounghee · Kim Jongho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policies on the volatility of individual's earned incomes using the Korean labor panel data and OECD's the Product Market Regulation(afterward, PMR) and Employment Protection - Regular Contracts(afterward, EPRC) index data. When it comes to policies such as the PMR, income volatility per hour of individuals increased as the regulation reinforced. The effect of the regulation can seem unsymmetrical depending on individual's characteristics including incomes or education backgrounds. In addition, to see the policy of the EPRC, individual's volatility including incomes per hour and working hour decreased as the employment protection strengthened. This relationship of the inverse proportion continued regardless of individual's characteristics such as incomes or education backgrounds. However, to see the effect of policy of the EPRC, the volatility of incomes per hour and working hour decreased considerably as an income level increased.

Keywords : product market regulation, employment protection regular contracts, volatility of incomes per hour and working hour

노동정책연구

2017. 제17권 제3호 pp.113~153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및 고용성과 비교연구

남재욱*

본 연구는 OECD 24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정책이 빈곤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일한 정책도 제도환경의 영향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관점에서, 소득보장, 활성화, 워크페어 정책이 고용보호, 노동시장 분절,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 제도와 결합하여 빈곤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으로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정책은 주변 제도환경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노동시장의 분절 정도가 낮고,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빈곤과 고용 양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노동시장 분절이 높고, 조정의 정도가 낮고, 정규직 고용보호가 엄격할 경우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소극적·적극적 정책의 결합을 통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소득보장정책과 빈곤, 활성화정책과 고용뿐 아니라, 반대의 결합도 확인되었다. 즉,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빈곤과 고용 양 측면에서 동시에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워크페어 정책은 제도환경의 맥락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노동시장 제도환경이 불리한 경우 우선 노동시장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 노동시장정책, 소득보장, 활성화, 워크페어,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논문접수일: 2017년 8월 1일, 심사외일: 2017년 8월 10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17일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jwnahm@gmail.com)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OECD 24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정책이 빈곤 및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동일한 정책도 제도환경의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핵심적인 노동시장정책과 관련 제도환경 간 상호작용에 의한 결합 인과관계를 탐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원인조건들의 결합을 통해 결과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 :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을 활용한다.

실업 및 고용에 대한 사회정책은 전통적으로 실업자의 소득보장을 핵심으로 했다.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황금기 노동시장에서 실업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실업에 대한 관리는 실업보험을 통한 소득지원이 중심이 되었다.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은 불황기에 실업자의 소득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지원하고, 실업자가 숙련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자동적 경기조절장치로 작동하였다. 또한 제조업 중심 고용구조와 정합성이 높은 장기고용을 지원하기도 했다(Clasen, 1999).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은 노동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고,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 노동시장정책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불안정화, 이중화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와, 실업률 상승 및 실업기간 증가 속에서 실업보험은 비용압박과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기능의 부전에 직면했다. 1980년대 이후, 늦어도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적극적 복지국가로의 전환’ 혹은 ‘활성화 전환(activation turn)’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한다(Bonoli, 2013).

전통적인 노동시장정책이 ‘빈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탈산업사회의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을 강조한다. 많은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실업률보다 고용률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업자의 소득보장이 더 이상 정책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고용확대는 그 자체로 저소득 계층의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유연안정성 모델’이

나 ‘사회투자접근’과 같은 새로운 사회정책의 흐름들은 적극적 정책과 전통적 소득보장의 결합을 강조한다(Madsen, 2004; Hemerijck, 2014).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빈곤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다. 실업자의 소득보장이 노동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연구주제였으며(Moller et al., 2003; de Beer & Schils, 2009; Røed & Zhang, 2003; Lalive & Zweimüller, 2004; Nichell et al., 200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고용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Kluve, 2006, 2010; de Beer & Schils, 2009; Arpia & Mourre, 2012). 본 연구와 유사하게 노동시장 정책뿐 아니라 주변 제도를 함께 고려한 연구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OECD, 2006; Garda & Ziemann, 2014; Pareliussen, 2014).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에 있어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미시적 수급자 행동 관점이 아닌 국가 단위의 거시적 제도 비교 관점에서 접근한다. 노동시장정책 성과에 제도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할 때, 국가 단위의 제도 비교를 통해 정책과 제도의 상호작용이 가져오는 결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성 중심(diversity-oriented) 연구 관점을 취한다. 성과에 이르는 원인들은 독립변수로서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들 간의 조합 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을 갖는다고 보아 정책과 제도 환경의 결합을 분석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견 모순돼 보이는 노동시장정책의 두 목표 - ‘빈곤방지’와 ‘고용확대’ - 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정책목표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과거의 연구들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기존의 노동시장정책 성과에 관한 연구들을 학술적으로 보충하고, 노동시장 성과를 위해 서로 다른 제도환경하에 있는 국가들이 어떤 정책 패키지를 필요로 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책과 제도환경, 그리고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노동시장정책의 목적과 그 변화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은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한 실업자 소득보장이었다. 직업소개,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창출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 Active Labor Marker Policy)도 실업 프로그램의 한 영역이었지만, 스웨덴의 경우를 제외하면 핵심 정책은 아니었다(Clasen & Clegg, 2011).

산업사회 복지국가의 노동시장은 완전고용을 전제하였다. 실업은 직업에서 직업 사이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외적인 상황이거나, 일부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겪는 문제였다. 따라서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것보다는 소득을 지원하여, 빈곤을 방지하고 숙련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현금급여를 통한 실업자 소득보장은 현재에 이르러 ‘소극적(passive)’인 것으로 취급되지만, 전통적으로는 생산성 기능을 가졌다. 장기고용을 촉진하고 표준적 고용관계를 안정시키며, 노동시장의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고,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하에서 피용자의 숙련투자를 유도했을 뿐 아니라, 케인스주의 정책의 한 축으로서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 기능을 수행했다(Clasen, 1999; Atkinson & Mickewright, 1991; Acemglu & Shimer, 2000; Esteves-Abe et al., 2001).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이를 크게 변화시켰다.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기업 간 경쟁 심화, 자본 이동성 증가로 인한 케인스주의적 노동-자본 합의구조 약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에 따른 제조업 고용능력 약화, 서비스업으로의 고용구조 중심이동 등의 현상은 ‘완전고용’과 ‘표준적 고용관계’로 대표되던 자본주의 황금기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꿨다(Iverson & Wren, 1998; Mishra, 2002; Streeck, 2015; 신광영, 2013). 노동시장 변화는 고용의 유연화와 불안정화, 실업률 상승과 장기실업 증가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과거처럼 한 직장

안정적으로 고용되지 않으며, 더 쉽게 실업하고, 실업기간도 길어졌다. 많은 국가에서 표준적 고용관계는 더 이상 고용의 ‘표준’이 되지 않으며, 비정규직과 저임금고용이 증가했다(Clasen & Clegg, 2006; Buschoff & Protsch, 2008; Standing, 2011; van Staveren & van der Hoeven, 2012; OECD, 2015). 장기고용 효과를 기반으로 한 산업사회 노동시장정책의 생산성 기능은 약화됐고, 고용 및 실업에 대한 정책변화가 요구되었다.

많은 연구들이 지난 수십 년간 주요 선진국 노동시장 및 복지국가 정책 변화와 그 일부분으로서 실업정책 변화를 분석해왔다(Schmid, 1998; Peck, 2001; Wlthagen & Tros, 2004; Dingeldey, 2007; Vis, 2007; de Beer & Schils, 2009; Clasen & Clegg(eds.), 2011; Kananen, 2012; Turrini et al., 2015 등). 이 같은 연구들은 탈산업사회 노동시장정책을 좀 더 광범위한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재편과 연계하여 ‘제3의 길’, ‘위크페어 전환’, ‘사회투자접근’, ‘적극적 복지국가’, ‘유연안정성’ 등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유연안정성은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유럽사회모델(European social model)’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졌다(정희정, 2007). 노동시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이 전환의 핵심은 실업과 관련된 사회정책의 목표가 빈곤방지에서 노동시장 재통합으로 전환되고, 과거에는 노동시장정책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에 대해서까지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이 ‘빈곤’에서 ‘고용’으로 이동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활성화(activation) 정책이다. 활성화 정책은 오랫동안 노르딕모델의 특징적인 요소였지만,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활성화 전환(activation turn)’이 나타났다(Bonoli, 2013). 활성화 전환에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강조한 영국식 근로연계복지(workfare)나, 실업자의 인적자본을 강조하는 북유럽 식의 적극적 접근이 모두 포함된다. 그렇다고 두 유형의 정책수단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고용극대화’라는 목표는 동일하더라도 급여 수급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조건과 제재를 부여하는 접근은 ‘부정적 활성화’로, 실업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중시하고 일자리 제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접근은 ‘긍정적 활성화’로 구분된다(Torfin, 1999; Barbier, 2004; Taylor-Gooby, 2004). 정책에 내재된 관점이나 사회적 보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업급여를 통한 소비평탄화(consumption)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고용확대로의 전환은 사회정책의 방빈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Cantillon(2011)은 적극적 복지국가나 사회투자적 접근의 수혜자는 ‘가장 빈곤한 계층’보다 덜 빈곤한 계층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최하층 빈곤문제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력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는 노동시장정책보다 좀 더 넓은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이지만, 활성화를 비롯한 노동시장정책의 수단과 목표의 전환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정책과 그 목표의 관계를 ‘소득보장 - 빈곤’, ‘활성화 - 고용’의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첫째, ‘유연안정성’에 관한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은 상호보완적 성격이다(Wilthagen & Tros, 2004; Madsen, 2004). 사회투자적 접근을 옹호하는 이들도 강조하는 부분이다(Vandenbroucke & Vleminckx, 2011; Hemerijck, 2014). 둘째, Cantillon의 문제제기와 달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증가는 노동시장 약자(외부자)에게 주로 작용한다는 입장도 있다(Thelen, 2014). 논리적으로도 실업자를 조기에 재취업시키거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작용한다면, 빈곤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¹⁾

이런 시각에서 보면 탈산업사회의 변화는 노동시장정책의 목표를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확장’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완전고용 시대에 빈곤방지만을 고려했다면, 탈산업사회 노동시장에서는 빈곤방지에 노동시장 통합성 확대가 더해졌다. Andersen과 Jensen(2002)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사회권 개념이 단순히 경제적 보장만이 아닌 사회적 참여를 요구한다고 보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전통적인 소득 보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사회권 보장의 새로운 방식이 된다.

1) 다만 ‘적극적 복지국가’의 정책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정책’ 등으로 확대하여 볼 때는 ‘어떤 계층이 혜택을 보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Cantillon의 경우 본 연구와 달리 노동시장정책만이 아닌 사회투자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노동시장정책 성과 연구

노동시장정책의 목표가 실업자의 ‘빈곤방지’와 근로가능인구의 ‘고용극대화’에 있다고 볼 때, 정책적 관심사는 결국 ‘어떤 정책이 빈곤과 고용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가?’이다.

직관적으로는 ‘소득보장 - 빈곤방지’, ‘활성화 - 고용확대’라는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복잡한 결과를 보인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소득보장이 빈곤이나 불평등 측면에서 갖는 긍정적인 역할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만(Moller et al., 2003; de Beer & Schils, 2009; Castles, 2008), 실업자의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실업기간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수반된다(Røed & Zhang, 2003; Lalive & Zweimüller, 2004; Nichell et al., 2005). 모순된 평가가 나타나는 것은 활성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활성화 정책의 핵심수단인 ALMP는 실업급여의 근로유인 약화를 보완하고, 실업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Madsen, 2006), 실제로는 거의, 심지어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연구들도 있다(de Beer & Schils, 2009; Kluve, 2010 등 참조). 일부 연구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데, 취약집단에 초점을 맞추수록 효과가 크고 지출뿐 아니라 프로그램 구성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Kluve, 2006, 2010; de Beer & Schils, 2009; Arpia & Murre, 2012). 덴마크에서는 ALMP의 동기부여 효과, 잠금효과, 훈련(자격) 효과를 모두 고려한 순고용효과 연구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Madsen, 2009).

실업자 소득보장 및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이처럼 제각각인 이유 중 적어도 일부분은 이 정책들이 실행되는 제도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제도환경하에서 작용하며, 정책이 유사하더라도 제도환경이 다르면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 Bonoli(2003)는 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정책을 통한 재분배뿐 아니라, 고용보호법제(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를 비롯한 노동시장 법적 규제, 단체협약을 통한 조정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제도들은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한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 간의 서로 다른 조합이 동일한 목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Vis(2007)나 Gallie와 Paugam(2000) 또한 고용 및 실업정책 분석의 범위에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뿐 아니라 EPL의 엄격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Arpaia and Mourre(2012)도 EPL이나 노조조직률과 같은 노동시장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노동시장 제도환경과 사회정책을 함께 반영한 실증연구에서도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직접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효과가 강조되는가 하면, 제도환경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타나기도 한다. de Beer와 Schils(2009)는 실업급여, ALMP, EPL 및 이들의 상호작용항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했지만, 세 요소의 결합이 최적의(optimal) 정책혼합을 형성한다는 결론에 접근하지 못했다. OECD(2006)에서는 EPL, 상품시장 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노동시장정책, 단체협약을 독립변수로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수요측면의 개입(EPL과 PMR)이 고용효과가 있는 반면, 공급측면의 개입(노동시장정책,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Garda and Ziemann(2014)은 실업급여, ALMP, 조세를 통한 소득이전, PMR, EPL이 근로자의 소득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업급여, ALMP, 조세와 이전정책은 긍정적 영향을, PMR은 부정적 영향을 가지며, EPL의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하였다. Pareliussen(2014)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 ALMP 지출, 단체협약 적용범위, 소득세 부담, EPL, PMR의 여섯 가지 요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높은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이 평등을 촉진하며, ALMP를 통해 근로역유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기존 실증연구에서 간과되었지만 이론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요인도 있다. 노동시장 내·외부자 분절의 정도가 그것이다. 노동시장 내·외부자 분절 논의는 초기에는 실업자나 비공식 부문 종사자와 같이 ‘고용 밖에 있는 사람’(out-of-employment)을 2차 노동시장 종사자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비정규 고용(atypical employment) 증가로 최근에는 고용되어 있지만 종전의 표준적 고용에 비해 ‘불완전하게 고용된(underemployment)’ 이들로 초점이 이동하였다(Davidsson & Naczyk, 2009). 많은 연구가 비정규 고용

을 중심으로 분절 노동시장의 영향력을 다루었다. 예컨대 네덜란드나 독일의 ‘고용기적’을 다룬 연구들은 비정규 고용이 고용증가의 배경이 되었지만 그 결과 저임금 노동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였다(Visser & Hemerijck, 1997; Eichhorst & Marx, 2011). 이 같은 경향은 대륙유럽 국가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노동시장 내부자에 대한 고용보호(EPL)를 어느 정도 유지한 가운데 주변부 노동자에게 노동시장 유연화를 집중시킴으로써(flexibility at the margin) 고용 증가를 모색하였다(Cahuc & Postel-Vinay, 2002; Hinrichs & Jessoula, 2012). 그러나 이는 임금, 고용안정성, 불리한 고용조건으로 인해 경제적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를 증가시키게 된다(Davidsson & Naczyk, 2009). 최영준(2013)은 한시적 고용(temporary employment)과 시간제 고용(part-time employment)의 증가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분절의 증가가 지난 20년 동안 외적·내적 유연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가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노동시장정책과 제도환경을 함께 고려한 기존 실증연구의 하나의 보완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방법론적 차원이다. 기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각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가 독립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correlation)를 탐구하였다. 물론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독립변수의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Ragin(2000)에 따르면 이 가정은 현실에서의 인과적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²⁾ 그렇다면 현실에서 인과관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의 맥락(context)을 기본 전제로 한 분석을 통해 기존연구를 보충하는 새로운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변수 간 상관관계에 기초한 연구에서도 다른 변수의 영향과 같은 맥락(context)의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활용한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이 항상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연구자가 매우 구체화된 가설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Ragin(2000)은 이 때문에 상관관계에 기초한 연구방식은 새로운 가설의 구성이 아닌, 이미 잘 구성된 가설의 검증에서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Ⅲ.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소득보장, 활성화 정책, 급여조건화를 통한 워크페어라는 세 가지 노동시장정책이 주변 제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빈곤방지’와 ‘고용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제도환경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빈곤과 고용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빈곤방지와 고용증진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무엇인가? 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상반되는가? 아니면 어떤 공통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다양성 중심 연구가 가정하고 있는 인과관계의 복잡성이, 소득보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문한다. 국가별/시기별로 다른 노동시장 환경은 동일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효과를 갖게 할 수 있는데, 노동시장정책 및 그 주변제도와 노동시장 성과 간의 결합인과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결합인과관계 탐구를 위한 조건들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³⁾

노동시장정책의 성과가 되는 결과변수로는 ‘빈곤방지’와 ‘고용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원인조건으로는 우선 분석의 핵심이 되는 노동시장정책에 실업자의 소득보장, 활성화, 그리고 급여수급조건에 엄격성을 포함한다. 이 중 실업자의 소득보장과 활성화는 각각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나타내는데, 노동시장 정

3) 본 절에서는 어떤 원인조건과 결과조건을 연구모형에 포함시킬지만을 제시한다. 각각의 조건들의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책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 핵심적인 분석대상으로 다루어져왔다. 급여수급 조건의 엄격성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업자에게 어느 정도 엄격한 조건(conditionality)을 부과하는가를 나타낸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해왔으나, ‘워크페어의 증가’ 혹은 ‘부정적 활성화’를 ‘긍정적 활성화’와 구분해서 보여준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Knotz & Neldson, 2013). 긍정적 활성화와 부정적 활성화는 기본관점과 사회권 보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그렇다면 노동시장 성과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시장정책의 제도환경으로는 ① (정규직) 고용보호, ② 사회적 파트너, 특히 노동조합에 의한 조정(coordination), ③ 노동시장 분절의 정도를 설정하였다. 이 조건들은 선진 복지국가에서 탈산업사회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가져온 변화들을 포괄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을 통한 조정의 약화, 고용보호 법제의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내·외부적 유연성 증가, 그리고 비정형 고용 증가를 통한 주변부의 유연화(flexibility at the margin)를 보여주는 요인들이다(Cahuc & Postel-Vinay, 2002; Emmenegger et al., 2014; Thelen, 2014).

이들 중 고용보호의 정도와 사회적 파트너에 의한 조정의 정도는 초기의 이중노동시장 논의에서 노동시장 경직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요소들이며(Lindbeck & Snow, 1988, 2001), Bonoli(2003)가 제시한 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성에서 사회정책의 기능적 등가물로 작용하는 제도들이기도 하다. 또한 양적 분석을 활용한 종전의 노동시장 성과분석 연구에서 대부분 설명변수로 포함되었던 요소들이다(OECD, 2006; Pareliussen, 2014).

노동시장 분절의 정도는 이와 달리 기존의 노동시장 성과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이론적 관점에서 비정규 고용(atypical employment)으로 대표되는 주변부 일자리는, 한편으로 고용과 해고(hire and fire) 규제가 낮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을 양적으로 증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상당수 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낮출 수 있다. 1980~9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나타난 ‘악덕에서 악덕으로의 전환(turning vice into vice)’-고용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불안정 고용을 용인하는 것-은 노동시장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Palier, 2012).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수들 중 본 연구의 원인조건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

에는 상품시장규제(PMR), 조세부담, 조세를 통한 소득이전 등이 있다. 이들 변수를 분석범위에서 배제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본 연구는 FSQCA 관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노동시장 제도환경’의 결합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요인들까지 포함하는 것보다, Bonoli(2003) 등이 제시한 것처럼 좀 더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⁴⁾ 둘째, 방법론적 차원에서 볼 때 FSQCA는 결과조건과 관련이 있는 모든 요인들을 원인조건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Schneider와 Wagemann(2010)은 이론적 관련성이 높은 조건들을 중심으로 ‘적정한 숫자의 조건들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QCA 연구를 위해 중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동선(2016)은 원인조건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 중 일부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밀접히 관련된 요인들로, 노동시장정책의 기능적 등가물로 작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제도환경을 주요 원인조건으로 설정하였다.⁵⁾

두 번째 연구문제는 탈산업사회 노동시장정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표인 ‘소득유지를 통한 빈곤방지’와 ‘노동시장 통합을 통한 고용확대’를 위한 경로가 모순되는지, 아니면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이론적으로 소득보장은 빈곤에, 활성화는 고용에 작용하면서 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Madsen, 2006; Pareliussen, 2014). 그러나 실제의 인과관계는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것보다 복잡하며, 워크페어 정책이나 사회투자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 모순되는 경로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목표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하는 것은 이론적·정책적 차원에서 상당한 함의가 있다.

-
- 4) PMR이나 소득세부담과 같은 요인의 경우 노동시장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에 가깝다. 물론 경제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지만, 그 효과는 간접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세를 통한 소득이전의 경우 노동시장정책 요인에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회부조 정도를 제외하면 중복되는 변수가 된다.
- 5) 그럼에도 선행연구에서 어떤 식으로든 PMR, 조세부담, 조세를 통한 소득이전이 고용이나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비록 그 중요도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제시된 바 있기에, 이들을 배제한 본 연구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향후 좀 더 많은 원인 변수들을 분석의 지평에 포함하되, 결합인과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혼합방법론 연구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を 표한다.

2. 분석방법 및 조건(conditions)의 정의

본 연구는 FSQCA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정책 및 관련 제도와 노동시장 성과 사이의 결합인과관계를 탐구한다. FSQCA는 고집합(crisp-set) 이론에 근거한 QCA와 마찬가지로 원인을 구성하는 조건들과 결과조건 사이의 부분집합관계를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그러나 QCA와 달리 FSQCA는 어떤 사례의 원인이거나 결과조건 집합에 대한 소속관계를 이분법(소속/비소속)이 아닌 정도(degree)로 표현한다. 완전한 소속과 비소속 사이에 수많은 부분적 소속을 두는 것이다. 이 때문에 퍼지셋은 양적이면서 질적이고, 현실의 개념이 가진 속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Ragin, 2000).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관련한 FSQCA의 장점은 이것이 현실의 복잡성을 전제로 하는 다양성 중심 방법이라는 데 있다. 다양성 중심 연구는 질적·사례 중심적 연구와 양적·변수 중심적 연구의 중간에 위치한다. 사례를 해석 가능한 전체로 보고 현실의 복잡성을 고려하는 질적 연구의 장점과, 사례 간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광범위한 일반화를 가능하게 하는 양적 연구의 장점을 조건들의 조합을 통한 유형 분석으로 통합한 접근방법이다. 특히 어떤 결과에 이르는 경로가 여러 조건들의 조합(causal combinations)으로 존재하며,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들(paths 혹은 recipes)이 있다고 본다는 점, 그리고 인과의 복잡성(causal complexity)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담기에 적합하다(Ragin, 2000, 2008; 최영준, 2009).⁶⁾

FSQCA를 위해서는 먼저 어떤 조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탐구할지 결정해야 한다. 탐구하고자 하는 결과조건과 그 결과조건에 이르는 원인조건들을 정의한 후 원인조건과 결과조건 사이의 필요성(necessity)과 충분성(sufficiency)을 검증함으로써 결합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원인조건에 노동시장정책(실업자 소득보장, 활성화, 급여조건의 엄격성)과 노동시장 제도환경(고용보호,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 노동시장 분절 정도)이 포함된다는 것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이들 각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업자 소득보장은 각 국가의 GDP 대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6) 각 단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Ragin(2000, 2008), 이승윤(2014) 등을 참조하시오.

기초하되, 실업률 증가 시 자연증가하는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조정실업률(harmonized unemployment rate)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다. 활성화 정책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각 국가의 GDP 대비 ALMP 지출 수준을 조정실업률로 나눈 값을 활용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각 국의 제도가 가진 상이한 규정들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Hasselplflug(2005), Venn(2012), Langenbucher(2015)가 평가하여 지수화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⁷⁾

고용보호법제(EPL) 지수는 OECD에서 파악하여 제시하는 자료 중 정규직 근로자의 개인적·집단적 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규제를 기준으로 하였다. OECD의 EPL 지수는 크게 ‘정규직의 해고와 채용에 관한 규제의 엄격성’과 ‘한시적 고용 사용조건의 엄격성’으로 나누어진다. 연구 목적에 따라 전자의 지수만을 활용하기도 하고(예, Pareliussen, 2014; 이예린, 2015),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기도 한다(예, Vis, 2007; 김종일, 2010).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정규직에 대한 지수만을 활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분절의 정도를 비정규직(한시적 고용과 시간제 고용)의 사용비중으로 정의하여 원인조건에 포함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EPL의 실질적인 내용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까다로운가?’에 있다고 할 때, 비정규직 사용비중은 이 규제의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은 중복되는 면이 있다. 둘째, Chung(2012)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EPL은 실제 각 국가의 비정규직 사용비중과 관련성이 매우 낮으며, 차라리 정규직에 대한 EPL의 관련성이 더 높다. 이는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보다는 ‘정규직의 채용과 해고의 비용이 얼마나 높은가?’를 더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요컨대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EPL 지수보다 비정규직 고용비중이 더 적합한 지표다.

사회적 파트너를 통한 조정의 정도는 노조조직률(union density)과 단체협상 적용범위(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를 대리변수로 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7) 이들은 조금씩 다른 항목들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공통의 항목만을 뽑아서 비교 가능하도록 지표를 추출하였다. 세부적인 자료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사회적 파트너 요소를 포함할 때 널리 활용되었던 것들이다.

노동시장 분절의 정도는 OECD의 정의에 따른 한시적(temporary) 고용과 시간제(part-time) 고용 비율을 기준으로 했다. 전통적인 노동시장 내·외부자 분할 이론의 관점(out-of-employment 개념)까지 고려할 때, 이 두 변수만으로 노동시장 분절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시장 분절 논의가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불완전 고용(underemploymen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한시적 고용과 시간제 고용이 80~9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주변부 유연화 및 불안정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원인조건으로서의 노동시장 분절을 대리하기에 적합성이 있다(Davidsson & Naczyk, 2009; 최영준, 2013).⁸⁾

실제 분석에서는 전술한 8개의 요인들 중 한시적 고용과 시간제 고용 비율을 ‘노동시장 분절’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상 적용범위를 ‘단체교섭에 의한 조정’으로 개념화하여 통합하였다. 이는 효과적인 FSQCA를 위해 적절한 원인 조건의 수를 조정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중첩적인 개념을 가진 조건들을 통합함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려는 것이기도 하다. 통합은 Ragin(2000)이 제시한 ‘고차원 구성(higher order construction)’ 방법 중 ‘보충성(compensation)’ 규칙에 의거하여 두 지표의 퍼지셋 소속점수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⁹⁾

결과조건 중 소득과 관련된 성과는 근로연령대 인구 빈곤율에 기초할 것인데, 이는 실업자의 빈곤율과 달리 ‘실업으로 잡히지 않은 비활성 인구’의 빈곤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용 또한 동일한 이유로 고용률의 역수 개념인 Amable(2008)의 무직률(jobless rate)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다.

분석은 OECD 24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¹⁰⁾ FSQCA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
- 8) 실업률은 그 자체로 노동시장 분절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업률은 결과변수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9) Ragin(2000)은 조건들을 통합하기 위한 고차원 구성 방법으로 약한고리(weakest) 규칙, 대체성(substitution) 규칙, 보충성 규칙을 제시하였다. 이 중 보충성 규칙은 통합의 대상인 두 조건이 모두 높을 때가 하나만 높을 때보다, 하나만 높을 때가 둘 모두 낮을 때보다 고차원(higher order) 조건의 수준이 높다고 여겨질 때 적용된다.
- 10)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OECD 회원국

〈표 1〉 각 조건들의 정의, 지표, 자료출처

구분	조건	정의	출처
원인 조건	소득보장	GDP 대비 소극적 노동시장 지출/실업률×100	OECD stats.
	활성화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실업률×100	
	급여수급조건 엄격성	실업급여 자격조건 지수 (indicator of eligibility criteria for UBs)	선행연구*
	정규직 고용보호	정규직 노동자 고용보호법제(EPL) 지수	OECD stats.
	한시적 고용	한시적 고용/임금근로자	
	시간제 고용	시간제 고용/임금근로자	
	노동조합	노동조합 조직률	
	단체협상	단체협상 적용범위	선행연구**
결과 조건	빈곤율	18~64세 상대빈곤율 (중위 60% 기준)	OECD stats.
	무직률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근로연령대 인구	

주: * Hasselplflug(2005); Venn(2012); Langenbucher(2015).

** OECD(2012, 2016).

모든 원인조건 조합을 도출하고 이 조합들과 사례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우 6개의 원인조건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26개의 조합이 나타난다. 따라서 24개 사례로 64개 조합을 분석하게 된다. 물론 고전집합에 기초한 QCA와 달리 FSQCA에서 하나의 사례는 여러 조합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례에 비해 원인조건의 이론적 조합이 지나치게 많으면,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 문제가 과도해질 수 있다(Schneider & Wagemann, 2010).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의 원인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세 시점에 대해 추출하여 각기 다른 사례로 간주하였다.¹¹⁾ 이처럼 각 국가를 시점별로 다른 사례로 취급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추출한 후 각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국가들을 제외하였다.

- 11) 단, 급여수급조건 엄격성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11년을 기준으로 한 Venn(2012)의 연구를 두 번째 시점(2006~2010년)의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급여수급조건을 지수화한 것이 시점별로 크게 변하지 않고, 실제로 2011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도 거의 대부분 국가가 동일한 점수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2011년의 지수를 [2006~2010년]의 값으로 삼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지만, 비교연구에서 흔히 그런 것처럼 확보가능한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있으며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하는 것은 FSQCA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양적 분석에서는 집적 시계열 자료(pooled time-series data) 형태로 널리 사용된다. 이를 응용할 경우 사례수를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간 횡단면적 차이에 더하여 한 국가 내에서의 종단적 차이도 분석할 수 있다. 게다가 본 연구의 첫 시기(2001~2005년)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활성화 전환(activation turn)’이 거의 모든 유럽 국가로 확산된 시점이며(Bonoli, 2013), 두 번째 시기(2006~2010년)는 2008년 금융위기 및 뒤이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정책 변화가 나타난 시점이다(Vis et al., 2011; Clasen et al., 2012; Heyes, 2013). 그리고 세 번째 시기(2011~2015년)는 위기로 인한 단기적 충격이 어느 정도 지나고 ‘뉴노멀(new normal)’로 불리는 새로운 경제적 환경이 자리를 잡은 시점이다. 이와 같은 거시적 환경 변화는 각 시점 간의 차이를 가정한 사례 설정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다만 특정 국가의 예외적인 사례가 여러 시점에 걸쳐 확인됨으로써 과도하게 해석될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원인조건 및 결과조건의 값은 각 지표들의 5년 단위 분석기간별 평균값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평균값을 활용할 경우 특정한 연도의 이례적인 상황이 분석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자료 결측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만 제외하고 평균을 구함으로써 결측치에 대응할 수 있다.¹²⁾ 특정 국가가 5년의 단위기간 내내 어떤 조건에서 결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빈곤에 대한 모형에서는 60개, 고용에 대한 모형에서는 66개의 사례가 최종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¹³⁾

3. 분석자료 및 퍼지 소속 점수 계측(calibration)

FSQCA의 인과관계 분석 직전 단계는 정의된 원인 및 결과조건에 대한 각 사례의 소속정도를 퍼지점수로 전환하는 계측(calibration)이다. 계측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각 조건에 대한 지표가 숫자로 제시되어 있을 때는

12) 원인조건 중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단체협상 적용범위의 경우 특정 연도의 값만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기간의 대푯값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자료의 부족뿐 아니라 해당 지표의 성격상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13) 구체적인 분석 데이터에 대해서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2〉 계측(calibration)을 위한 질적 전환점의 설정

조건의 분류	조건	완전한 소속(0.95)	소속-비소속 경계(0.50)	완전한 비소속(0.05)
노동시장 정책	소득보장	40.0	21.5	2.0
	활성화	20.0	11.0	2.0
	급여자격조건	4.2	3.1	2.0
노동시장 관련제도	고용보호	4.0	2.5	1.0
	한시적 고용	25%	15%	5%
	시간제 고용	30%	16.5%	3%
	노동조합	70%	40%	10%
	단체협상	95%	53%	11%
노동시장 성과(결과조건)	빈곤률	19%	14.5%	10%
	무직률	43%	34%	25%

세 개의 질적 전환점(완전한 소속/완전한 비소속/소속과 비소속의 경계)을 설정하고, 그 사이 값들을 로그비를 활용하여 퍼지점수로 전환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¹⁴⁾ 이때 세 개의 질적 전환점은 연구자의 이론적·실제적 지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계측의 기준으로 사용한 세 개의 질적 전환점은 <표 2>와 같다. 각각에서 ‘완전한 소속’과 ‘완전한 비소속’의 기준은 200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의 해당 지표 수준을 근거로 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2~3개 국가들이 도달한 정도를 0.95로, 가장 낮은 수준의 2~3개 국가들이 도달한 정도를 0.05로 하였다. 이때 질적 전환점이 경험적 지식에 의하지 않고 지나치게 표본 특수적(sample-specific)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도 함께 비교하였고, 가장 높거나 낮은 시기의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소속과 비소속의 경계점은 완전한 소속과 완전한 비소속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14) 계측과 분석을 위해 Fs/QCA 2.5를 활용하였다(<http://www.u.arizona.edu/~cragin/fsQCA/>).

IV. 분석 결과

1.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먼저 노동시장정책과 주변 제도환경의 결합이 근로연령대 인구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결합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첫 단계로 결과조건 및 그 부재(negation)와 각 원인조건 및 그 부재 간의 필요성(necessity)을 검증하였다.¹⁵⁾

결과 해석에 앞서서 본 연구의 일관도(consistency)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관도(consistency)와 설명력(coverage) 개념은 FSQCA 모델에서 원인조건과 결과조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유의하고 영향력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일관도는 양적 연구에서의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에, 설명력은 R^2 값에 해당한다(최영준, 2013). 그러나 FSQCA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는 명백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충분성 검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0.75~0.8 이상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좀 더 엄격한 0.85를 기준으로 하였다. 필요조건의 검증 시에는 충분조건의 경우보다 더 엄격할 필요가 있는데(Ragin, 2008), 본 연구에서는 0.9를 기준으로 하였다.¹⁶⁾

원인조건들과 빈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조건 기준의 일관도를 만족시킨 것은 소득보장의 부재(~ub)와 빈곤(pov)의 관계였다. 소득보장지출이 낮다고

15)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이하에서는 각 원인 결과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각 조건의 부재조건은 앞에 ‘~’ 표시를 붙여서 표기한다. 빈곤: pov, 고용비활성: psv, 소득보장: ub, 활성화: act, 급여수급조건: ecb, 정규직 고용보호: epl,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 spc, 노동시장 분절: atp.

16) 이 밖에 충분성 검증 시에는 PRI(Proportional Reduction Interpretation)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에서는 이론적으로 하나의 사례가 어떤 결과조건과 해당 결과조건의 부정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데, 이는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 PRI는 한 원인조건조합이 결과조건과 결과조건의 부정을 동시에 충족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숫자가 낮을수록 논리적 모순의 위험이 크다(Schneider & Wagemann, 2012). 본 연구에서는 일관도가 0.85를 넘는 사례 중 PRI가 0.5를 넘는 사례만을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3〉 빈곤(pov) 및 빈곤의 부재(~pov)에 대한 필요조건 검증

	빈곤(pov)		빈곤의 부재(~pov)	
	일관도	설명력	일관도	설명력
ub	0.384	0.628	0.507	0.897
~ub	0.937	0.637	0.790	0.581
act	0.455	0.565	0.640	0.861
~act	0.888	0.695	0.676	0.573
ecb	0.663	0.628	0.680	0.698
~ecb	0.681	0.663	0.638	0.672
epl	0.568	0.669	0.618	0.787
~epl	0.820	0.665	0.740	0.650
spc	0.560	0.576	0.702	0.781
~spc	0.787	0.709	0.619	0.604
atp	0.693	0.787	0.578	0.711
~atp	0.745	0.620	0.827	0.744

해서 반드시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는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낮은 소득보장지출을 보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적절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때, 근로연령대 인구 빈곤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그간 실업급여와 근로자의 소득안정성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낸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반면에 빈곤의 부재(~pov), 즉 빈곤방지에 대해서는 필요조건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빈곤방지(~pov)에 대한 충분조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빈곤방지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조건조합은 모두 7가지가 제시됐으며, 모형 전체 일관도는 0.88, 설명력은 0.69로 높은 편이다. 각각의 조합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낮고, 정규직 고용보호가 엄격하지 않은 경우 활성화 정책과 빈곤방지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기존의 이론적 해석에 비추어볼 때 정규직 고용보호가 엄격하지 않아 채용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굳이 비정규 고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으며, 이 상황에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상대적으로 괜찮은(decent)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덴마크(06/10, 11/15), 노르웨이(01/05, 06/10, 11/15), 핀란드(06/10, 11/15), 오스트리아(06/10, 11/15), 프랑스(06/10)가 있었다.

〈표 4〉 빈곤방지(∼pov)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Model : ∼pov=f(ub, act, ecb, epl, atp, spc)			
원인조건조합	원설명력*	순설명력**	일관도
∼atp*∼epl*act	0.5088	0.0234	0.9469
spc*∼atp*ecb	0.4910	0.0755	0.8847
spc*∼atp*∼epl*ub	0.4105	0.0240	0.9169
spc*epl*ecb*act	0.3852	0.0019	0.9589
∼spc*atp*epl*∼ecb*act	0.2679	0.0131	0.9721
atp*epl*ecb*ub*act	0.3360	0.0115	0.9632
solution coverage : 0.688362			
solution consistenc : 0.877580			

주 : * 해당 원인조건조합이 결과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총 설명력(raw coverage).

** 다른 조합들과 중복되지 않는 해당 원인조건조합의 순수한 설명력(unique coverage).

둘째,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이 넓게 나타나고, 노동시장 분절이 낮은 경우 급여조건화를 통한 워크페어 정책의 빈곤방지 효과가 있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한 보호의 사각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비정규 고용비용 자체가 낮은 경우 사회적 파트너 간의 조정은 노동시장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제도환경에서 엄격한 급여수급조건을 통한 재취업에 대한 강제는 빈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국가별로는 덴마크(11/15), 노르웨이(01/05, 06/10, 11/15), 슬로베니아(06/10), 룩셈부르크(06/10), 스웨덴(06/10)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사회적 파트너에 의한 조정이 넓게 이루어지고, 노동시장 분절의 정도가 낮고, 정규직 고용보호가 엄격하지 않은 경우 소득보장정책은 빈곤방지의 충분조건이 된다. 덴마크(06/10, 11/15)와 오스트리아(06/10, 11/15)를 비롯하여 벨기에와 핀란드도 이 조합에 0.5 이상 소속되어 빈곤방지 성과를 보였다.

넷째, 사회적 파트너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정규직 고용보호가 엄격하며, 활성화 지출이 높고, 급여수급조건의 엄격성이 높을 때 빈곤방지가 설명된다. 긍정적, 부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강력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노동시장이 아주 유연하지 않더라도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스웨덴(06/10, 11/15)과 네덜란드(01/15, 11/15)가 그 예이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앞서와 달리 노동시장이 분절 정도가 높은 경우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사회적 파트너에 의한 조정도 제한적이며, 정규직에만 해당하는 고용보호는 엄격하다. 따라서 노동시장 환경이 외부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섯 번째 조합은 활성화 정책의 강화를 통해, 여섯 번째 조합은 긍정적(지출증가)·부정적(자격조건강화) 활성화 정책과 높은 수준의 소득 보장정책을 결합하여 이를 보완한다. 이 중 다섯 번째 조합의 경우 엄격한 급여수급조건의 부재(~ecb)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급여수급조건의 엄격성이 노동시장 외부자를 소득보장 급여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⁷⁾ 단, 다섯 번째 조합에는 독일(06/10, 11/15), 여섯 번째 조합에는 네덜란드(06/10, 11/15) 외에는 0.5 이상 소속된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두 국가의 특수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⁸⁾

다음으로 빈곤의 실재(pov)에 대한 충분조건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의 총 일관도는 0.87, 총 설명력은 0.69로 역시 높은 편이다. 세 가지 조합이 나타났다. 첫째, 노동시장 분절이 높은 경우 활성화 정책 지출이 낮으면 빈곤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스페인(06/10), 포르투갈(전 시기)과 같은 남부유

<표 5> 빈곤(pov)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Model : pov=f(ub, act, ecb, epl, atp, spc)			
원인조건조합	원설명력	순설명력	일관도
~act*atp	0.6185	0.2378	0.9050
act*~ecb*~epl*~spc	0.2942	0.0415	0.9064
~act*~ub*~ecb*~spc	0.3822	0.0266	0.8680
solution coverage : 0.687608			
solution consistency : 0.873072			

17) 실제로 1980~90년대 이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엄격해진 것과 급여수급률 감소 간의 관계가 일부 국가들에서 확인되었다(Clasen and Clegg(eds.), 2011 참조).

18) 물론 해당 원인조건조합에 0.5 이상 소속되지 않은 경우라도, 원인조건조합에 대한 소속 점수보다 결과조건에 대한 소속점수가 높다면 이는 이 조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된다. 요컨대, FSQCA에서 원인조건조합에 0.5 이상 소속된 사례가 한 국가밖에 없다는 점은 해석상의 신중함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예외적인 경우’로 치부할 것은 아니다.

럽, 한국(06/10, 11/15), 일본(06/10)과 같은 아시아, 캐나다(11/15)와 아일랜드(11/15) 같은 영미권, 그리고 폴란드(06/10, 11/15)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활성화 정책 지출은 높지만, 급여수급조건이 엄격하지 않고, 정규직 고용보호가 낮고,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이 낮은 경우다. 이는 이론적으로 다소 설명하기 어려운 조합인데, 해당하는 사례도 2001~2005년의 아일랜드뿐이었다.

마지막 조합은 사회적 파트너를 통한 조정이 넓게 나타나지만, 모든 노동시장정책의 수준이 낮은($\sim act^* \sim ub^* \sim ecb$) 경우로 이탈리아(01/05, 06/10, 11/15)의 사례를 설명한다. 앞서 실업급여의 부재가 빈곤에 대한 필요조건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 조합은 빈곤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 지출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빈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은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둘째,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빈곤방지의 경로는 다양하다. 정규직 고용보호의 정도나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보장정책, 활성화 정책, 엄격한 급여수급조건 중 어느 한 쪽만 높은 경우에도 빈곤방지의 충분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소득보장을 비롯한 다른 조건과의 결합이 필요하긴 하지만,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클 경우에도 활성화 정책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는 활성화 정책이 주로 노동시장 외부자에 대한 지원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Thelen(2014)의 설명과 일치한다. 다만 노동시장 분절을 전제로 한 빈곤방지 사례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특수한 경우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노동시장정책과 고용

노동시장정책과 관련 제도, 그리고 고용성과와의 결합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필요조건분석을 수행하였다. 높은 고용성과에 대한 필요조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낮은 고용성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필요조건이 확인됐다. 소득보장의 부재와 활성화의 부재이다. 즉, 낮은 고용성과를 나타낸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소득보장 수준이 낮고, 활성화 수준도 낮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결합이 고용성과 저하를 방지하는 핵심요소임을 의미한다.

〈표 6〉 낮은 고용성과(psv) 및 높은 고용성과(~psv)에 대한 필요조건 검증

	낮은 고용성과(psv)		높은 고용성과(~psv)	
	일관도	설명력	일관도	설명력
ub	0.398	0.608	0.449	0.854
~ub	0.904	0.569	0.794	0.621
act	0.409	0.467	0.630	0.897
~act	0.910	0.664	0.626	0.568
ecb	0.606	0.539	0.657	0.727
~ecb	0.694	0.619	0.584	0.649
epl	0.586	0.645	0.531	0.727
~epl	0.752	0.563	0.741	0.690
spc	0.593	0.562	0.652	0.769
~spc	0.756	0.636	0.628	0.658
atp	0.572	0.603	0.613	0.805
~atp	0.815	0.629	0.697	0.670

다음으로 ‘어떤 조건들의 조합이 높은 고용성과를 나타는지’, 즉 높은 고용성과(~psv)에 대한 충분조건을 검증하였다.

〈표 7〉 높은 고용성과(~psv)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Model : ~psv=f(ub, act, ecb, epl, atp, spc)			
원인조건조합	원설명력	순설명력	일관도
~atp*~epl*act	0.4549	0.0027	0.8913
spc*~atp*act	0.4585	0.0082	0.9162
spc*epl*ecb*act	0.3557	0.0027	0.9459
~spc*atp*epl*~ecb*act	0.2411	0.0097	0.9246
atp*epl*ecb*ub*act	0.3040	0.0134	0.9562
solution coverage : 0.532377			
solution consistency : 0.903547			

모형전체의 일관도는 0.90으로 매우 높으며, 설명력은 0.53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조합이 확인됐는데, 높은 활성화 정책이 모든 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첫 번째 조합은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낮고, 정규직 고용보호가 엄격하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활성화 정책이 나타나는 경우다. 덴마크(06/10, 10/15), 노르웨이(전 시기), 핀란드(06/10, 11/15)와 같은 북유럽 국가 외

에도 오스트리아(06/10, 11/15)가 이에 해당했다. 대체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유연안정성 국가군으로 분류되는 사례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적 파트너에 의한 조정이 넓게 나타나고, 노동시장 분절이 낮은 가운데 활성화 지출이 높은 경우로 첫 번째 유형과 유사한 결합이다. 대상 사례도 유사한데,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중복되며, 스웨덴(01/05, 06/10)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적 파트너에 의한 조정이 넓게 나타나지고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높은 가운데, 활성화 정책과 엄격한 급여수급조건이 결합된 사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합에 비해 정규직 고용보호 및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부정적 정책수단을 결합한 강력한 활성화 정책으로 높은 고용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스웨덴(11/15), 네덜란드(01/05, 11/15), 오스트리아(01/05)가 이에 해당한다.

빈곤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두 유형은 노동시장 분절의 정도가 높고, 정규직 고용보호가 엄격하며, 사회적 파트너에 의한 조정은 낮거나 무관한 사례다. 네 번째는 독일의 경우로 급여수급조건이 엄격하지 않고 활성화 정책은 높으며, 다섯 번째는 네덜란드의 경우로 높은 활성화 정책, 높은 소득보장, 그리고 높은 급여수급조건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높은 경우 고용성과는 높은 수준의 활성화 정책과 함께,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 지출 혹은 적어도—노동시장 약자의 급여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로—엄격하지 않은 급여수급조건을 필요로 한다. 두 경우 모두 소극적·적극적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외부자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끝으로 낮은 고용성과(psv)에 대한 충분조건을 확인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두 개의 조합이 나타났으며, 모형의 일관도는 0.8, 설명력은 0.65였다.

첫 번째 조합은 정규직에 대한 엄격한 고용보호가 나타나고, 활성화 지출은 낮은 경우로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예다. 두 번째 조합은 활성화 정책과 급여수급조건이 모두 낮은 가운데 사회적 파트너에 의한 조정만 높은 경우로 이탈리아와 벨기에가 이에 해당한다. 활성화의 부재는 낮은 고용성과의 필요조건이었으므로, 여기 나타난 두 조건은 모두 낮은 고용성과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이 두 조합은 노동시장이 분절적이고 유연성이 낮은 상황에서, 활성화 정책이 불충분할 경우 고용성과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8〉 낮은 고용성과(psv)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

Model : psv=f(ub, act, ecb, epl, atp, spc)			
원인조건조합	원설명력	순설명력	일관도
~act*epl	0.5707	0.2083	0.8193
~act*~ecb*spc	0.4423	0.0799	0.8500
solution coverage : 0.650680			
solution consistency : 0.806662			

이상의 고용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분석 모두에서 활성화 정책은 고용성과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조건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관대한 실업급여가 고용성과를 저해한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관대한 실업급여의 부재는—과도한 해석을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낮은 고용성과의 필요조건 성격을 갖는다. 특히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높은 경우 소득보장을 통한 노동시장 외부자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 정책과 결합할 때 높은 고용성과가 나타났다. 셋째, 다른 노동시장 정책과 달리 엄격한 급여수급조건, 즉 워크페어 정책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노동시장이 분절적일지라도 소득보장정책이 두터운 경우 활성화 정책과 결합하여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고 소득보장 정책이 불충분할 때는 급여수급조건이 엄격하지 않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넷째,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연화 정도가 낮은 노동시장에서도 긍정적, 부정적 활성화 정책의 적절한 조합은 고용성과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고용보호의 완화가 고용성과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V. 결론 및 함의

이상과 같이 소득보장, 활성화, 급여수급조건이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정규직 고용보호, 사회적 파트너십, 노동시장 분절과 같은 제도 환

경과 결합하여 근로연령대 인구의 빈곤과 고용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빈곤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소득보장정책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분절적이지 않고, 사회적 파트너에 의한 조정이 넓게 나타난다면 활성화 정책이나 급여수급조건 부여와 같은 다른 정책을 통해서도 빈곤방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높은 경우에도 활성화 정책은 빈곤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활성화 정책이 주 대상으로 하는 계층이 이중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이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측면의 성과는 이론적 예측대로 활성화 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정책은 이론적 예측과 달리 고용 성과를 저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거나, 분절 정도가 높은 경우 노동시장 약자의 소득보장 접근성을 높일 때, 활성화 정책과 결합하여 고용성으로 연결된다. 반면에 엄격한 급여수급조건, 즉, 워크페어 정책은 다른 정책과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다. 노동시장이 분절적이고 소득보장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급여수급조건이 엄격하지 않고, 활성화 정책이 높을 때 오히려 성과가 나타났다. 끝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일반적으로 고용성과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지만, 고용보호가 엄격할지라도 적절한 긍정적·부정적 활성화 정책을 결합해야 고용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III장에 제시한 연구문제와 연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은 노동시장정책의 성과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높지 않고, 사회적 파트너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빈곤이나 고용 성과를 달성하기 용이하다. 소득보장 정책이나 활성화 정책이 각각 빈곤 및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활성화 정책의 경우 빈곤방지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반면에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높거나,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 정도가 낮고, 엄격한 정규직 고용보호로 경직된 제도환경에서는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 성과 창출 경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와 같은 특정한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되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분절적

이고 조정 수준이 낮은 노동시장에서 소득보장 및 활성화 정책이 불충분하다면 낮은 성과로 이어지지만, 이 정책들이 작동한다고 해서 성과를 창출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절적 노동시장 환경에서 노동시장정책 강화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이때 노동시장 환경 개선에 반드시 고용보호의 약화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중요한 제도환경은 노동시장 분절 완화와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 능력 제고에 있다. 다만 엄격한 정규직 고용보호가 노동시장 분절을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

노동시장정책의 서로 다른 두 목표인 빈곤방지과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수단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활성화 정책은 고용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빈곤 측면에서도 영향력을 보였다. 소득보장정책 또한 빈곤방지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고용에 저해가 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분절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고용 측면의 중요성도 가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급여수급 조건 강화를 통한 워크페어 정책은 노동시장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높은 노동시장의 분절이나 낮은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은 두 가지 성과에 모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환경이 필연적으로 낮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노동시장 정책과의 결합에 따라 긍정적 성과의 경로를 형성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연구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한국은 2006~2010년, 2011~2015년 시점에 두 사례로 포함되었다. 한국은 2006~2010년에는 빈곤율은 높고 고용률은 낮았으며, 2011~2015년에는 빈곤율은 중간정도로 나타났지만 고용률은 여전히 낮았다. 노동시장 정책은 두 시점에서 모두 소득보장 지출과 활성화 지출이 낮고, 워크페어 정책도 낮은 편이었다. 제도환경에서는 고용보호가 낮고, 노동시장 분절 정도가 높으며,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은 매우 낮았다. 빈곤과 고용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자원과 정책적 자원이 모두 부족했다. 노동시장 제도환경 개선이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움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당면 과제는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보인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에서 보듯 노동시장 환경이 불리한 경우에도 소득보장과 활성화의 강화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창출하는 경로를 만들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 분절성이나 극

도로 낮은 사회적 파트너의 조정능력을 고려하면, 급여수급조건의 강화보다는 소득보장과 활성화에 대한 지출증가가 필요하며, 급여수급조건 강화가 요구될 경우 소득보장 지출 증가에 동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이후에는 노동시장 제도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일(2010). 「대륙복지국가의 활성화정책 추이에 관한 퍼지 집합 이념형 분석, 2000~2007」. 『사회보장연구』 26 (2) : 253~284.
- 신광영(2013).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 이동선(2016).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정책』 43 (1) : 259~284.
- 이승윤(2014).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 방법론의 이론과 적용: Fs/QCA 입문』.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에린(2015). 「보편적 근로생애를 위한 복지국가의 노동시장 조건: 이행노동 시장이론을 적용한 OECD 14개국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31 (1) : 137~168.
- 정희정(2007). 「유럽연합의 유연안정성 전략: 노동법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 『국제노동브리프』 5 (3) : 56~61.
- 최영준(2009).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 (3) : 1~30.
- _____(2013).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의 구조가 노인소득안정에 미치는 결합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 141~177.
- Acemoglu, D. and R. Shimer(2000). “Productivity gains from unemployment insurance.” *European Economic Review* 44 (7) : 1195~1224.
- Amable, B.(2008). “Structural reforms in Europe and the (in) coherence of institution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5 (1) : 17~39.

- Anderson, J. G. and P. H. Jensen(2002). "Citizenship, changing labour markets and welfare policies: an introduction." in Anderson, J. G. and Jensen, P. H. (eds.). *Changing Labour Markets, Welfare Policies, and Citizenship*. Bristol: Policy Press, pp.1~14.
- Arpaia, A., and G. Mourre(2012). "Institutions and performance in European labour markets: taking a fresh look at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6 (1) : 1~41.
- Atkinson, A. B., and J. Micklewright(1991).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labor market transition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9 (4) : 1679~1727.
- Barbier, J.-C.(2004). "System of social protection in Europe : Two contrasted paths to activation, and maybe a third." in Lind, J., Kundsén, H. and Jørgensen, H. (eds.) *Labour and Employment regulation in Europe*. Brussels: Peter Lang, pp.233~253.
- Bonoli, G.(2003). "Social Policy through Labor Markets Understanding National Differences in the Provision of Economic Security to Wage Earner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6 (9) : 1007~1030.
- _____(2013). *The origins of active social policy : Labour market and childcare polici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Buschoff, K. S., and P. Protsch(2008). "(A) typical and (in) secure? Social protection and non standard forms of employment in Europ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61 (4) : 51~73.
- Cahuc, P., and F. Postel-Vinay(2002). "Temporary jobs, employment protection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Labour economics* 9 (1) : 63~91.
- Cantillon, B.(2011). "The paradox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 growth, employment and poverty in the Lisbon er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1 (5) : 432~449.
- Chung, H.(2012). "Measuring flexicurity : Precautionary notes, a new framework, and an empirical examp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6 (1) : 153~171.

- Clasen, J., and D. Clegg(2006). “New labour market risks and the revision of unemployment protection systems in Europe.” in Armington, K. and Bonoli, G. (eds.).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pp.192~210.
- _____(eds.)(2011). *Regulating the risk of unemployment : National adaptations to post-industrial labour markets in Europ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2011). “Unemployment protection and labour market change in Europe: towards ‘triple integration’?”. in Clasen, J. and Clegg, D.(eds.), *Regulating the risk of unemployment: National adaptations to post-industrial labour markets i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12.
- Castles, F. G.(2009). What welfare states do : A disaggregated expenditure approach. *Journal of social Policy* 38 (1) : 45~62.
- Clasen, J.(1999). “Beyond social security : the economic value of giving money to unemployed peopl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ecurity* 1 : 151~180.
- Clasen, J., Clegg, D., and J. Kvist(2012). “European labour market policies in (the) crisis.” Working Paper 2012.12.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 Davidsson, J., and M. Naczyk(2009). “The ins and outs of dualisation : A literature review.” *Working Papers on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Welfare in Europe*, 02/2009.
- de Beer, P. and T. Schils(eds.)(2009). *The Labour Market Triangle. Employment Protection,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Activation in Europe*, Cheltenham (UK)/Nothampton (MA, USA) : Edward Elgar.
- Dingeldey, I.(2007). “Between workfare and enablement - The different paths to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 A comparative analysis of activating labour market polic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6 (6) : 823~851.
- Eichhorst, W., and P. Marx(2011). “Reforming German labour market institutions: A dual path to flexibility.”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1 (1) :

73~87.

Emmeneger, P., Hausermann, S., Palier, B. and M. Seeleib-Kaiser(eds.)(2012). *The age of dualization :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Esteves-Abe, M., Iversen, T., and D. Soskice(2001). “Social Protection and the Formation of Skills.” in Hall, P. A. and Soskice, D.(eds.) *Varieties of Capitalism :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pp.145~182.

Gallie, D. and S. Paugam(2000). The Experience of Unemployment in Europe : The Debate. in Gallie, D. and Paugam, S.(eds.) *Welfare Regimes and the Experience of Unemployment in Europ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pp.1~23.

Garda, P. and V. Ziemann(2014). “Economic Policies and Microeconomic Stability : A Literature Review and Some Empiric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115, OECD Publishing, Paris.

Hasselpug, S.(2005). “Availability criteria in 25 countries.” Ministry of Finance Denmark Working Paper, 12/2005.

Hemerijck, A.(2014). “Social investment «stocks», «flows» and «buffers».” *Social Policies* 1 (1) : 9~26.

Hinrichs, K. and M. Jessoula(eds.)(2012).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Pension Reforms : Flexible Today, Secure Tomorrow?*.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Heyes, J.(2013). “Flexicurity in crisis : European labour market policies in a time of austerity.”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9 (1) : 71~86.

Iversen, T. I. and A. Wren(1998).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50 (4) : 507~546.

Kananen, J.(2012). “Nordic paths from welfare to workfare : Danish, Swedish and Finnish labour market reforms in comparison.” *Local Economy* 27 (5-6) : 1~19.

- Kluge, J.(2006). “The Effectiveness of Europe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IZA Discussion Paper No. 2018; RWI Discussion Paper No. 37. Available at SSRN : <https://ssrn.com/abstract=892341> Kluge, 2006
- _____(2010). “The effectiveness of European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Labour economics* 17 (6) : 904~918.
- Knotz, C. and M. Nelson(2013). “Quantifying ‘Conditionality’ : A New Database on Conditions and Sanctions for Unemployment Benet Claimants.” *Paper prepared for the 2013 ESPAnet conference* (Poznan, September 5-7).
- Lalive, R., and J. Zweimüller(2004). “Benefit entitlement and unemployment duration : The role of policy endogene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12) : 2587~2616.
- Langenbucher, K.(2015). “How demanding are eligibility criteria for unemployment benefits, quantitative indicators for OECD and EU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rxtk1zw8f2-en>
- Lindbeck, Assar, Dennis J. Snower(1988), “Cooperation, Harassment, and Involuntary Unemployment : An Insider-Outsider Approac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8 (1) : 167~188.
- _____(2001). “Insiders versus Outsider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5 (1) : 165~188.
- Madsen, P. K.(2004). “The Danish model of ‘flexicurity’ : experiences and lessons.” *Transfer :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10 (2) : 187~207.
- _____(2006). “How can it possibly fly? The paradox of a dynamic labour market in a Scandinavian welfare state”, in Cmapbell, J. A., Hall, J. A. and Pedersen, O. K. (eds.) *National Identity and the Varieties of Capitalism: The Danish Experiment*, Montreal: McGill Queen’s University Press, pp.321~355.
- _____(2009). “Denmark.” in De Beer, P. and Schils, T. (eds.) *The Labour*

- Market Triangle. Employment Protection,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Activation in Europe*, Cheltenham (UK)/Northampton (MA, USA): Edward Elgar, pp.44~69.
- Mishra, R.(2002).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지구적 사회정책을 향하여』. (이혁구 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원문출판 1999).
- Moller, S., E., J. Huber, D. Stephens, D. Bradley, and F. Nielsen(2003). “Determinants of relative poverty in advanced capitalist democrac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22~51.
- Nickell, S., L. Nunziata, and W. Ochel(2005). “Unemployment in the OECD since the 1960s. What do we know?.” *The Economic Journal* 115 (500): 1~27.
- OECD(2006).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Boosting Jobs and Incomes*, OECD Publishing Paris.
- _____(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 Palier, B.(2012). “Turning Vice Into Vice: How Bismarckian Welfare State have Gone from Unstability to Dualization.” in Bonoli, G. and Natali, D. (eds.) *The Politics of the New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233~254.
- Pareliussen, J. K.(2014). “Overcoming Vulnerability of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131,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jz1592jj48r-en>.
- Peck, J.(2001). *Workfare States. Guilford Publications*,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Ragin, C. C.(2000). *Fuzzy-set social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øed, K. and T. Zhang(2003). “Does unemployment compensation affect

- unemployment duration?." *The Economic Journal* 113 (484) : 190~206.
- Schmid, G.(1998). "Transitional Labour Markets : A New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Discussion Paper FS I 98~206.
- Schneider, C. Q., and C. Wagemann(2010). "Standards of good practice in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and fuzzy-sets." *Comparative Sociology* 9 (3) : 397~418.
- _____(2012). *Set-theoretic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 A guide to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nding, G.(2011). *The Precariat :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and NY : Bloomsbury.
- Streeck, W.(2015). 『시간벌기 : 민주적 자본주의의 유예된 위기』 (김희상 역). 파주: 돌베개(원문출판 2013).
- Taylor-Gooby, P.(2004). "New Risks and Social Change." in Taylor-Gooby, P. (eds.)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28.
- Thelen, K.(2014). *Varieties of Liberalization and the New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rring, J.(1999). "Workfare with welfare: Recent reform of the Danish welfare stat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9 : 5~28.
- Turrini, A., G. Koltay, F. Pierini, C. Goffard, and A. Kiss(2015). "A Decade of Labour Market Reforms in the EU : Insights from the LABREF database." *IZA Journal of Labor Policy* 4 (1) : 1~33.
- van Staveren, I. P. and R. E. van der Hoeven(2012). "Global Trends in Labour Market Inequalities, Exclusion, Insecurity and Civic Activism." EUR-ISS-CIRI. Retrieved from <http://hdl.handle.net/1765/38412>
- Vandenbroucke, F. and K. Vleminckx(2011). "Disappointing poverty trends: is the social investment state to blam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1(5) : 450-471.
- Venn, D.(2012). "Eligibility Criteria for Unemployment Benefits": Quantitative

Indicators for OECD and EU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31,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9h43kgkvr4-en>.

Vis, B.(2007). “States of welfare or states of workfare? Welfare state restructuring in 16 capitalist democracies, 1985~2002.” *Policy & Politics* 35 (1) : 105~122.

Vis, B., Van Kersbergen, K. and T. Hylands(2011). “To what extent did the financial crisis intensify the pressure to reform the welfare stat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5 (4) : 338~353.

Visser, J. and A. Hemerijck(1997). *A Dutch miracle : Job growth, welfare reform and corporatism in the Netherlan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Wilthagen, T. and F. Tros(2004). “The Concept of Flexicurity : A New Approach to Regulating Employment and Labour Markets.” *Transfer : European Review of Labor and Research* 10 (2),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pp.166~186.

〔부록 1〕 분석대상 및 분석데이터

사례	빈곤율	무직률	소득 보장	활성화	급여 조건	EPL	한시적	시간제	노조	단체 교섭
AU 1	결측	6.1	12.0	6.1	3.69	1.42	4.6	24.0	23.1	50.0
AU 2	15.5	6.7	9.8	6.7	3.61	1.32	6.0	24.2	19.0	46.7
AU 3	15.6	4.6	10.9	4.6	3.61	1.67	5.6	24.9	17.3	60.0
AT 1	결측	11.9	26.9	11.9	3.72	2.52	8.1	14.3	35.1	99.0
AT 2	13.4	14.8	26.4	14.8	2.89	2.37	9.0	18.0	30.0	98.5
AT 3	13.4	14.3	25.9	14.3	2.89	2.37	9.3	20.1	28.1	98.0
BE 1	12.8	9.2	29.1	9.2	2.58	1.89	8.6	18.1	54.7	96.0
BE 2	13.8	8.9	27.1	8.9	2.44	1.93	8.4	18.3	54.5	96.0
BE 3	15.1	9.4	24.4	9.4	2.53	1.96	8.6	18.4	55.1	96.0
CA 2	18.3	4.4	10.0	4.4	2.50	0.92	12.8	18.8	27.3	30.3
CA 3	18.5	3.4	8.3	3.4	2.58	0.92	13.5	19.1	26.9	29.0
CZ 1	9.5	2.5	3.1	2.5	4.31	3.31	9.2	3.1	21.8	46.4
CZ 2	9.1	4.2	4.3	4.2	2.67	3.10	8.5	3.7	17.6	46.1
CZ 3	9.5	5.0	3.6	5.0	2.67	2.97	9.5	4.5	14.3	47.3
DE 1	12.2	12.3	21.0	12.3	2.44	2.68	12.7	19.6	22.8	63.5
DE 2	13.5	11.2	16.1	11.2	2.97	2.68	14.6	21.9	19.4	61.7
DE 3	14.0	12.9	18.2	12.9	2.97	2.68	13.5	22.4	18.3	57.6
DK 1	9.4	34.1	48.0	34.1	2.42	2.13	9.4	16.2	71.5	83.0
DK 2	10.2	31.3	31.8	31.3	3.49	2.13	8.7	18.2	67.5	81.0
DK 3	11.2	28.7	21.7	28.7	3.43	2.20	8.7	19.5	66.8	84.0
ES 1	결측	6.7	13.3	6.7	2.97	2.36	32.4	8.4	15.7	88.0
ES 2	17.6	6.2	16.2	6.2	2.56	2.36	28.9	11.2	16.4	81.9
ES 3	20.8	2.7	11.0	2.7	2.56	2.16	24.2	14.0	16.9	77.6
FI 1	11.7	9.6	21.6	9.6	2.75	2.20	16.4	11.1	72.6	90.0
FI 2	13.1	11.6	20.7	11.6	2.94	2.17	15.5	11.9	69.7	89.8
FI 3	13.5	12.1	19.6	12.1	2.89	2.17	15.6	13.1	69.5	93.0
FR 1	결측	11.7	22.8	11.7	2.72	2.42	13.9	13.4	7.9	90.0
FR 2	12.8	11.3	20.1	11.3	3.35	2.43	14.9	13.3	7.6	94.0
FR 3	13.7	9.6	19.3	9.6	3.35	2.38	15.9	14.0	7.7	98.0
UK 1	15.6	8.1	4.2	8.1	2.00	1.26	6.2	23.1	29.2	34.9
UK 2	16.1	5.3	3.5	5.3	3.51	1.26	5.8	23.5	27.5	33.2
UK 3	15.6	3.3	4.4	3.3	3.83	1.18	6.3	24.5	25.7	29.5
HU 2	13.2	4.9	5.6	4.9	2.06	2.00	8.1	3.4	14.5	31.1
HU 3	15.3	7.7	4.1	7.7	2.06	1.87	10.3	4.8	11.0	23.0
IE 1	16.5	16.3	18.2	16.3	2.72	1.44	4.6	18.7	36.2	54.6
IE 2	15.1	8.7	19.8	8.7	3.42	1.27	8.3	21.8	32.3	42.2

사례	빈곤율	무직률	소득 보장	활성화	급여 조건	EPL	한시적	시간제	노조	단체 교섭
IE 3	15.9	6.3	15.9	6.3	3.19	1.35	9.7	24.3	30.2	40.5
IT 1	16.7	6.8	7.1	6.8	2.75	2.76	10.7	12.9	33.9	80.0
IT 2	16.9	6.3	12.6	6.3	2.94	2.76	12.9	15.7	34.5	80.0
IT 3	18.7	4.0	12.7	4.0	2.94	2.73	13.6	18.1	36.8	80.0
JP 1	결측	4.3	7.9	4.3	2.64	1.70	13.6	18.0	19.8	16.6
JP 2	19.1	3.8	5.9	3.8	2.81	1.44	13.8	19.4	18.3	16.8
JP 3	19.6	4.9	5.3	4.9	2.81	1.37	10.2	21.7	18.1	17.1
KR 2	16.5	6.9	8.2	6.9	2.94	2.37	24.6	9.5	10.1	11.0
KR 3	14.4	9.9	8.7	9.9	2.94	2.37	22.6	11.2	10.0	11.7
LU 2	13.5	10.4	14.3	10.4	4.08	2.25	6.7	14.3	37.3	58.5
LU 3	14.8	11.1	13.2	11.1	4.08	2.25	8.1	15.4	33.3	59.0
NL 1	13.3	28.4	35.4	28.4	4.67	2.88	14.7	34.3	20.8	85.0
NL 2	12.8	23.6	29.0	23.6	3.76	2.86	17.9	36.2	19.2	80.4
NL 3	14.3	13.4	26.9	13.4	3.76	2.82	20.0	38.0	18.0	84.8
NO 1	11.3	17.7	14.0	17.7	3.11	2.33	9.6	20.7	54.7	73.0
NO 2	12.9	18.5	10.2	18.5	3.14	2.33	9.0	20.5	53.4	71.0
NO 3	14.0	14.6	10.7	14.6	3.14	2.33	8.1	19.5	52.9	67.0
PL 2	16.2	5.8	4.6	5.8	3.08	2.23	27.3	9.5	15.2	26.9
PL 3	16.4	4.9	3.3	4.9	3.08	2.23	27.4	7.5	13.2	14.7
PT 1	16.4	9.1	15.3	9.1	3.55	4.52	20.3	9.7	21.5	60.0
PT 2	15.5	6.1	11.5	6.1	4.42	4.36	22.0	9.8	20.7	64.8
PT 3	17.8	3.7	9.6	3.7	4.42	3.63	21.5	11.5	18.9	72.9
SK 1	11.4	1.8	2.0	1.8	3.42	2.34	5.1	2.1	26.1	45.0
SK 2	10.5	2.2	3.9	2.2	3.14	2.22	5.0	2.8	17.5	40.0
SK 3	12.2	1.7	3.0	1.7	3.14	1.93	8.0	4.5	13.6	24.9
SI 2	11.2	5.2	8.0	5.2	3.83	2.65	17.4	8.2	27.7	92.0
SI 3	13.6	3.5	8.2	3.5	3.83	2.49	17.3	8.8	22.1	65.0
SE 1	결측	18.2	17.7	18.2	2.19	2.62	15.0	13.9	77.7	94.0
SE 2	15.3	13.8	10.7	13.8	3.36	2.61	16.4	14.3	70.2	91.0
SE 3	14.1	16.4	7.9	16.4	3.36	2.61	17.0	14.2	67.5	89.0

주: * 사례명의 '1'은 2001~2005년, '2'는 2006~2010년, '3'은 2011~2015년의 값.

** 빈곤율이 '결측'인 사례는 고용성과 모형의 분석에만 사용.

[부록 2] 연도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점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점수는 실업급여 수급에 수반되는 조건을 점수화한 것이다. 1997년 덴마크 재정부(Danish Ministry of Finance)에서 관련 연구를 시행한 이후 유사한 설문 항목으로 바탕으로 Hasselpflug(2005)가 2004/2004년에 대해 Venn(2012)이 2011년에 대해 Langenbucher(2015) 2014년에 대해 시행하였다. 그러나 연도별 연구항목은 조금씩 다른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표 2-1〉 실업급여 수급 자격기준 점수

	Hasselpflug(2004)	Venn(2012)	Langenbucher(2015)
Entitlement Condition	-	2개 항목	-
Availability requirement	4개 항목	4개 항목	4개 항목
Job-search requirements and monitoring	1개 항목	1개 항목	2개 항목
Sanctions	3개 항목	1개 항목	5개 항목

주: * 실제 연구별 항목 구분은 상이한데, 표에서는 가장 최근 연구인 Langenbucher (2015)의 연구를 기준으로 하고, 2012년에만 포함된 Entitlement 항목 추가.

본 연구에서는 비교를 위해 가장 항목이 작은 2004년 연구를 바탕으로 공통된 항목들만 포함하여 시점별 점수를 산정하고, 가중치는 Langenbucher(2015)의 방법에 따라 각 카테고리가 동일한 비중이 되도록 하였다.¹⁹⁾

19) 각 항목별 5점 척도로 산출된 기준에 Availability requirement의 네 항목에는 각각 0.083을, Job-search requirements and monitoring의 1개 항목에는 0.333을, Sanctions의 3개 항목에는 0.1111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부표 2-2〉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문 항목과 점수

	항목	
Availability requirement	1	ALMP 참여 중의 근로 수용가능성
	2	직업적 이동 요구
	3	지리적 이동 요구
	4	일자리 제안 거절의 다른 타당한 사유
Job-search requirements and monitoring	5	구직 보고의 빈도
Sanctions	6	자발적 이직 제재
	7	첫번째 일자리/ALMP 거절 제재
	8	반복적 일자리/ALMP 거절 제재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Labor Market Policies and their Outcomes for Poverty Alleviation and Employment Promotion in 24 OECD Countries

Nahm Jaewook

This study explores causal combinations between labor market policies and their outcomes for poverty alleviation and employment promotion in OECD Countries. In the perspective of diversity-oriented research, we consider institutional environments in labor markets combined with income security, activation and workfare policies.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ly, outcomes of LMPs are varied by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s. It is easier to achieve positive outcomes under integrated and coordinated labor market institutions in both policy targets, whereas being much more limited under segmented, incoordinated and rigid ones. It is, nevertheless, not impossible to create paths for positive outcomes with the combinations including active and passive LMPs even under the unfavorable environments. Secondly, LMPs can positively influence on labor market outcomes beyond intuitive causality. Income security plays a part in employment promotion and activation does in poverty alleviation. This means it is possible to meet two different policy targets simultaneously with optimal policy packages considering institutional environments.

Keywords : labor market policy, income security, activation policy, workfare,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노동정책연구

2017. 제17권 제3호 pp.155~186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전개와 시사점

박 선 영*

최근 일본에서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추진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2014년 제정·시행되었고,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활동·홍보활동을 통한 과로사 방지 계몽활동, 상담체제 정비,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과로사 등 방지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법 제정이 노동시간 단축이나 근로환경 규제 강화 등 과로사 등을 제거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시간 근로 및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죽음을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으로 기능하기에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표적인 과로사회로 알려진 일본에서 과로사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향성을 내놓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구조적 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노력과 과로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과잉노동·과로사 등에 대한 여론 환기와 국민적 관심 고양, 실태조사,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제정과 대책 마련,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핵심용어 : 과로사, 과로사 등 방지 추진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논문접수일: 2017년 8월 17일, 심사의뢰일: 2017년 8월 28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11일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netysun@cau.ac.kr)

I. 들어가며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자 개인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상윤, 2007: 329)으로 생존과 인격적 가치 측면에서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열악한 노동조건과 업무 내용,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건강을 위협받아 왔으며(김교숙, 2010: 174), 따라서 이전부터 각 국가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저해하는 산업재해 등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 현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근무환경 개선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근무환경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등장하지 못했으며 노동 분야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임준, 2012: 47). 이러한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과중노동과 업무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하는 뇌·심장질환과 정신장해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과로로 인한 죽음, 즉 과로사·과로자살(이하 ‘과로사 등’이라 함)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과로사 등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 평균 실제 노동시간은 2016년 현재 2,069시간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길며(OECD, 2017), 직장인 4명 가운데 3명이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송선미, 2017). 업무상 질병 사망 가운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016년의 경우 전체의 37.1%에 이르며(고용노동부, 2017), 현재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과로로 인한 자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어려우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 가운데 상당수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자살로 추정될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자의 과로사 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과중노동 관행을 규제하고 과로사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체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과로사 등을 예방하는 법제로 작

동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은 과로사 등 예방을 위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로사 등의 사후조치라 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엄격한 재해인정 기준으로 과로사 등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연장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성규, 2017; 정병욱, 2017a). 또한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책무 및 근로자 지원 제도 프로그램 도입·실시 권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는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유정옥(2012)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동안 산재로 인한 문제는 정부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 통계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로복지공단(정부)이나 사업주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로만 계산되어 왔을 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침해 문제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과로사를 막아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과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노동자들이 과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유지된 채 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하 ‘과로사 등 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과로사를 가리키는 일본어(過勞死; *karoshi*)가 그대로 국제용어로 사용될 정도로 일본은 그동안 대표적인 과로사회로 알려져 왔다. 그런 일본에서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과로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과로사 등을 없애기 위한 법 제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국내에서 과로사 등의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전개와 실시상황을 검토해 보고 함의를 도출해 보기 위해서 제Ⅱ장에서는 과로사 관련 선행연구와 법 제정의 원동력이 되었던 일본 국내·외의 논의 등을 간략히 정리해보고, 제Ⅲ장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 과정과 내용,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추진방식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실시상황을 후생노동성의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법과 대책의 함의와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¹⁾

Ⅱ. 과로사 등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

1. 학문적 논의 : 과로사 등의 원인에 대한 논의

일본 내에서는 과로사 등과 관련하여 의학, 법학, 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원인에 관한 논의, 노동재해 피해자의 노재보상 논의, 일본적 경영 시스템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과로사 등을 초래한 원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2000년을 전후로 특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초기 연구들은 사인(死因)으로 뇌·심장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장시간 노동을 과로사 등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배후에 있는 제도적 요인, 특히 일본적 고용관행과 관련한 요인에 주목해 왔다. 당시 많은 연구들은 유독 일본 기업 종업원들에게 과로사 등의 현상이 언급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주목했고, 일본 기업 종업원들의 장시간 노동은 종신고용 관행, 연공 서열제도, 기업별 노동조합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적 고용관행과 관련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

1)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 전개 흐름을 개괄하기 위해 과로사와 과로자살의 공통 요인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기술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공통 발생원인도 있지만 각각 구별되는 특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접근방법에 있어서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구분하여 정확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책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 반영하지 못했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과로사와 과로자살의 발생 현황 및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후속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로 지적하며 기업 중심적인 사회구조와 장시간 노동, 그리고 과로사의 관계성을 지적했다(上畑・田尻編, 1982; 牧野, 1991; 川人, 1992; 1996; 森岡, 1995; 加藤, 1996).

그러던 것이 2000년을 전후로 과로로 인한 죽음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적이며, 따라서 다차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연구들은 여전히 과로사 등의 최대 요인으로 장시간 노동을 언급하면서도 버블경제 붕괴 이후 기업중심체계 강화와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 뿐만 아니라 업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 재량 노동제 확대에 의한 과대 업무량 부과 등에 따른 정신적 부담, 괴롭힘과 하라스먼트 등의 인권침해가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중고령층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연령, 성별, 고용상태와 관계없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범위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ストレス疾患労災研究會・過勞死弁護団全國連絡會議編, 2000; 天竺, 2003; 2007; 大野, 2003; 大石, 2007; 小倉, 2008; 安田, 2008; 熊澤, 2010; 川人, 2012; 岩田, 2013).

이처럼 2000년 이후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의 인간관계상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최대의 요인’으로 간주되었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충분한 예방책이 될 수 없으며, 정신건강 측면, 인권보장 측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연구자들은 엄격한 노동시간 상한 규제정책(鶴・樋口・水町, 2010; 森岡, 2013; 龜坂・田村, 2016) 등의 노동시간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정책, 하라스먼트 예방정책 등(天竺, 2007; 2016; 品田, 2011; 大和田, 2014; 川人, 2014; 小森田, 2016)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실천적 논의 : 과중노동 대책에 관한 국내·외의 개선 요청

일본에서 과로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은 버블경제 절정기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였던 반면, 노동자들이 뇌·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경제성장과 이윤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무관심했던 정부와 기업들 대신 노동자들이 과로로 목숨을 잃는 사건에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변호사·의사 등 관련 전문가였다. 1988년 6월 전국의 변호사·의사 등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립된 ‘과로사 110번’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로사 관련 전화상담 활동을 시작했고, 1988년 10월에는 ‘과로사 변호단 전국 연합회의’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989년 아이치현에서 전국 최초로 ‘나고야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가 결성된 이후 도쿄, 교토, 오사카 등 각지에서 가족 모임이 결성되기 시작했으며 1991년에는 전국조직인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가 결성된다. 이들 민간단체는 전화상담, 심포지엄 개최, 노재인정 소송 등을 통해 과로사 방지의 중요성을 사회에 계속해서 호소해왔으며, 이것은 후술하는 과로사 방지법 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다(厚生労働省, 2016).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과로사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요청이 이루어졌다. 국제인권규약 가운데 하나인 사회권 규약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과로사 및 직장에서의 정신적인 하ラス먼트로 인한 자살 등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과로사·과로자살은 사회권 규약 제7조2)를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龜坂・田村, 2016: 3).

3. 노동행정의 대처 : 법·제도 정비 상황

과로사 등의 방지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약칭 ‘A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하고 1976년 1월 3일 발효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장한 국제조약이다. 일명 사회권 규약에서는 가입국에 인권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사정 등에 비추어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예정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출처: 두산백과, 21세기 정치학대사전, 검색일: 2017.8.1).

사회권 규약 제7조는 다음과 같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7.8.1).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장시간 노동 삭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연간 총 실제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경제계획 목표로 삼아왔으며, 이를 위해 노동기준법에 근거하여 주 40시간 노동제 시행, 시간외 노동에 대한 할증 임금률의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노동시간 등의 설정 개선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력의무,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 및 다양한 근무방식을 고려한 노동시간·휴일·휴가 등을 설정하도록 노사의 자주적인 대처 촉진 시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2002년 2월 후생노동성은 시간외 노동 삭감과 일정 이상의 시간외 노동을 하게 된 경우 건강관리 조치 등을 정리한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06년 4월 개정된 노동안전 위생법에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의 면접지도 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자에게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과중노동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청·장년층 자살자가 급증하자 후생노동성은 종업원들의 건강관리 대책으로 복리후생제도 내에 포함 되어있던 직장 내 정신건강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0년 8월 사업장에서의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전·유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 12월에는 노동자 자살 예방 매뉴얼을, 2004년 10월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던 노동자가 원활히 복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책자 등을 제작·보급했다. 또한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과 같은 파워 하라스먼트(power harassment)³⁾가 사회문제로 표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 3) 파워 하라스먼트(パワー・ハラスメント)란, power와 harassment를 합친 일본조어로 줄여서 파워하라(パワハラ)라고도 한다. 2012년 후생노동성에서 발표된 ‘직장의 파워 하라스먼트의 예방·해결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는 ‘직장의 파워 하라스먼트’에 대해 ‘같은 직장 안에서 일하는 자에 대해 직무상 지위와 인간관계 등의 직장 내 우위성을 배경으로 업무의 적절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

면화되기 시작하자 2011년부터 후생노동성 장관 하에 각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장 따돌림·괴롭힘 문제에 대한 원탁회의’를 개최했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계몽활동, 노사에 대한 대응 지원 등을 실시했다(厚生労働省, 2012; 2016; 龜坂・田村, 2016).

이와 같이 후생노동성에서는 장시간 노동 삭감, 과중노동으로 인한 건강 장애 방지, 직장의 정신보건 대책 지원, 직장 내 괴위 하라스먼트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응책 등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해 왔지만, 과로사 등을 초래하는 과중노동과 업무관련 스트레스,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못했다. 일반 노동자들의 연간 총 실제 노동시간은 2,000시간 전후에 머물러 있는 등 장시간 노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연차유급휴가 취득률은 2000년 이후 절반을 밑도는 추이를 보였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면접지도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장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자의 근무 중 스트레스 위험은 계속 증가했으며, 괴위 하라스먼트 예방 및 해결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기업은 높은 반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에 불과했다(厚生労働省, 2016). 이와 같은 노동행정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관련 법 제정과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Ⅲ.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과 과로사 등 방지대책 마련

1.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 과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과로사 등으로 죽은 노동자의 유족과 그들을 지원하는 변호사 등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과로사 등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과로로 인한 정신

질환, 특히 청년층의 과로자살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과로사 변호단 전국 연합회의, 일본 노동 변호단은 2008년 과로사 등 방지 기본법 제정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는 과로사 방지기본법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2010년 10월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원내 집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에는 과로사 변호단 전국 연합회의와 함께 ‘과로사 방지 기본법 제정 실행 위원회(통칭: ‘스톱! 과로사’ 실행 위원회)’를 결성한다. 이들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실정을 호소하며 여론 형성 활동을 추진했고 55만 건이 넘는 서명을 모아 법 제정 의견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의회에 입법을 위해 호소했다(과로사 방지 기본법 제정 실행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 결과 143개 지방의회에서의 의견서 채택과 국회에서 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이 결성되는 등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2013년 12월 ‘과로사 등 방지 기본법안(6회파 공동)’이 제출되었으나, 결국 2014년 5월 23일 중의원 후생노동 위원회에서 위원장 제출 법률안으로 제출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안’이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중의원 본회의(5월 27일), 참의원 후생 노동위원회(6월 19일), 참의원 본회의(6월 20일)에서 전회일치로 가결되어 6월 27일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공포되었다. 법 제정 이후 후생노동성은 노동기준국 총무과에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실을 설치하고 법 시행을 준비했고, 2014년 11월 1일 법이 시행되기에 이른다.

2. 과로사 등 방지법의 개요

가. 총칙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등, 과로사 등 방지계몽 주간, 연차보고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과로사 등이 다발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로사 등은 노동자 및 유족 또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과로사 등이 없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해 나

가면서 건강하고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그리고 과중노동이 뇌·심장질환과 자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공통 인식하에 일본 법률상 최초로 ‘과로사 등’을 ‘업무의 과중한 부하로 인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이거나 업무에서 강한 심리적 부하로 인한 정신 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이러한 뇌혈관 질환·심장질환·정신장애’로 정의하였다(법 제2조).⁴⁾ 또한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은 첫째,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를 명백히 하고 그 성과를 과로사 등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대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과로사 등 방지의 중요성을 국민이 자각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하며, 둘째,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및 기타 관련 주체의 상호 밀접한 연계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기본이념을 정하고 있다(법 제3조). 뿐만 아니라 국가는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책임을 가지며,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 협력하면서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힘써야 하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협력하며, 국민도 과로사 등 방지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 등 관련 주체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법 제4조). 이 외에도 법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을 촉진하고 관심과 이해를 북돋기 위해 근로감사의 날이 있는 11월을 과로사 등 방지 계몽월간으로 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의 개요 및 정부가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해 강구한 시책 상황에 관한 보고서(이른바 ‘백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법 제6조).⁵⁾

4) 이들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규정한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1의 2의 제8호, 제9호에서 열거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1의 2]

8. 장기간에 걸친 장시간 업무 및 기타 혈관 병변 등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업무로 인한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마비(심장성 돌연사를 포함) 또는 해리성 대동맥류 또는 이러한 질병에 부수하는 질병
9.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 발생 및 기타 심리적으로 과로한 부담을 주는 현상을 수반하는 업무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또는 이에 부수하는 질병

5) 후생노동성은 2016년 10월 7일 과로사 등의 개요와 정부가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해 강

나.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대강

제2장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대강(이하 ‘대강’이라 함)에서는 정부는 대강을 정해야만 하며, 후생노동성 장관은 대강의 안을 작성하여 각의의 결정을 요청해야만 하고, 대강의 변경안을 작성 시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강이 정해지면 정부는 지체없이 국회보고와 인터넷 및 기타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공표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다.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

제3장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서는 첫째, 국가는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며, 과로사 등이 발생하는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만 하며(제8조 조사연구 등), 둘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등을 통해 국민들이 과로사 등 방지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계몽시책을 강구해야 하고(제9조 계몽), 셋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과로사 등에 관한 상담기회 확보, 산업의 및 기타 상담관련 전문가에 대한 연수기회 확보 등 과로사 등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조기 대응과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실시를 위한 체제 정비 및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제10조 상담체제 정비 등), 넷째,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과로사 등의 방지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제11조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고 정하고 있다.

라.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협의회

제4장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협의회에서는 대강을 정할 시 의견을 청취하는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협의회를 후생노동성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위원 20명 이내로 조직하며, 위원은 당사자 등을 대표하는 자(피해자 및 유족),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전문가 가운데 후생노동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제12조, 제13조).

구한 시책 상황을 정리한 「과로사 등 방지 대책 백서」를 발표하였다.

마.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입각한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결과를 기초로 필요할 경우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제·재정상의 조치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있다(제14조). 또한, 법 부칙 제2항에서는 법률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법률의 시행상황 등을 고려하고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과로사 등 방지법 개요

구분	내용
총칙	○ 목적: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과로사 등이 없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해 나가면서 건강하고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함
	○ ‘과로사 등’ 정의: 업무에서의 과중한 부하에 의한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업무에서 강한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 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이러한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 또는 정신장애
	○ 기본이념: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은, ①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과로사 등에 관한 실태를 명백하게 하고, 그 성과를 과로사 등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대처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과로사 등 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이 자각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만 함. ②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및 기타 관련자의 상호 밀접한 연계 하에서 실시되어야 함
	○ 국가의 책무 등: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국민의 책무를 규정
	○ 과로사 등 방지 계몽월간: 과로사 등 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 촉진과 관심 고양, 이해를 돕기 위해 11월을 과로사 등 방지 계몽월간으로 정함
	○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과로사 등의 개요와 정부의 과로사 방지 시책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는 것을 규정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대강	○ 정부는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대강을 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규정

〈표 1〉의 계속

구분	내용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	① 조사연구(*) ② 계몽 ③ 상담체제 정비 등 ④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 * 국가는 과로사 등이 발생하는 배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가지고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실시함. 예컨대, 업무의 과중한 부하 또는 강한 심리적 부하와 관련한 사망 또는 상병에 대해 개인 사업주와 법인의 임원 등에 관한 것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연구의 대상으로 규정함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협의회	○ 후생노동성에 대강을 정할 시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사자 등, 노동자 대표자, 사용자 대표자 및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협의회를 설치
조사연구 등에 입각한 법제상 조치 등	○ 정부는 과로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결과를 기초로 필요가 인정된 경우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및 기타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을 규정

3.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추진방식과 목적

대강은 전 부처가 내각회의에서 합의해 만든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말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과로사 등 방지법을 근거로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강을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강에서는 과로사 등은 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발생요인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태해명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가 시급하며, 긴급과제인 과로사 등 방지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몽, 상담체제 정비, 민간단체 활동 지원 대책을 함께 실시하면서 조사연구 성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대책에 반영하여 현 대책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면 대책의 기본 추진방식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의 목적으로 향후 과로사 등을 완전히 제거(zero)하고, 2020년까지 주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시간 노동자 비율을 6% 이

하로 줄이며, 유급휴가 취득률을 70% 이상으로 올리며, 2017년까지 80% 이상의 사업장이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3년을 목표로 전 지역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계몽활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체·정신적 질병을 가진 노동자 누구나 본인이 원할 때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체제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厚生労働省, 2015).

이처럼 대강에서는 실태해명을 위한 조속한 조사연구의 필요성과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연구 등, 계몽, 상담체제 정비 등,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의 4가지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3년 동안의 달성목표와 시책을 정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후생노동성의 시책을 중심으로 현재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의 실시 상황을 정리해 본다.

IV.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실시 상황⁶⁾

1. 조사연구 등

후생노동성에서는 현재 과로사등 사안의 분석, 역학연구, 노동·사회분야의 조사·분석 등의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과로사등조사연구센터에서는 노재질병 임상연구(2015~2017년도)로 노재인정 사안을 수집(2010년 1월~2015년 3월)하여 과로사 등 사안을 분석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뇌·심장질환의 노재인정 사안이 가장 많은 운송업을 대상으로 시범분석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중점 5업종 가운데 운송업과 음식업을, 2017년도에는 나머지 3업종(교직원, IT산업, 의료) 관련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과로사등조사연구센터에서는 장기연구 과제로 과로사 등의 리스크 요인과 각종 질환·건강 영향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직역 코호트 연구, 직장환경 개선대책, 실험연구 등의 역학연구

6) 과로사 등 방지대책 실시 상황은 후생노동성이 발간한 백서와 과로사 등 방지대책 협의회 의 참고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각 연구별로 조사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했으며, 2016년도에는 조사집단 선정, 2017년도부터는 실험실시와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후생노동성은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기업·노동자를 대상으로 과로사 등의 배경요인 및 건강한 직장환경 형성 요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법인 임원과 자영업자 대상의 우편 설문조사와 자동차 운전중 사자와 외식산업 등 중점 업종에 대한 기업·노동자 대상 우편 설문조사 등이 실시되었고, 2017년도에는 교직원, IT산업, 의료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2. 계몽

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민 대상 계몽활동 실시

포스터, 팸플릿,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행정기관 및 관계 단체, 전국 주요 역 등에 게시·배포하였으며, 신문 광고와 웹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계몽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1월을 ‘과로사 등 방גיע몽월간’으로 정하고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집중적인 계몽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6월부터 ‘안전위생 우량 기업공표 제도’를 통해 과중노동대책 및 정신보건 대책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많은 기업에 노동안전위생의 대처를 촉진하고 있다. 2017년 4월 현재 31개 기업이 안전위생 우량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계몽 실시

노동조건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 노동국 등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중·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세미나와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중·고등학교에 156건의 강사파견이 이루어졌으며, 대학 등에서는 696회(469학교, 약 49,000명 참여)의 강의를 이루어졌다.

그리고 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및 과로사 등의 유족을 강사로 중·고등학교에 파견하여 학생들이 과로사 등의 노동문제와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계몽활동을 실시했는데, 2016년도에는 59개 학교(87회 강의, 약

6,450명)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고등학교 등에서의 노동법 교육을 위한 지도자용 자료를 작성하여 2016년도에는 전국 5,500개의 고등학교에 배포하였으며, 대학에서의 노동법 교육을 위한 지도자용 자료도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다. 장시간 노동 삭감을 위한 주지·계몽

장시간 노동 삭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했다. 2014년 9월 장시간 노동삭감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2015년부터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이루어진 모든 사업장과 과로사 등을 발생시킨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15년 1월~2016년 3월까지 중점감독을 실시한 10,185개 사업장 가운데 7,798개 사업장(76.6%)에서 시정지도가 이루어졌으며, 위법한 시간외 노동으로 시정지도를 받은 사업장은 56.7%(5,775개)를 차지했다. 2016년 4월부터는 월 초과근무 100시간 이상에서 80시간 이상으로 감독대상을 확대했는데, 2016년도 상반기에 중점 감독을 실시한 10,059개 사업장 가운데 6,659개 사업장(66.2%)에서 시정지도가 이루어졌으며 위법한 시간외 노동 사업장은 43.9%(4,415개)에 달했다.

둘째, 과중노동해소 캠페인으로 과로사 등을 발생시킨 사업장 등에 대해 중점감독을 실시했다. 2016년 11월 과중노동해소 캠페인 기간 중에는 7,0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감독을 실시했으며 4,711개(67.2%) 사업장에서 시정지도가 이루어졌다.

셋째, 지도감독·조사체제를 강화했다. 2015년 4월부터 과중노동 사안에 대한 특별팀 ‘과중노동 박멸 특별 대책반’을 도쿄 노동국·오사카 노동국에 설치하였고, 2016년 4월부터는 후생노동성에 ‘과중노동 박멸 특별 대책반’을 신설하고 지도감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관을 임명했다. 2017년 4월부터는 후생노동성에 ‘과중노동 특별 대책실’을 신설하고 ‘과중노동 박멸 특별 대책반’을 재편했다.

넷째, 2017년 1월부터 위법한 장시간 노동 등을 사업장 2곳 이상에서 실시하는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 전체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했다.

다섯째, 기업명 공표제도를 신설·강화했다. 2015년 5월부터 사회적으로 영

향력이 큰 기업이 여러 사업장에서 ‘위법한 장시간 노동(월 초과근무 100시간 이상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명을 공표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는 과로사 등 사안을 추가하고 ‘위법한 장시간 노동’을 초과근무 100시간 이상에서 80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요건을 확대하였다.

여섯째, 정보의 제공·수집 체제를 강화했다. 2014년 9월부터 평일 야간·주말에 노동조건에 관한 전화상담 창구 ‘노동조건 상담 핫라인’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4월부터는 ‘노동조건 상담 핫라인’을 주 6일에서 주 7일 운영으로 변경하고 회선 수를 늘렸다. 그리고 2015년 7월부터 인터넷 상의 구인 정보 등을 감시·수집하여 노동기준 감독처의 지도감독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666건 가운데 370건에 대해 지도감독을 통보했다.

일곱째, 2016년 6월부터 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제도를 확충하여 장시간 노동을 배경으로 하는 등 모(母) 기업의 하청법 등의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라.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주지·계몽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주지·계몽 활동으로는 사업주와 노동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주적인 과중노동 방지대책 추진 세미나를 실시했다. 2015년도에는 전국 26개소(총 35회)에서 개최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전 지역에서 1회 이상 개최되었다(도쿄 9회, 오사카·아이치현 4회 등, 총 71회). 그리고 2014년 11월부터는 후생노동성 웹사이트에 노동조건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노동자와 사업주 등에게 노동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기초지식과 노동조건 관련 상담창구 등의 정보 등을 발신하고 있는데,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접속건수는 약 27.1만 건에 달했다.

마. ‘근무방식’ 개혁·연차유급휴가 취득촉진 등 기업의 자주적 노력 장려

후생노동성은 지방 노동국과 연계하여 기업의 자주적인 근무방식 검토 추진, 지역에서의 근무방식 개혁 분위기 조성, 지방 노동국과 지방 공공단체의 연계 등의 대치를 실시하며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호소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과 지방 노동국 간부들은 업계 및 지역 선도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의 리더들에게 ‘근무방식’ 재고를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등 기업에 ‘근무방식’ 개혁을 장려했다. 참고로 2017년 3월 말까지 후생노동성은 업계 선도 기업 71곳, 지방 노동국들은 지역 선도기업 약 1,600곳을 방문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개설한 포털사이트(<http://work-holiday.mhlw.go.jp/>)를 활용하여 선진 기업 사례, 기업의 근무방식·휴가방식 자가진단 지표, 근무방식·휴가방식 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처 사례 등의 정보를 발신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근무방식 개혁에 대한 대처를 호소했다. 또한 근무방식·휴가방식 개혁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2015년(10~12월) 전국 5개 도시(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근무방식·휴가방식 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10월을 ‘연차유급휴가 취득촉진 기간’으로 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2015년도에는 각 지역과 219개의 노사단체에 주지를 의뢰했고, 전용 웹사이트 개설, 인터넷 광고 및 940개소의 역에 포스터 부착, 후생노동성의 매거진과 월간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동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휴가취득을 촉진했다. 지방도시에 노사, 지방자치체, NPO 등이 협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의 이벤트에 맞추어 계획적인 연차유급휴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업·주민 등에 홍보하고 지역의 휴가취득 촉진 분위기를 조성했다. 2015년도에는 5개 지역(시즈오카, 쿠마모토, 에히메, 사이타마, 야마가타현)에서 포스터, 리플렛과 지방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홍보, 심포지엄 개최, 노무관리 전문가의 지역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휴가취득을 촉진했다.

바. 정신건강관리(mental health care)에 관한 계몽 실시

정부는 2017년까지 정신건강관리 대책 실시 사업장 비율을 8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직장에 대한 대처를 지원·강화하고 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트레스 체크 제도⁷⁾가 적절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7) 2014년 개정된 노동안전위생법에서는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상시 노동자에 대해 1년에 1회 의사·보건사 등에게 심리적인 부담 정보를 파악하는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다(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력의무). 스트레스 체크 제도는 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맞게 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신건강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무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산업보건 스태프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스트레스 체크 제도를 주지시키고 계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소규모 사업장이 스트레스 체크와 의사의 면접지도를 공동 실시할 경우 비용을 보조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대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체크 실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후생노동성 웹사이트에 무료로 배포했으며 기업과 노동자 대상의 전화상담 창구와 노동자의 정신건강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메일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 직장의 파워 하라스먼트의 예방·해결을 위한 계몽 실시

직장의 파워 하라스먼트의 예방·해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생노동성에서는 국민과 노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주지·계몽활동을 실시했다. 먼저 2012년도에 구축한 포털 사이트(<http://www.no-pawahara.mhlw.go.jp/>) 운영을 통해 파워 하라스먼트의 정의에 대한 해설과 관련 판례·기업 대처 소개, 직장 파워하라에 관한 사내 연수용 자료 등 노동자, 기업과 인사노무 담당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발신하고 있으며, 접속건수(방문자 수)는 2015년 98.2만 건, 2016년도는 약 127.7만 건에 달했다. 또한 포스터·리플릿 등을 작성하여 전국 행정기관 등에 게시·배포하였고, 잡지 등에도 광고를 게재했다.

그리고 직장의 파워 하라스먼트 예방·해결을 위한 노사의 구체적인 대처를 촉진했다. 후생노동성은 2015년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파워 하라스먼트 대책 도입 매뉴얼을 제작·개정(2016년 7월 제2판 공표)했는데,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파워 하라스먼트 대책의 도입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전국에서 2015년도에는 63회, 2016년도에는 61회 실시했다. 이 외에도 포털사이트에 온라인 연수강좌를 개설하여 누구나 손쉽게 파워 하라스먼트에 관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파워 하라스먼트 대책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기업의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아. 상거래 관행 등을 고려한 대처 추진

개별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강구한다고 해도 발주자의 발주 등 거래 상황에 따라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 다양한 상거래 관행이 존재하므로 장시간 노동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종·업태의 특성에 맞게 발주 조건과 내용 등의 적정화를 촉진하는 등 거래 관계자에 대한 계몽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시간 노동 실태가 심각하여 개선이 시급한 트럭 운송업과 정보통신업, 의료업에 초점을 맞추어 상거래 관행 등 업계환경 등을 반영한 대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트럭 운전자 노동조건 개선 사업’으로 하주 기업, 원청 운송사업자 및 원청운송사업자의 하청운송사업자(1차, 2차 하청 등 포함)를 포함한 협의회를 설치하고, 어드바이저의 개별지도 등을 통해 하주기업과 트럭 운송사업자가 협력하여 트럭운전자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나가는 대처가 이루어졌다. 2015년도에는 트럭 운전자 노동조건 개선 사업으로 어드바이저의 개별지도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모범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하주기업과 트럭 운송사업 양자협력을 통해 트럭 운전자의 노동조건 개선책을 주지·계몽해 나갔다. 그리고 거래환경 개선 및 장시간 노동 억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정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 하주·트럭 운송사업자, 경제단체, 노동자단체, 관계행정(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으로 구성된 ‘트럭 운송에서의 거래 환경·노동시간 개선 협의회’(중앙, 5월 개최)와 ‘지역 협의회’(전국 도도부현, 7월 이후 개최)를 설치, 회의를 개최(각각 3회)했다. 또한, 트럭운전자의 장시간 노동의 요인 등을 명백히 하고 향후 대책 검토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 9월 전국 5,000명 이상의 트럭 운전자와 소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 실태와 과제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일럿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상담체제 정비

가. 노동조건과 건강관리에 관한 상담창구 설치

조기상담을 통해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노동조건과 건강관리에 관한 다양한 상담창구를 설치·정비하였다. 2014년 9월 ‘노동조건 상담 핫라인’을 설치하여 평일야간과 주말에 노동자들의 전화상담을 무료로 접수하고 있다. 상담건수는 2014년도(2014년 9월 1일~2015년 3월 31일) 11,378건,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29,124건, 2016년도에는 30,929건에 달하였으며, 장시간 노동·과중노동, 해고·고용계약 해지, 임금 미지불 잔업, 휴일·휴가와 관련한 상담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노동자의 정신건강 포털사이트(<http://kokoro.mhlw.go.jp>)에 정신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문제,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애에 관한 상담창구를 설치했는데, 2015년도에는 접속건수가 약 480만 건, 2016년도에는 약 370만 건에 이르렀다. 2014년도부터 메일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노동자 등의 상담에 대해 산업 카운슬러 등의 전문가가 대응하고 있는데, 2015년도는 상담건수가 약 6,500건, 2016년도에는 약 7,000건이었다. 그리고 2015년 9월부터 노동자와 그 가족,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의 상담건수는 약 5,900건이었다. 이 외에도 기업이 실시하는 산업보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보건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산업보건센터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전문상담은 2015년도에는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에서 약 37,000건, 지역산업보건센터에서 약 56,000건이 이루어졌다.

나. 노동자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인재에 대한 연수 실시

산업의 등 상담에 대응하는 산업보건 스태프와 노동위생·인사노무 관계자 등의 실무자 등 직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인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대책과 과중노동으로 인한 건강장애 방지대책 등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산업보건 스태프를 대상으로 한 연

수가 총 9,400건 이루어졌다.

4.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협력·연계하고 국민적인 운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활동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활동내용 등의 주지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전국센터,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회, 과로사 변호단 전국 연합회의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법률 시행 첫해인 2014년도 제1회 계발월간에는 한 곳에서만 국가 주체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나머지 29개 지역에서 과로사 방지에 대처하는 민간단체의 자주적인 개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년째인 2015년도에는 국가 예산이 배정되어 29개 지역(참가자 수 3,075명)에서 국가주최의 ‘과로사등 방지대책 추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10개의 지역에서 민간단체 주최의 심포지엄과 모임이 이루어졌다. 2016년에는 42개 지역에서 국가주최로 심포지엄(43회 개최, 도쿄에서는 2회 개최)이 이루어졌다.

둘째, 심포지엄 이외에도 민간단체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연구회,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맞게 지방 노동국 등이 후원·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에는 과로사 유아(遺兒) 교류회를 개최하여 과로사로 부모를 잃은 아동 등을 초청하여 이벤트 및 상담 등을 실시했다.

셋째, 지방 공공단체, 노사, 국민 등이 민간단체의 상담창구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명칭과 활동내용 등을 과로사 등의 방지계몽을 위한 팸플릿 등에 게재하여 알리고 있다. 현재 팸플릿에는 행정기관의 상담창구와 함께 ‘과로사의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의 상담창구’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전국센터’, ‘전국 과로사를 생각하는 가족 모임’ 및 ‘과로사 변호단 전국 연합회의’ 등의 민간단체 창구가 기재되어 있다.

〈표 2〉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후생노동성)

(단위: 억 엔)

과로사 등 방지대책		연도별 예산액		
		2015	2016	2017
조사 연구 등	- 과로사 등 사안 분석, 역학연구 등, 과로사 등의 노동·사회분야의 조사·분석	1.1	2.8	3.5
계몽	-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지·계몽활동 - 교육기관 대상의 노동조건 주지·계몽활동 - 장시간 노동 삭감을 위한 주지·계몽 - 과중노동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주지·계몽 - ‘근무방식’ 개혁·연차 유급휴가 취득 촉진 등 기업의 자주적인 대처 장려 - 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주지·계몽 - 직장의 파워 하라스먼트의 예방·해결을 위한 주지·계몽 - 상거래 관행 등을 고려한 대처 추진	21.3	30.3	39.2
상담체제 정비 등	- 노동조건·건강관리 관련 상담창구 설치 - 산업보건 인재에 대한 연수 실시	32.3	40.1	40.6
민간단체지원	-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심포지엄 개최 - 심포지엄 이외의 활동에 대한 지원	0.5	1.1	1.4
합계		55.2	74.3	84.6

주: 연도별 예산액은 전 부처의 대책을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예산액은 반올림한 것으로 합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자료: 2017년 4월 27일 개최된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협의회 자료를 참고로 필자 작성.

V.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함의와 시사점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을 통한 과로사 방지에 대한 이념체계 마련과 대강 책정을 통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된 것은 대표적인 과로사회인 일본에서 과로사 등을 없애기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법과 대책 전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법 제정과 대강 책정을 통해 국가가 과로사 방지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과로사 방지에 대한 국가의 이념적·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岩城, 2016). 1990년대 중반까지 과로사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川人, 2014) 일본 정부는 과로로 인한 죽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비롯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과로사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법 조항에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과로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법적 정의로서 역사적으로도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질병이나 정신장애, 자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과로사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과로로 인한 노동재해의 다양한 유형과 원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법에는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해 나가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 친화적인 근무방식을 마련해 나가려는 국가의 지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과로사 문제를 인권 차원의 문제로 보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초점을 맞춘 노동 친화적인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기업 친화적이었던 일본에서 나타난 커다란 이념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노동행정과 민간단체의 공동협력을 강조하는 등 과로사 방지에 대한 관·민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정병욱, 2017b: 298). 대강에는 과로사 유족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운동이 계기가 되어 과로사 등 방지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민간단체의 과로사 방지 운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재평가하여 관·민 공동으로 과로사에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 자세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로사 방지 계몽 심포지엄 개최와 과로사 방지센터 설립 등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결성은 관·민 공동협력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심포지엄은 2014년 11월 14일 국가 주체로 개최된 이후 2015년 5월까지 전국 30개 지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2015년 11월 계몽월간에는 29개 지역, 그리고 2016년 11월 계몽월간에는 43개 지역에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심포지엄 홈페이지 참조). 그

리고 2014년 10월 29일 과로사 방지 전국센터가 설립된 이후 호고, 오사카, 교토 등 지역 센터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로사 방지 센터는 지역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과로사 방지 계몽 및 강사과건 등을 통한 교육, 상담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15년에는 과로사 유족,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변호사, 활동가, 언론인, 기타 개인 등이 모여 과로사 방지 학회를 결성하고, 민간영역에서의 조사 연구와 성과를 바탕으로 과로사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과로사 방지 학회 홈페이지 참고). 이와 같은 관·민 공동 대처는 과로사 방지 운동을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하여 ‘과로사 없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후생노동성에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정병욱, 2017b; 岩城, 2016). 2014년 12월 전문가 위원 8명, 당사자 대표 위원 4명, 노동자 대표 위원 4명, 사용자 대표 위원 4명 총 20명이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2017년 4월까지 총 8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厚生労働省, 2017). 岩城(2016)는 협의회를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과로사 방지대책을 담보해 나가는 구조를 형성한 것은 실효성 있는 과로사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유족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사자의 의견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과로사 방지대책이 단순한 과로사 방지 및 예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근무방식 개혁을 위한 정부의 대처, 나아가 거시적인 사회변화의 의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과로사 등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장시간 노동 감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근무방식’ 개혁을 기업에 요청하고, 장시간 노동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과로사 제로(zero)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를 추진해 나갈 방침을 제시했다. 후생노동성은 2014년 후생노동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장시간 노동 삭감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과중노동 해소 캠페인을 통해 장시간 노동 삭감을 위한 중점 감독을 철저히 했으며, 2015년 1월에는 각 지역 노동국에 ‘근무방식

개혁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장시간 노동 억제와 연차 유급휴가 취득 촉진 등의 '근무방식 개혁'에 대한 노사단체의 협력요청과 관련 정보 등을 제공했다(후생노동성 장시간 노동 삭감 추진본부 홈페이지 참조). 2016년 4월에는 '장시간 노동 시정을 위한 법 규제 집행 강화' 등 장시간 노동 대책을 강화하고, 8월에는 '근무방식 개혁' 담당 장관직을 신설, 9월에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근무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발족하여 근무단축·유연근무제 등의 근무방식을 확산 시키기 위해 근무방식 개혁을 추진했으며, 12월 말에는 '과로사 등 제로' 긴급대책을 공표하고 장시간 노동의 시정, 정신건강·파워 하라스먼트 방지대책, 사회 전체가 과로사 등이 없는 사회를 목표로 노력해 나갈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장시간 노동 시정과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을 내세웠다. 이처럼 과로사 등 방지대책은 근무방식 개혁 논의와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포괄적인 지원방식을 계속해서 내놓으며 근로방식 및 환경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으며, 근무 중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한편, 노재보험제도에서의 노재인정 건수는 과로사 등의 병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川人, 2016)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리고 과로사 등 방지법에는 가장 직접적인 과로사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간 상한 규제 등 '과로'를 단속·감독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정병욱, 2017a; 2017b). 현재 일본에서는 노사 합의하에 노동시간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노동시간 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한 협정(통칭 '36협정')이 존재하는 등 노동시간 규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종업시각에서 다음 시업시간까지의 간격(interval) 시간을 일정정도 확보하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2.2%(厚生労働省, 2016)에 불과한 등 장시간 노동 감축을 위한 기업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정신적인 긴장·스트레스 지속,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등으로 과로사 등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의 종합노동상담코너에서 민사상의 개별 노동분쟁에 관한 상담 접수건수 중 직장에서

의 ‘따돌림·괴롭힘’에 관한 상담접수(2015년 현재 22.4%)가 ‘해고’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시간 노동이나 업무 내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성희롱 및 과위 하라스먼트 등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 등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상담기관의 체계적인 정비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과로와 과로사 등을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외부 상담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국민 공동협력을 통한 대처가 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을 내세우고 계몽 등 과로사 등 방지대책에 많은 예산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로사 등 방지법과 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노동자는 각각 38.1%, 17.8%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이름만 알고 있거나(각각 42.1%, 51.2%)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각각 17.6%, 31.1%)(厚生労働省, 2016). 이러한 결과는 기업 측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계몽·교육활동의 필요성을 요청한다.

과로사 등 방지법은 일본 사회 구성원들에게 과제를 던지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과로사 등 관련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과로사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해 나간다고 하는 구조들은 마련되었으나 과로실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조사연구의 조사내용은 일본에 만연하고 있는 ‘과중노동’을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조사내용이 미흡할 경우 법률의 의의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으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실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성패는 국가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앞으로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과로사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과 입법 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법원은 근로자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 등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자살’이라는 판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조항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간단체들은 과로사 방지법 마련과 과로사 방지를 실현화하기 위한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는 작업으로

‘과로사 예방센터’ 설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유성규, 2017; 정병욱, 2017b),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및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외 34인 공동발의)이 발의되었다.

향후 과로사 방지법을 도입·시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과로사 방지법을 대하는 시각일 것이다. 일본 사례를 통해 법 제정은 최종 목표(goal)가 아닌 좀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과로사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강구해 나가고 국가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로사 등 방지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과로를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요한 업무상 재해로 인식하고, 과로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연계하여 과로 및 과로사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과중노동과 업무 스트레스 등을 초래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과로사 등 예방과 방지에 대한 여론 환기와 국민적 관심, 명확한 실태조사, 그리고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법 제정과 대책마련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법 제정 및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과로사 방지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기계화·자동화 등으로 노동의 기회가 줄어드는 가운데, 사회구성원들은 소득을 획득하고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유·생활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일하고 있다. 노동에 얽매이는 사회는 과중노동·업무 스트레스를 조장하고 과로사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노동에 얽매이는 사회를 탈피하는 것, 즉 개인의 삶이 노동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고 노동과 생활의 조화로운 영위를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해가는 것이야말로 과중노동·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과로사 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닐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7).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유정옥(2012).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사회」. 『황해문화』 77 : 26~45.
- 김교숙(2010). 「근로자의 건강권」. 『노동법 논총』 19 : 171~197.
- 송선미(2017). 『스트레스 관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유성규(2017). 「과로사 예방 센터의 임무와 역할」. 『2017 노동자 건강권 포럼』. pp.303~310.
- 이상윤(2007). 「과로로 인한 자살의 헌법적 문제: 일본의 경우를 소재로 하여」. 『공법학연구』 8 (4) : 329~354.
- 임준(2012). 「안에서 밖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노동자 건강권」. 『월간 복지동향』 161 : 47~50.
- 정병욱(2017a). 「과로사방지법을 제정하라」. 『한겨레 21』. p.1151.
- _____(2017b). 「일본의 과로사방지센터 활동 소개 및 한국의 과로사센터 임무와 역할: 일본 과로사방지법의 소개와 한국의 과로사 예방센터 논의 소개」. 『2017 노동자 건강권 포럼』. pp.207~301.
- ストレス疾患労災研究會・過労死弁護団全國連絡會議編(2000). 『激増する過労自殺:彼らはなぜ死んだか』 皓星社.
- 加藤哲郎(1996). 『現代日本のリズムとストレス』 花伝社.
- 龜坂安紀子・田村輝之(2016). 「労働時間と過労死不安」.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325 : 1~38.
- 大石雅也(2007). 「日本企業におけるメンタルヘルス問題と日本的雇用慣行:過労自殺裁判を通して」. 『經濟論究』 126・127 : 17~33.
- 大野正和(2003). 『過労死・過労自殺の心理と職場』 青弓社.
- 大和田敢太(2014). 『職場のいじめと法規制』 日本評論社.
- 牧野富夫(1991). 『「日本的勞使關係」と過労死』 學習の友社.

- 森岡孝二(1995). 『企業中心社會の時間構造:生活摩擦の經濟學』 青木書店.
- _____(2013). 『過勞死は何を告發しているか:現代日本の企業と労働』 岩波現代文庫.
- 上畑鐵之丞・田尻俊一郎編(1982). 『過勞死:腦・心臓系疾病の業務上認定と予防』 労働經濟社.
- 小森田龍生(2016). 「過勞自殺を過勞死から分ける條件:判例を用いた質的比較分析 (QCA) の試み」. 『理論と方法』 31 (2) : 211~225.
- 小倉一哉(2008). 「日本の長時間労働:國際比較と研究課題」. 『日本労働研究雑誌』 575:4-16.
- 安田宏樹(2008). 「職場環境の変化とストレス:仕事における希望」. 『社會科學研究』 59 (2) : 121~147.
- 岩城穰(2016). 「過勞死防止法と大綱の意義と課題」. 『過勞死防止學會 第2回大會報告集』.
- 岩田一哲(2013). 「過勞自殺のプロセスに關する分析枠組みの提示:ストレス研究との關係から」. 『人文社會論叢(社會科學篇)』 30 : 1~27.
- 熊澤誠(2010). 『働きすぎに弊れて:過勞死・過勞自殺の語る労働史』 岩波書店.
- 天笠崇(2003). 「過勞自殺の實態と疫學研究をもとに」. 『産業ストレス研究』 10 (4) : 257~264.
- _____(2007). 『成果主義とメンタルヘルス』 新日本出版社.
- _____(2016). 「精神醫學から見た日本の過勞自殺對策と過勞死防止法」. 『過勞死防止學會 第2回大會報告集』.
- 川人博(1992). 『過勞死社會と日本: 変革へのメッセージ』 花伝社.
- _____(1996). 『過勞死と企業の責任』 社會思想社.
- _____(2012). 「過勞死・過勞自殺の現状分析と政策的對應」. 『社會政策』 4 (2) : 19~27.
- _____(2014). 『過勞自殺 第二版』 岩波書店.
- 品田充儀(2011). 「『職場のいじめ』の定義と被害者救済:北米における労働安全衛生法と救済立法からの示唆」. 『季刊労働法』 233 : 90~103.
- 鶴光太郎・樋口美雄・水町勇一郎編(2010). 『労働時間改革:日本の働き方をいかに変えるか』 日本評論社.
- 厚生労働省(2012). 「職場のパワーハラスメントの予防・解決に向けた提言」.
- _____(2015). 『過勞死等の防止のための對策に關する大綱:過勞死をゼロにし、健康で充實して働き続けることのできる社會へ』.

_____(2016). 『平成28年版過勞死等防止對策白書』.

_____(2017). 「第8回過勞死等防止對策推進協議會配布資料」.

過勞死等防止對策推進協議會(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협의회),

<http://www.mhlw.go.jp/stf/shingi/0000061675.html?tid=224293>

過勞死防止基本法制定實行委員會(과로사 방지 기본법 제정 실행 위원회),

<http://stopkaroshi.sitemix.jp/index.html>.

過勞死防止學會(과로사 방지 학회), <http://www.jskr.net>

過勞死等防止對策推進シンポジウム(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 심포지엄),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068588.html>

長時間労働削減推進本部(장시간 노동 삭감 추진 본부),

<http://www.mhlw.go.jp/stf/shingi/other-roudou.html?tid=220266>

OECD(2017). *Employment outlook 2017*.

Overview and Implication on Japan's Measures to Prevent Overwork Death

Park Sunyoung

To direct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overwork death prevention methods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verwork Death Prevention Measures Promo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in 2014.

Although this enactment does not affect directly on reducing the work hours or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it still holds significance in the way that it provides the ways to handle overwork death on a national basis and the structure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D.

Korea still lacks the discussion on overwork death prevention methods, but the change of public opinion, the increase of the public interest, the proposal of the prevention methods, and the enactment of overwork death prevention law would be required for the workers to obtain the humane rights of the labor.

Keywords : overwork death (Karoshi), the enactment of overwork death prevention measures promotion act, right to work healthily

『노동정책연구』 원고작성 및 투고 요령

1. 원고투고 요령

- 1) 『노동정책연구』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께서는 350자 이내의 국문초록,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초록, 5개 이하의 핵심용어를 포함하여 25페이지(논문양식 참조) 이내로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마감일까지 논문을 아래의 ‘원고작성 요령’에서 제시하는 체제로 통일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시 투고신청서와 원고(한글파일)를 함께 제출한다. 논문투고 및 투고신청서 다운로드 [본원 홈페이지(www.kil.re.kr)-참여광장-노동정책연구 원고모집]에서 가능하다.
- 2) 『노동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에 대한 논평(comment)과 답변(reply)도 아래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제출한다.
- 3) 학술지 발간 횟수 및 발간일
학술지의 발간 횟수는 연 4회로 하며,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원고투고 시기
학술지의 원고는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접수는 항시 한다.
- 5) 제출된 논문은 『노동정책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6) 제출 :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본원 홈페이지(www.kil.re.kr)-참여광장-노동정책연구 원고모집-논문투고]

2. 원고작성 요령

- 1) 국문 논문은 국한문을 혼용한다.
- 2) 편집순은 章은 I, II, III, 節은 1, 2, 3, 項은 가, 나, 다 순으로 표기하고, 그 이하는 1), 2), 3)으로 표기한다.
- 3) 인용 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는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5) 표와 그림의 경우는 장, 절, 항 구분 없이 <표 1>, [그림 1]과 같이 표기하며 세분화하지 않는다.
- 6) 논문 첫머리의 저자 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연구자(제1저자)를 먼저 표기해야 하며, 책임연구자·공동연구자의 소속과 지위 및 e-mail 주소가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7) 논문 양식 (아래호글)

편집 용지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용지종류	A4	글자 크기	10.8	정렬방식	혼합
위쪽여백	49	글꼴	신명조	들여쓰기	10
아래쪽여백	49	장평	100	줄간격	170
왼쪽여백	44	자간	-10		
오른쪽여백	44				
머리말	9.5				
꼬리말	0				

*표는 「선그리기」가 아닌 필히 「표편집」으로 작성
(글자 크기: 10, 줄간격: 135)

8) 영어 논문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준한다.

9) 이상의 원고작성 요령과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

3. 참고문헌 작성 요령

- 1) 참고문헌 중 국문 및 동양문헌의 경우,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꺾쇠(「 」)로 표기하고, 저서 및 역서(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이중꺾쇠(『 』)로 표기한다. 영문의 경우, 논문명은 큰따옴표(“ ”)로 표기하고, 책명이나 저널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2) 저자명에 있어 국문은 가나다순, 영문은 알파벳순으로 배치하고, 동일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되,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a, b, c로 구분한다.
- 3) 국문 및 동양 문헌
정기간행물: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 권(집)호: 페이지 순으로 표기
단행본: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 발행처. 페이지 순으로 표기
- 4) 영문 문헌
정기간행물: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이탤릭체*) volume(number): 페이지 순으로 표기
단행본: 필자(발행연도). “논문명”. 서명(*이탤릭체*). 발행처. 페이지 순으로 표기
- 5) 신문기사는 신문명, 기사명, 발행연월일,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 6) 아래 예의 각 경우를 참고하여, 순서, period, comma, colon 등의 기호, space, 대소문자 등에 유의한다.

7) 예

금재호·조준모(2001).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4 (1): 35~66.

이철수(1994). 「블루라운드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방안」. 『노동법학』 4: 199~222.

차철수(1998). 『노동시장의 변천사』. 박영사. pp.25~36.

유범상(2006). 「사회적 합의」. 이원덕 편. 『한국의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pp.124~149.

Bernhardt, A., Morris, M. Handcock, M. S. and M. A. Scott(1999). “Trends in Job Instability and Wages for Young Adult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 (4): 65-90.

Kim, Shik Hyun(1996). *Human Resource Management*. Myok Publishers. pp.283-307.

Beaumont, P. B(1996).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in Europe.” In Dale Belman, et al.(eds.). *Public Sector Employment in a Time of Transition*. Madison: IRRA. pp.283-307.

Ruiz, Javier Astudillo(2002). “The Spanish Experiment: A Social Democratic Party-Union Relationship in a Competitive Union Context.” Center for European Studies, Working Papers No.83.

노동정책연구 목차 색인

- 2001년 7월호(창간호)~2017년 6월호(제17권 제2호) -

● 창간호(2001년 7월)

■ 특집

-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해(정진호)
-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 및 세부담 분석(성명재)
- 한국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이정우 · 이성림)

■ 연구논문

- 퇴직보험 활성화와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체계 개선방안(김호경)
-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조준모)
- 임금식과 생산성변수의 역할(허재준)

■ 노동전망

- 2001년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이주희)

■ 정책자료

-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ILO의 입장과 정책적 시사점(윤석명)
- 유럽연합의 2001년 고용가이드라인(문성혁)

● 제1권 제2호(2001년 12월)

■ 연구논문

- 직종특성과 성별 직종분리 : 미국 노동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황수경)

-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황덕순)
- 미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 파트타임과 풀타임(안주엽)
- 우리나라 노동제도 결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공공선택의 관점에서(조준모)
- 노동시장의 변화와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대응: 독일 경영조직법의 개정배경과 주요 개정내용(박지순)

■ 노동통계

- 상시인구조사(CPS)의 이해(강석훈)

■ 정책자료

-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황과 과제(장홍근)

● 제2권 제1호(2002년 3월)

■ 특집 : 노동시장과 교육

-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이병희)
- 청년의 학교졸업 후 구직기간 분석(안주엽 · 홍서연)
- 대학교육의 경제학(장수명)

■ 연구논문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도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김우영)
-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징과 지역정책(박영구)

- 공공직업안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 및 결정요인(유길상·임동진)
- 경영해고사유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조용만)

● 제2권 제2호(2002년 6월)

■ 특집

- 고령화사회와 노동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장지연·호정화)
-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이혜훈)
-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통계청의 신인구추계 결과를 중심으로(윤석명·박성민)
-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업종·직종에서의 연령분리현상(박경숙)
-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이정)

■ 연구논문

- 자연·공학계열 졸업여성의 직업력 분석(황수경)
-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Upward Mobility: The Case of Korea from 1962 to 2000(Park, Se-II)

■ 정책자료

- 인구의 고령화: 경제 현안과 도전받는 정책(안주엽·홍서연)

● 제2권 제3호(2002년 10월)

■ 특집

- 여성 성별 분리와 가치 차별에 대한 다층 분석(조혜선)
-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간의 성별 임금격차 차이의 요인 분해(전병유)

- 공기업의 여성고용 현황과 관련 정책의 분석(김영옥)

■ 연구논문

- 직업훈련 참가결정에 관한 연구(김주섭)

● 제2권 제4호(2002년 12월)

■ 연구논문

- 경제위기 전후 청년 일자리의 구조 변화(이병희)
- 비정규직 활용의 영향요인(김동배·김주일)
- Economic Crisis, Income Support, and Employment Generating Programs: Korea's Experience(Jai-Joon Hur)
- 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이승욱)

● 제3권 제1호(2003년 3월)

- 노동법의 규범력 위기(채호일)
- 특수형태근로 보호에 관한 범경제학적 소고: 보험설계인, 골프경기보조원 및 학습지교사에 관한 실증분석(김동배·김주일)
-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확률의 동태적 분석(김우영)
-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박경숙)
- 장애인-비장애인 취업확률 격차와 장애 효과(황수경)
- 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유길상)
- 고용안정사업의 효과: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중심으로(금재호)
- 고성과 작업관행과 기업교육훈련(김동배·김주섭·박의경)

● 제3권 제2호(2003년 6월)

■ 연구논문

- The Effect of Bargaining Structure Change on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Korea(Young-Myon Lee · In-Gang Na)
- 노사의 전략적 선택,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가, 경영성과간의 관계(이동명 · 김강식)
- 내부노동시장의 성격과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노용진 · 원인성)
-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이규용 · 김용현)

● 제3권 제3호(2003년 9월)

■ 연구논문

- 한국 실업급여제도의 변화 평가 : 관대성, 통제 개념을 중심으로(심창학)
-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요인(김유선)
- 내부자(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황수경)
-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실태와 개선방안(황덕순)
- 인사관리시스템의 선행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김동배 · 임상훈 · 김재구)

● 제3권 제4호(2003년 12월)

■ 연구논문

- 노동력 활용지표에 관한 소고 : 여성 유희인력 지표를 중심으로(황수경)
- 자격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이병희)
- 정보통신기술이 작업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양호한 노동(Decent Work)의 관점에서(황준욱 · 허재준)

- 고용조정의 결정요인 : 감원계획과 일자리 소멸을 중심으로(이규용 · 김용현)

● 제4권 제1호(2004년 3월)

- 일본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JPSC)의 소개(김기현)
- 2003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과 정책과제(이동명 · 김강식)
- 지역간 노동이동 연구(정인수)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법적 권한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이상민)

● 제4권 제2호(2004년 6월)

- Determinants of Intra-Regional Migration and Effects of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in East Asia(Yasushi Iguchi)
- Globalization, Logics of Acti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National Government Roles(Sarosh Kuruvilla · Anil Verma)
- Globalisation and Changing Patterns of Employment Relation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Frameworks(Greg J. Bamber · Russell D. Lansbury · Nick Wailes)
-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판례와 행정해석 분석 및 입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장의성)
- 자동차운수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개념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방안 모색의 기초(이상희 · 배규식 · 조준모)
-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황수경)

● 제4권 제3호(2004년 9월)

- Labor Relations and Protection of Labor

Rights under Globalization : Core Labor Standards in China(Chang Kai)

- The Changing Labor Market, Industrial Relations and Labor Policy(Tadashi Hanami)
- 고용촉진훈련의 성과에 관한 연구(남재량)
-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장의성)

● 제4권 제4호(2004년 12월)

■ 연구논문

-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이병희)
- 고용 유연화가 기업의 훈련투자에 미치는 영향(정재호 · 이병희)
-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작업조직 설계(이동명)
- Alternative Retirement Plans and the Salary Peak System in Korea(Semoon Chang)

■ 특별기고논문

- 노동조직 연구에서 젠더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키모토키미코(木本喜美子))

● 제5권 제1호(2005년 3월)

-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 자리를 중심으로(최옥금)
- 연결망 접근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의 가능성: 한국 노동운동의 연대주의적 전통의 복원(은수미)
- 고등교육에 대한 적정재정 추정(최강식 · 정진화)
- 산업재해와 보상적 임금(이승렬)
-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이수진)

-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문무기)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小考) (박은정)

● 제5권 제2호(2005년 6월)

■ 연구논문

-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김주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변금선)
- 일본 남녀고용평등정책의 현재(다케나카에미코)
-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보건의료노조의 사례(이주희)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미국 실업보험제도의 변화와 시사점(김소영)

● 제5권 제3호(2005년 9월)

- 경기변동과 일자리소멸: 생산성에 따른 선별을 중심으로(김혜원)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실인가 (김용현)
-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유길상)
-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이철수)
- Including Informal Sector Workers In Public Income Support Programs(허재준)

● 제5권 제4호(2005년 12월)

- 노사관계로드맵 쟁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실업자의 조합원 가입

을 중심으로(조준모 · 이원희 · 이동복)

-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박성재)
- 한국 기업의 퇴직연금제 선호에 관한 연구: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와 제도유형을 중심으로(반정호)
- 사업장내 전자우편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E-mail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이창범)

● 제6권 제1호(2006년 3월)

▣ 연구논문

- 비고용인구의 노동력상태 이행 역동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김가을)
-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성지미 · 안주엽)
-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호원 · 이종구 · 김두중)
- 성과배분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김동배 · 이인재 · 장지예)
- 노동조합의 전투성에 관한 연구(이병훈 · 윤정향)

● 제6권 제2호(2006년 6월)

- 한 · 중 · 일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 비교(조성재)
- 비정규노동의 나쁜 일자리에 관한 실증연구(이시균)
- 근로자 참여와 비정규직 고용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 연구(권순식)
- 사회협약 안정화 과정 비교 연구(임상훈)
- 자활후견기관들의 기관간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연구(김재환)
- 프랑스의 근로계약법제 변화(박제성)
- 조기채취업수당제도의 설계에 관한 연구(김동현 · 유길상)

● 제6권 제3호(2006년 9월)

- 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위험(이병희)
- 미국의 해고자유원칙과 그 제한의 법리(박은정)
- 노동조합이 기업의 유연화에 미친 영향 분석(이시균 · 김정우)
-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유규창 · 김향아)
- 한국과 중국 근로자들의 이중몰입 실증 연구(이을터 · 이장원)
-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해석 및 입법의 한계(이상희)
- Poverty, Altruism, and Economic Growth (Lee, Injae)

● 제6권 제4호(2006년 12월)

-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성지미)
-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김경희 · 반정호)
-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성차별 분석(신동균)
- 근로자 의사대표기제(Voice Mechanism)로서의 노동조합, 근로자참여에 대한 비교 연구: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률을 중심으로(권순식 · 박현미)
- 일본 노동조합 재정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최영진)
-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훈련(김우영)
- 고성과 지향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기술혁신: 노동자 태도의 매개효과(허찬영 · 이현도)

● 제7권 제1호(2007년 3월)

-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장

지연·양수경)

- 비정규직노조의 유형별 실태와 시사점 : 18개 비정규직노조 사례분석(진숙경·김동원)
- 한국 산별교섭에 대한 국제비교론적 평가 (조준모·이원희)
- 유럽에서 단체교섭 법제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문제(박제성)
- 사회적 배제 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 울산 동구 빈곤층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한상진·김용식)
- 기업에서의 승진 결정요인 변화 : MF 외 환위기 전후 한국 대기업 인사태이터에 대한 실증분석(엄동욱)
-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관한 검토(손향미)

● 제7권 제2호(2007년 6월)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조상균)
-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자총협회의 역할과 전략적 행동 : 법정근로시간 단축 협상을 중심으로, 1998~2003(전인)
- 한미 FTA와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운용 실태(문무기)
- 조직문화,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와의 관계 :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김진희)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 방안(김재훈)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중심으로 (윤조덕·한충현)
- 영국 노사관계의 변화 :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이상우·장영철)
- 근로자 내부고발보호제도 국제비교 : 영·미·일의 사례와 시사점(장화익)

● 제7권 제3호(2007년 9월)

- 한국의 지역노동시장 조정의 동학(김혜원)
-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 비교 : 2003년과 2005년(박기성·김용민)
- 「사업체패널조사」의 고용관련 여성차별과 그 결정요인(성지미)
-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 판례상 근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강성태)
-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의 영향요인과 효과 (김동배·이인재)
-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 :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박제성)
- 비교사례(영국, 아일랜드) 접근을 통한 새로운 사회협약(social pact) 성립의 제도 및 행위자 요인에 대한 연구(심상용)

● 제7권 제4호(2007년 12월)

-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남준우)
- 적립성 제고를 통한 연금제도 개혁(윤정열)
-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이승렬·최강식)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강병구)
-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합리성 가설과 비합리성 가설의 검증(김윤호)
-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Status among Salaried Workers in Korea(김진숙)
- 향만노동체제의 전환과 동학(백두주)
-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성격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박은정)
- 지역노동시장정보의 빈곤 극복을 위하여 : 구·시·군 소지역 고용통계를 중심으로 (심상완·정성기)

● 제8권 제1호(2008년 3월)

- 출산, 고용, 성장 간 상호연관성 연구 : 구조적 VAR모형을 중심으로(박추환 · 한진미)
- 서비스산업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동의 구조 분석(황수경)
- Is Good Beginning Half Done? : Measuring the impacts of non-regular initial employment on future employment prospects in Japan(Joon Young Kim)
- 전공불일치 결정요인과 전공불일치가 근속과 임금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임찬영)
-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강동욱)

● 제8권 제2호(2008년 6월)

-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김상호)
- Another Look at Affirmative Action : Voices of U.S. Beneficiaries(Haejin Kim)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투자에 관한 비교 연구(이병훈)
-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이준희)
-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과 한국에서의 가능성 : 이론 검토 및 선진국 비교연구를 중심으로(임상훈)
- 2000년대 독일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국가의 미시적 작동방식 변화(황규성)

● 제8권 제3호(2008년 9월)

- 패널 자료로 추정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성(강승복 · 신동균)
-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 국민노후보장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엄동욱)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지표의 문제점 : 졸업 직후의 취업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남기곤)
- 시장원리 확대와 개인사회서비스의 변화 : 영국의 사례(황덕순)
-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 : 영국 · 독일 · 덴마크 3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김형기)
- 원청의 노사관계 전략 : 제조업 사내하청을 중심으로(은수미)
- 공직사회의 노동자참여(EI)와 발언, 노조 몰입에 관한 실증연구(박재준)

● 제8권 제4호(2008년 12월)

- 근로생애사와 노동시장 성과(신동균)
- 연봉 차등폭이 보상수준 만족에 미치는 영향(김동배 · 김기태)
- 특수형태근로부문의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장기보조원의 소득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조선주 · 최윤영)
- 회생 · 파산절차개시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에 미치는 영향(양형우)
-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 도시 임금소득자 가구를 중심으로(이성균)
- 지역노동시장권(LLMAs)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상호)
-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선행요인 및 결과에 관한 연구(이민우 · 이영진 · 한재창)

● 제9권 제1호(2009년 3월)

-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전현

배 · 이인재)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익률에 대한 연구(서병선 · 임찬영)
-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전승훈 · 홍인기)
- 공공기관 인사관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동명)
-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조성혜)
- 국내 단체교섭구조 및 그 결정요인과 산업별 다양성: 국제비교적인 시각의 고찰(정주연)
- 경기변동과 임시일용직 고용(황선웅)

● 제9권 제2호(2009년 6월)

-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에 대한 연구(신동균)
-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박진희)
- 기업 내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노용진 · 채창균)
-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김재훈)
- 한국적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시도(김동원 · 이규용 · 권순식 · 김영두 · 진숙경 · 김윤호)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의 도전과 기회: 대기업 경제주의 노동조합의 의식조사 사례 중심(전 인)
- 복수노조 갈등: 이론과 현실(김태기)
-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少論)(박은정)

● 제9권 제3호(2009년 9월)

-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분석(조동훈)
-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연구(조선주)
-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종단면 연구(서인석 · 김우영)
- 고물입 인적자원관리가 종업원의 인사제도 내재화, 조직몰입 및 품질경영활동에 미치는 효과: 제조업종을 대상으로(김진희)
- 구직 강도의 선행요인과 구직 명료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용지원센터 이용 구직자를 대상으로(김 군)
- 복수노조하의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체사례 연구(노병직 · 이준우)
- 종업원참여제도와 주주이익보호제도가 노사협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이해관계자 관점을 중심으로(김동주)
-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이영면 · 김환일)

● 제9권 제4호(2009년 12월)

- 이자율 옵션모델(CIR)의 적용을 통한 산재보험의 적정 연금 · 일시금 수준의 평가(신종욱 · 마승렬)
- 도시의 산업 특성과 고용 성과(전병유)
- 작업장 혁신 담론에 대한 비판적 소고(최영섭)
-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이영면 · 이동진)
- 특수고용근로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향: 노동조합, 직무 자발성의 조절작

용 탐색(권순식)

-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연구: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조용만)
- 숙련개발제도와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 서구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이 선)
-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정진우)

● 제10권 제1호(2010년 3월)

-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향: 패널연구(하태정 · 문선웅)
-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 연봉제의 사례(김동배)
- 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김동현)
-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조건(유길상)
-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통합적 연구(심용보 · 이호창)
-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이승욱)
- 영국의 사업장 내 징계해고절차에 관한 연구(김근주)

● 제10권 제2호(2010년 6월)

- Test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Based on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Yanggyu Byun · Joo-Young Jeon)
- 경력개발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 교육훈련에 대한 보완 효과(강순희)
- R&D Investment,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Korea: Technological Progress

and Labor Market Equilibrium (Byung Woo Kim)

- 고용보험법의 현행 적정적립금 기준 평가와 대안 지표로서의 준비율 배수(허재준 · 김동현)
- 중고령자 은퇴 및 은퇴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손종철)
-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정병석)
-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and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Do They Make Workers Work Harder, Smarter, or Kinder?(Haejin Kim)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조상균)

● 제10권 제3호(2010년 9월)

-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전과정에서 영어의 역할(김진영 · 최형재)
-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안태현)
-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조동훈)
-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임금차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백학영 · 구인회)
- 기업특성과 가족친화제도 활용 용이성: 여성관리자의 육아휴직 및 본인병가제도 활용을 중심으로(민현주)

● 제10권 제4호(2010년 12월)

- 주성분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변양규)
-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유길상)
-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남재량 · 박기성)

- 경영진의 지원과 인사부서의 역량이 몰입형 인사제도와 조직성공에 미치는 효과(김진희)
-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KiWook Kwon · Dae Yong Jeong · JohngSeok Bae)
- 근로자대표기구의 전략적 참여와 참여적 작업조직활동 모색: 노사관계의 역할을 중심으로(김현동 · 이동진)
-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남녀차별적 지급기준(강선희)

● 제11권 제1호[2011년 3월]

- 팀내 임금격차가 심화되면 팀 성적이 향상되는가?: 한국프로야구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김정우 · 김기민)
- 성과주의 임금 도입의 영향요인: 한일 비교(김동배 · 김정환)
- 지역간 이주, 경제활동참가, 직업훈련의 동시 의사선택에 관한 실증분석(김주섭 · 정원일 · 전용일)
-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 분석(석상훈)
- 2000년대 중반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성과 분석: 2005년과 2007년을 중심으로(노용진)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손지아 · 박순미)
- 기대효용 접근법에 근거한 도시기구의 빈곤에 대한 취약성 분석(김계숙 · 민인식)

● 제11권 제2호[2011년 6월]

-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경영상 해고의 운용실태와 특징(하경효 · 박종희 · 강선희)

- 복수노조 시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 연구(장의성)
- 캐나다의 복수노조 사례: 노조 간 조직경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노용진)
-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새로운 평가 방안(정인수 · 지승현)
- 노동조합 전투성과 온건성: 조합원들의 사회 심리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권순식)
-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정장훈 · 조문석 · 장용석)

● 제11권 제3호[2011년 9월]

- 가족친화제도와 기업성과(김혜원)
-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남성일 · 전재식)
- 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경력 초기 자영업 선택의 장기효과(성지미)
-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 추정(조선주)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실질적 사용자의 판단: 부당해고의 구제를 중심으로(조성혜)
-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작업장 혁신에 미치는 영향: 업무개선 제안활동 활성화를 중심으로(김현동 · 신은중)
- 독일 근로자과건법의 개정과 시사점(김기선)

● 제11권 제4호[2011년 12월]

-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성희)
-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이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박재민 · 김영규 · 전재식)
-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이승렬)

- 공무원노조 리더의 리더십과 조합원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박재춘)
- 미국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삼권 보장 법리와 대안적 분쟁해결(ADR) 절차(강현주)

● 제12권 제1호[2012년 3월]

-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중심으로(김우영)
-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구: 임금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반정호)
- 다수준 접근을 통한 고물업 인적자원관리가 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규명(남정민 · 전병준)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조용만)
-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금제도 효과성 평가(박성재 · 김희순)
- 영국 산재보험의 형성과 노동정치의 역할에 관한 연구(유범상)

● 제12권 제2호[2012년 6월]

- 자동화기술과 작업조직(노용진)
- 기업의 자원봉사 지원정책의 효과(강철희 · 허수연 · 김영중)
-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김종성 · 이병훈 · 신재열)
- 성별 저임금근로의 위험과 임금격차(김은하 · 백학영)
- 연금개혁,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차, 그리고 저축(전승훈)
-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발전방안(유길상)

- 사업장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의 효과 분석(박원주 · 전용일)

● 제12권 제3호[2012년 9월]

-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조용만)
- 구인 · 구직조건에의 유연성을 고려한 잡매칭 함수의 개발(박성익 · 조장식 · 전현중 · 김종한 · 류장수)
- 저기술 중소기업의 혁신전략: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임운택)
- 몰입형 인사관행이 연구개발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김동배)
- 인사제도의 내재화, 직무몰입, 역할피로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진희)
-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혁신활동 간의 관계: 조직정체성의 매개효과(최영희 · 임상훈)
- 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 제도의 고용안정망 역할에 관한 고찰(이호근)

● 제12권 제4호[2012년 12월]

-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있어서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의 중요성(김현동 · 한용석)
-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참여율과 참여자 특성 변화(김동현 · 박혁)
- 훈련의 권리, 시장의 늪: 실업자훈련의 시장주의적 재편에 대한 소고(장홍근 · 주민규)
-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오정록)
-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타당

성과 정책방향 검토: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에 대한 판단사례를 중심으로(류문호)

● 제13권 제1호[2013년 3월]

- 자녀의 교육성가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영향: 형제·자매·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한 분석(양정승)
-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반정호·김경희)
- Legislative Challenges on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Cho)
- 한국과 영국의 최저임금기구 운영실태 비교연구(채준호·우상범)
- 수능성적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일반화 성향점수 접근법(최필선·민인식)
- 이탈리아 필수공익서비스제도에 대한 연구(신수정)

● 제13권 제2호[2013년 6월]

-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의 한 사례: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의 평가 및 과제를 중심으로(박태주)
-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권순식)
- 연령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정효채·석진홍·박우성)
-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비교 연구(서정희·오욱찬·박경하)
-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정(김정호)

-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두 가지 위반 형태를 중심으로(백경민·박기태)

● 제13권 제3호[2013년 9월]

- 경력관리시스템과 조직몰입: 고성과 인적자원관리의 조절효과(이수현·석진홍·박우성)
-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박태정)
-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상호구성: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김수현·이정아·정주연)
-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관한 연구(강순희)
- 대학재학 기간의 휴학경험과 직장생활(김현동)
- 최저임금법의 패러다임 탐색: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상 '공정성' 개념과 그 함의(강현주)
- 고용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 판단: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심재진)

● 제13권 제4호[2013년 12월]

-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세대별 일의 가치를 통해 본 의미 및 역할(이혜정·유규창)
- 일자리 재량의 인식과 만족도(성지미)
- 외국인인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보완탄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남성일)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해야 효과가 있는가?(김혜원)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박은정)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김기선)

● 제14권 제1호(2014년 3월)

-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 존성(최효미)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책 활성화 방안: 대한 탐색적 연구: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이영면 · 정선아)
-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직무순환제도의 보완적 효과를 중심으로(옥지호)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조건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유길상)
- 안전분위기 구성요소에 관한 실증적 연구(문기섭 · 장영철)
-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사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제를 중심으로(장우찬)

● 제14권 제2호(2014년 6월)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이원성(二元性): 단체교섭 당사자와 부당노동행위(지배 · 개입) 주체의 해석(류문호)
-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임상훈 · 박용철)
- 산재보험 장해연금 수급자 생명표 개발 연구(정홍주 · 전용범 · 이현복)
-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다양성과 조정성과

에 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 · 김동원)

● 제14권 제3호(2014년 9월)

- 고용의 질: 연령계층화와 구조적 지체에 대한 탐색(1983~2012)(유홍준 · 김기현 · 오병돈)
-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임금근로자 적용 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서정희 · 백승호)
- 인력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석진홍 · 박우성)
- 분사형 인사아웃소싱의 동향과 과제(양동훈)

● 제14권 제4호(2014년 12월)

- 자동화와 근로시간 관행(노용진)
-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정액제에서 정률제 급여제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윤자영 · 홍민기)
- 근로자참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주형 · 이영면 · 이윤상)

● 제15권 제1호(2015년 3월)

-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비정규 고용형태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서정희)
-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문지선)
-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의 희망임금 충족과 고용(박천수)
-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직종 파악을 위한 탐색적 연구(김동현)
- 멕시코 노동법의 제도적 특징과 작업장 노사관계 연구(김주희)
-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심재진)

● 제15권 제2호[2015년 6월]

-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강승복)
-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적 시사점(조성호·변수정)
- 파업발생 결정요인 패널분석(김정우·송민수)
-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에 미친 영향 분석(이용관)
-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분야에 대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서를 중심으로(이정원·정선욱)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 한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동: 그 결정요인(김혜진)
- 잡 크래프팅의 선행요인과 일 관련 결과에 대하여: 자발적 직무변화의 통합적 모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 현장관리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내재적 보상(김동배·김기태)
-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박은정)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의 변화(사명철)
- 수학에 대한 태도 및 수학실력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남녀 임금격차를 중심으로(임찬영)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고용보험을 중심으로(이병희)
- 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전인·오선

희·김승호·김기근)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간 경쟁도와 위탁 규모가 취업성공에 미치는 영향(김혜원)
- 외국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 분석(김혜진)
- 이주노동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남성일·전재식·김진웅)

● 제16권 제1호[2016년 3월]

-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 고성과자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연구(권기욱)
-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분석: 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강금봉)
- 저임금 상태의존성 분석(신우진)
-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와 간접고용 관계에 대한 함의: '브라우닝-페리스 사건' 결정(2015)을 중심으로(신은종)

● 제16권 제2호[2016년 6월]

- 차등적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상대적 임금수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옥지호)
- 의중-시장임금 갭이 대졸자 첫 취업까지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최기성)
- 직무분석을 활용한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고령화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김재원·유규창)
- 역할급의 이론적 검토와 시사점(박우성·이병하)

● 제16권 제3호[2016년 9월]

-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이유진·김의준)

-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근로자대표제도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관계를 중심으로(최준하 · 이영면)
- 감정노동과 노동법(박은정)
- 산재보험 이용여부가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 미복귀에 미치는 영향: 직업성 손상을 중심으로(박지은 · 권순만)

● 제16권 제4호[2016년 12월]

- 디지털화와 노동: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김기선)
- 일자리 질의 양극화 추이에 관한 실증분석(이병훈 · 신광영 · 송리라)
- 장시간 근로와 조직: 초과근로시간이 여성 관리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신희연 · 한보영)
- 중소기업의 저생산성과 인적자원개발정책(김태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조합의 도구적 역할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이영면 · 나인강 · 박재희)

● 제17권 제1호[2017년 3월]

-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양지연)
- 직무만족, 생활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 생활만족의 매개효과와 고용형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박재춘)
- 연령별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요인별 직무만족, 요인별 생활만족을 중심으로(김정은 · 강경주 · 이영면)
- 은퇴가 건강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김범수 · 최은영)
- 근로자 고령화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장윤섭 · 양준석)

● 제17권 제2호[2017년 6월]

- 중장년 취업자의 가구 및 일자리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박은선 · 김지범)
- 고령근로자의 삶의 만족: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성지영 · 남은영 · 홍두승)
- 이직으로 행복해지는가? KLIPS를 이용한 이직 전후 직무만족의 변화 분석(김진하 · 정재윤 · 박경원)
- 가구 노동시간 변화와 노동소득 불평등 연구(안서연)
- 장시간 근로 개선의 고용효과 추정(김남현 · 이해춘 · 김승택)
- 지역 간 임금격차에 대한 고찰: 수도권 · 비수도권을 중심으로(이종수)
- 해외직접투자와 노사관계 전략: 브라질 현대자동차의 협력적 노사관계 전략(김동원)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이기일 · 강을영)